

RR 2013-03

중장기 고등교육정책 방안 연구

연구책임자: 신현석(고려대)

RR 2013-03

중장기 고등교육정책 방안 연구

연구책임자 : 신현석(고려대)

공동연구원 : 반상진(전북대)

노명순(고려대 고등교육정책연구소)

주희정(한국직업능력개발원)

연구보조원 : 김주경(고려대 박사과정)

이 연구는 교육부의 중점연구소지원사업비에 의해 수행된 것입니다. 본 연구에서 제시된 정책대안이나 의견 등은 교육부의 공식의견이 아니라 본 연구소의 견해를 밝힙니다.

머 리 말

불과 몇 년 사이에 걸쳐 고등교육을 둘러싼 환경이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기술·산업·학문 간 창조적 결합을 통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하려는 요구가 급증하고 있고, 저출산 및 고령화에 따라 입학자원이 감소하고 있는 동시에 평생학습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며, 글로벌화가 심화됨에 따라 고등교육 국제화가 빠르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IMD)이 발표하는 국가경쟁력 평가에서, 우리나라 대학교육의 질적 수준과 사회요구 부합도는 국가 전체의 경쟁력에 걸맞지 않게 매우 낮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나라 고등교육 체제가 사회 변화의 메가트렌드에 부합하는 체제로 이행하지 못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연구소에서는 우리나라 고등교육의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 방안을 마련하고, 미래지향적 고등교육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정책적 제언을 제시하기 위하여 여러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본 연구 또한 이의 연장선상에서 수행되었으며, 고등교육의 10년 대계의 초석을 수립하기 위한 정책비전, 정책 목표, 추진전략 그리고 정책방안별로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10대 주요 과제를 도출, 제시하였습니다. 미래 고등교육 환경에 대한 예측과 분석은 향후 우리나라 고등교육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설정하는 데 의미 있는 토대가 되어줄 것이며, 단기-중기-장기 등 단계별로 제시한 정책 과제는 국가적 차원에서 고등교육 정책을 수립하고 실시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끝으로, 이 연구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주신 교육부, 한국연구재단, 그리고 각 대학 관계자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연구를 성실히 수행해준 연구진의 노고에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2013년 8월

고등교육정책연구소

소장 

연구 요약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고등교육체제의 원활한 작동은 지식기반사회 국가경제발전의 필수 조건임. 고등교육의 중요성을 간파한 세계 주요국에서는 대학교육 개혁을 위한 장기적인 계획을 중요하게 논의하여 왔음(채재은 외, 2009).
- 우리나라에서도 2010년을 전후로 고등교육의 장기비전 및 발전방안 연구를 통해 고등교육 개혁을 위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어 왔으나, 정책적 관점을 소홀히 하고 있으며 중기적 정책방안의 설계가 부재하다는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음.
- 이에 본 연구는 고등교육정책에 초점을 맞추어 고등교육 환경변화에 따른 장기적인 방안 수립 뿐 아니라 차기 정부에서 중점을 두고 수행해야 할 중기적 과제들을 사전에 발굴하여 새 정부 수립에 따른 정책의 공백을 최소화하고자 하였음.

2. 연구 내용 및 방법

-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 연구는 아래와 같이 각 절차에 따라 연구 내용과 연구방법을 선정하여 연구를 수행하였음.
- 첫째, 미래 고등교육의 변화상을 분석하였음. 선행연구 분석, 미래 자료 분석, 통계 자료 분석 등을 통하여 인구동태 변화, 지식기반사회의 심화, 글로벌화, 과학 기술 및 정보통신기술(ICT: Information & Communication Technology) 변화, 노동시장 변화 전망 등 고등교육을 둘러싼 다양한 변화양상을 포착하였음.
- 둘째, 고등교육정책의 현황을 분석하였음. 정부 및 언론 자료의 검토를 통하

여 대통령 후보들의 공약을 분석한 동시에, 현재 추진 중인 고등교육 정책을 ‘영역 - 방안 - 과제’ 별로 분류하였음.

- 셋째, 차기 정부 10대 과제 도출을 위한 전문가 조사지를 개발하였음. 앞 단계에서 분류된 고등교육 정책 과제별로 고등교육 정책의 공과(功過), 중요도, 향후 필요도 등으로 내용을 구성하여 전문가협의회 대상자에 Pilot Test를 실시하였음.
- 넷째, 중기 고등교육정책 10대 과제를 도출하였음. 내부 연구진 회의에서 개발한 전문가 조사지로 서면 조사를 실시하여 전문가 조사에서 응답한 정책 과제의 필요성, 시급성 등에 따라 분류 분석을 실시하였음. 이를 통해 차기 정부 고등교육정책 10대 과제를 도출하였음.
- 다섯째, 장기 고등교육정책 10대 방안을 도출하였음. 미래 고등교육정책의 변화에 관한 선행 문헌 고찰을 바탕으로 관계 전문가와의 면담 등을 통해 장기적인 고등교육정책 방안을 도출하였음.

3. 중기 고등교육정책 10대 과제

- 첫째, 고등교육의 교육력을 강화해야 함. 이를 위해서는 ①학부교육 내실화를 통한 대학 교육력 강화, ②직업교육 강화를 통한 대학생 직무역량 제고, ③대학원교육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연구교육 활성화, ④교육프로그램 운영 유연화, ⑤학습환경 및 생활환경 개선 등 이상 다섯 가지의 세부 정책과제들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둘째, 연구경쟁력을 제고하고 연구중심대학을 육성해야 함. 이를 위해서는 ①대학원의 학문연구 경쟁력 강화, ②글로벌 수준의 연구중심대학 육성을 위한 재정지원 사업 재구조화, ③미래 유망분야의 창의인재 양성 및 선제적 투자 강화, ④안전한 연구환경 조성 및 연구비 지원 확대 등 이상 네 가지의 세부 정책과제들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셋째, 대학입학제도를 개선해야 함. 이를 위해서는 ①학생 맞춤형 대입제도

도입, ②현행 입학사정관제 개선, ③대입전형 간소화 등 이상 세 가지의 세부 정책과제들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넷째, 대학등록금 책정 및 지원 제도를 개선해야 함. 이를 위해서는 ①대학 등록금의 하향 적정화 유도 및 정부 지원 확대, ②효율적 재정지원 체제 구축, ③대학 기부금의 활성화를 위한 방안 마련 등 이상 세 가지의 세부 정책과제들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다섯째, 대학 특성화를 통하여 경쟁력을 강화해야 함. 이를 위해서는 ①대학 특성화의 방향 재설정, ②국공립대학의 구조개혁 추진, ③산학협력을 통한 고등교육의 사회적 적합성 제고, ④전문대 교육 특성화 등 이상 네 가지의 세부 정책과제들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여섯째, 고등교육의 질 보증 체제를 구축해야 함. 이를 위해서는 ①수요자 관점에서 대학교육의 질 관리, ②대학교육의 질 보장을 위한 관리 수행 주체 설립, ③대학의 질 관리 노력 정도와 정부 지원 사업의 연계 강화 등 이상 세 가지의 세부 정책과제들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일곱째, 지역발전을 위한 지역대학을 육성해야 함. 이를 위해서는 ①지역 수요 기반 맞춤형 산학협력의 활성화 촉진, ②지역 기업-대학 순환형 교육체제 구축 및 인력 수급 안정화, ③지역 교육·문화 창달을 위한 지역 네트워크 허브 구축 등 이상 세 가지의 세부 정책과제들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여덟째, 고등교육 재정을 안정적으로 확보해야 함. 이를 위해서는 ①고등교육 재정교부금법 도입, ②대학재정 자원을 다각화하여 지원, ③대학 재정운영 효율화 및 전문성 강화 등 이상 세 가지의 세부 정책과제들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아홉째, 고등교육 국제화를 통하여 국제경쟁력을 제고하여야 함. 이를 위해서는 ①외국인 유학생 및 학자 유치에 위한 지원 서비스 강화, ②대학의 국제화 추진을 위한 질 제고 및 관리 체제의 구축, ③글로벌 네트워크 활성화 및 교육협력사업 효과성 증진 등 이상 세 가지의 세부 정책과제들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열째, 평생학습 시스템을 구축해야 함. 이를 위해서는 ①일과 학습이 병행 가능한 학위과정 및 학사 시스템 구축, ②성인학습자의 학비 지원 및 세제 감면 혜택 제공, ③평생학습 중심대학 확대 및 성인학습 지원 강화 등 이상 세 가지의 세부 정책과제를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음.

4. 장기 고등교육정책 10대 방안

- ① 지속적인 구조조정의 추진
 - 학령 인구 감소 대응 및 부실대학 퇴출을 통한 대학교육의 질 강화
- ② 지식발전소로서의 대학기능 강화
 - 지식 생산 및 교육의 핵심 요체로서의 역할 강화
- ③ 대학 기능과 역할의 적절한 분화 및 대학의 브랜드화
 - 대학 간 차별을 통한 대학의 특성 강조
- ④ 시장기제에 의한 대학평가 방식의 정착
 - 수요자 중심의 대학 평가를 통한 대학의 경쟁력 제고
- ⑤ 융합교육 및 스마트 교육체제의 구축
 - 창조경제를 위한 융복합 학과 운영 및 스마트 교육 환경 지원
- ⑥ 역량중심의 대학교육 정착
 - 대학의 부가가치(value-added) 역량 강화 및 대학생의 역량 증대
- ⑦ 취업-학습-복지가 통합된 고등교육 체제 구축
 - 평생교육 기능을 강화하여 성인 학습자의 전문성 신장
- ⑧ 글로벌 수준(global standard)에 부응하는 대학 운영 체제 구축
 - 세계적 수준의 대학 육성 및 국제화 지원 체제의 마련
- ⑨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고등기회 보장
 - 고등교육의 접근성 확대 및 교육 형평성 제고를 위한 재정 지원
- ⑩ 친환경 체제의 구축으로 환경위기 극복을 위한 체제 정비
 - 친환경 교육시스템 및 환경 구축

5. 결론 및 시사점

- 본 연구는 상기한 바와 같이 고등교육의 중장기 체계의 초석을 수립하기 위한 중기 고등교육정책 10대 과제와 장기 고등교육정책 10대 방안을 선행 연구의 고찰, 전문가 면접 및 자문을 통해 도출, 제시하였음.
- 이상의 논의를 종합할 때, 정부는 미래지향적 관점을 가지고 단기, 중기, 장기별로 체계적인 고등교육 계획을 수립하여야 할 것임. 이 때, 대학 및 고등교육참여자(stakeholders)가 공감하고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정책지원과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함. 정책 추진을 위하여 이에 소요되는 재정자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것 또한 정부의 중요한 과제임.
- 정부와 함께, 대학 또한 고등교육 체제 변화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미래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려는 노력이 필요함. 각자의 특성화 분야를 설정하고 선택과 집중을 통하여 대학의 고유 브랜드화를 추진하려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며, 빠른 외부 환경의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대학 내부의 시스템을 정비하는 것 또한 필요할 것임.

목 차

I. 서론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2. 연구내용	2
3. 연구방법 및 절차	3
II. 중단기 고등교육 환경 분석	5
1. 향후 5년(2013-2017)의 고등교육 환경 예측 분석	5
2. 연구보고서의 아젠다 분석을 통해 본 시기별 고등교육 변화 동향	14
3. 중단기 고등교육정책에 대한 전문가 의견조사	28
III. 중기 고등교육정책 10대 과제	34
1. 고등교육정책의 기본 방향	34
2. 중기 고등교육정책 10대 과제	37
IV. 장기 고등교육정책 10대 방안	98
1. 미래 고등교육 환경의 메가트렌드 분석	98
2. 미래 고등교육 변화 관련 연구 보고서의 아젠다 분석	110
3. 장기 고등교육정책 10대 방안	127
V. 요약 및 제언	137
1. 요약	137
2. 제언	141

참고문헌.....	146
부록1.....	148
부록2.....	152

표 목 차

<표 I-1> 연구방법 및 절차.....	3
<표 II-1> 2020년 노동시장 인력수급전망.....	8
<표 II-2> 고등교육기관 졸업자의 취업률 및 진학률(2011)	9
<표 II-3> 대학원 유형별 재적 학생 수 변화 추세(1965-2010).....	11
<표 II-4> 국외 한국인/국내 외국인 유학생(대학) 현황.....	13
<표 II-5> 선행연구 아젠다 정리.....	24
<표 III-1> 고등교육정책의 기본 방향.....	36
<표 III-2> 고등교육정책 정책 과제별 세부 과제.....	37
<표 III-3> 대학교육역량강화사업 선정 대학.....	39
<표 III-4> 대학원 재정지원 재편 방향.....	50
<표 III-5> 고등교육법 개정 법안 내용	58
<표 III-6> ICL 유형 구분.....	63
<표 III-7> 대학특성화 방향과 추진.....	67
<표 III-8> 국공립대학 구조개혁 계획.....	69
<표 III-9> 글로벌 허브 육성 지원 사업(Global Hub College).....	73
<표 III-10> 일과 학습 병행구조 정착 계획.....	73
<표 III-11> 대학정보공시제 도입 현황	75
<표 III-12> 역대 정부별 지방대학 육성 정책.....	80
<표 III-13> 산학협력선도대학육성사업	81
<표 IV-1> 미래고등교육 전망 선행연구별 정책 아젠다.....	125

그림 목 차

[그림 II-1] 연령계층별 학령인구, 2010-2060.....	6
[그림 II-2] 대학입학자원, 대학입학정원과 충원을 추정.....	7
[그림 II-3] 지역별 충원을 추정.....	7
[그림 II-4] 고등교육기관 졸업자의 취업률 및 진학률(2011).....	9
[그림 II-5] 대학원 진학자 수.....	10
[그림 II-6] 일반대학원 석박사과정 재학자 수.....	11
[그림 III-1] 정부 R&D 투자 및 개인기초연구비 수준.....	48
[그림 III-2] 대학 유형별 · 특성별 재정지원 사업 방향.....	68
[그림 IV-1] 대학입학정원과 18세 인구추이.....	100
[그림 IV-2] OECD 미래 고등교육 시나리오.....	122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고등교육체제의 원활한 작동은 지식기반사회 국가경제발전의 필수 조건임. 고등교육의 중요성을 간파한 세계 주요국에서는 대학교육 개혁을 위한 장기적인 계획을 중요하게 논의하여 왔음(채재은 외, 2009).
- 우리나라에서도 2010년을 전후로 고등교육의 장기비전 및 발전방안 연구(채재은 외, 2009; 박재운 외, 2010; 김창환 외, 2011; 유현숙 외, 2011; 배상훈 외, 2011; 신현석 외, 2012)를 통해 고등교육 개혁을 위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어 왔음.
 - 이처럼 이 시기에 고등교육의 미래 발전방안 연구들이 집중된 이유는 2010년이 매 10년을 단위로 또 다른 10년을 기약하는 새로운 출발점인 동시에 급변하는 고등교육 환경과 국제적인 변화 동향에 대응하기 위한 미래의 청사진이 필요했기 때문임. 그러나 이러한 변화에 부응하는 연구들은 비교적 장기적인 예측을 바탕으로 메가트렌드를 제시하고 고등교육의 비전과 전략 그리고 추진과제들을 열거하고 있음.
- 저출산·고령화와 맞물려 학령인구 감소, ICT 기술의 발달, 국제화·세계화가 진행되고 있음. 이러한 미래 사회의 변화에 대비한 경쟁력 있는 고등교육 체제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대학 정책의 방향 정립과 함께 중·장기 발전방안이 제시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
 - 2012년 이후 학령인구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통계청, 2006).
 - 정보화 및 ICT 기술 발달에 따라 대학교육의 기능과 역할의 변화가 요구됨.
 - 국제화·세계화 및 다문화 사회 진입에 따라 대학의 구성원의 변화가 예상됨.
- 그러나 미래 고등교육 변화를 전망하고 예측한 선행연구들이 간파한 부분은

정책적 관점에 소홀하였으며 중기적 정책방안의 설계가 부재하다는 것임.
현재의 당면 과제를 해결하지 못하고서는 장기적인 개혁은 탁상공론으로 그칠 공산이 큰 것으로 보임.

- 지난 20여 년간 고등교육은 양적으로 폭발적인 팽창을 경험하였으나, 많은 과제에 당면하고 있음. 그러므로 미래의 지속가능한 고등교육체제 구축을 위해서는 현 시점에서 지속·유지, 변화·중단되어야 할 사안을 점검하고 재정비하여 나아갈 필요가 있음.
 - 국가차원의 고등교육 발전/개편 방향이 정립되어 있지 않음.
- 고등교육의 양적 팽창, 투자 확대에 걸맞은 산업계·노동시장의 수요 대응력이 미흡함.
 - 교육·연구의 질적 수월성 및 사회·경제발전과의 연계가 미흡함.
 - 재원 부족 및 한정된 재원 투자 효율성 미흡 등의 문제에 대한 숙고가 필요함.
- 특히, 곧 새로운 대통령이 선출되므로 향후 5년간 고등교육정책의 방향을 설정하고 어떤 시급한 방안을 포함할 것인지 밝히는 것은 새 정부가 고등교육정책의 추진방안을 기획하는 데 많은 시사점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이에 본 연구는 고등교육정책에 초점을 맞추어 고등교육 환경변화에 따른 장기적인 방안 수립 뿐 아니라 차기 정부에서 중점을 두고 수행해야 할 중기적 과제들을 사전에 발굴하여 새 정부 수립에 따른 정책의 공백을 최소화하고자 함.

2. 연구내용

- 대선 후보들의 고등교육정책 공약을 포함하여 중단기적 고등교육 환경 분석
- 차기 정부에서 추진할 고등교육정책 10대 과제 도출을 위한 전문가 조사

- 차기 정부에서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10대 고등교육정책 과제 도출
- 미래적 관점에서 변화하는 고등교육 환경의 메가트렌드 파악
- 향후 장기적으로 고등교육정책이 지향해야 할 10대 방안 도출

3. 연구방법 및 절차

<표 1-1> 연구방법 및 절차

순서	절차	연구내용	연구방법
1	미래 고등교육 변화 분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구동태변화 · 지식기반사회의 심화 · 글로벌화 · 과학 기술 및 ICT 변화 · 노동시장 변화 전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행연구 분석 · 미래 자료 분석 · 통계 자료 분석
2	고등교육정책 현황 분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재 추진 중인 고등교육 정책을 영역-방안-과제별로 분류 · 대통령 후보 공약 분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부 및 언론 자료 분석
3	차기정부 10대 과제 도출을 위한 전문가 조사지 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에서 분류된 고등교육 정책 과제별로 고등교육정책의 공과 분석, 중요도, 향후 필요 정도 등으로 내용 구성 · 반구조화된 개방형 질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부 연구진 회의에서 개발 · 전문가협의회 대상자에 Pilot Test
4	차기정부의 정책 비전, 방향 및 전략 모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래 변화 예측 및 대응 전략 · 정책 비전, 방향, 목표 도출 · 10대 과제 도출을 위한 면담 · 피드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문가협의회
5	중기 정책 과제 도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문가 조사에서 응답한 정책 과제의 필요성, 시급성 등에 따라 분류 분석 · 차기 정부 10대 과제 도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진이 개발한 전문가 조사지로 서면 조사 실시(30명의 전문가, 산업계, 언론계, 시민사회 관계자 대상) · 내부 연구진 회의

6	장기 정책 방안 도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행 연구보고서 및 각종 자료 분석을 바탕으로 장기적으로 정부가 추진할 고등교육정책 10대 방안을 도출하고 이에 대해 전문가토론회를 통해 수정·보완 · 차기 정부 10대 과제 도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행연구 분석 · 미래 자료 분석 · 통계 자료 분석 · 전문가토론회
---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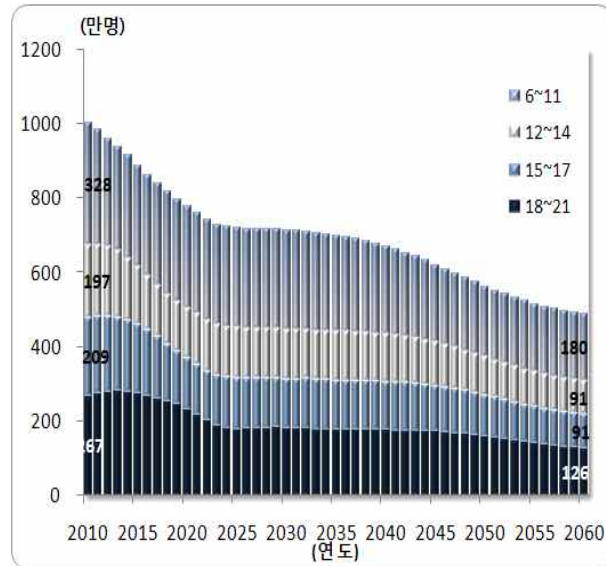
Ⅱ. 중장기 고등교육 환경 분석

1. 향후 5년(2013-2017)의 고등교육 환경 예측 분석

가. 저출산과 고등교육 입학자원의 감소

1) 대학의 진학 학령인구의 변화

- UN 미래보고서는 인구감소가 시작되는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대부분의 선진국들이 저출산, 고령화 시대에 본격적으로 진입하여 생산인구 감소에 따른 경제 침체, 사회구조의 변화가 나타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특히, 한국 정부에 대해서는 정부 정책이나 대안을 2015년 위기에 대한 대응체제로 전환하여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음(박영숙·글렌·고든, 2012).
- 저출산의 여파로 초등학생 수가 10년째 감소세를 보이며 1980년대의 절반 수준에 불과함. 고등학생 역시 매년 줄어드는 경향을 보이며 전년도 보다 약 1천 명 가량 줄어들어 총 5만 1,943명임(한국교육개발원, 2012).
- 통계청의 장래 인구 추계 결과 0-14세 유소년 인구는 1972년 1,386만 명(인구의 41.4%)을 정점으로 급감, 2010년 현재 798만 명(16.1%), 2030년 2060년 447만 명(10.2%)까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통계청, 2011).
 - 대학 등록 대상 연령 인구(18~21세)는 2010년 267만 명에서 인구가 많은 1995년생 전후 코호트가 진입하는 280만 명까지 소폭 증가하다가, 2025년 178만 명까지 급감, 이후 감소 추세가 완만해질 전망이다.
 - 대학진학 대상 18세 인구는 2006년 61만 명에서 2011년 70만 명까지 증가한 후 급감하여 2020년 50만 명 수준에 머물 것으로 예측됨.
- 학령인구는 대학의 입학 자원 규모를 전망하는 기초 자료로 학령인구의 감소는 대학의 학생자원 미충원율로 이어질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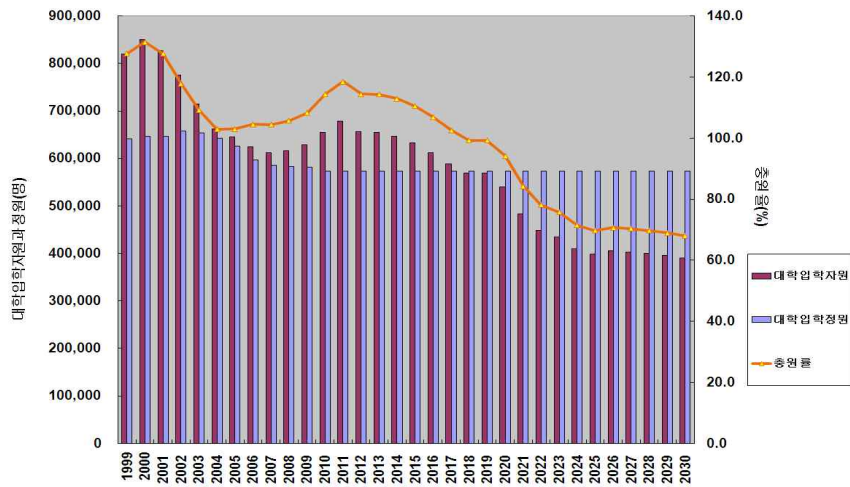


[그림 II-1] 연령계층별 학령인구, 2010~2060

자료: 통계청(2011). 장래인구 추계 2010~2060. <http://kostat.g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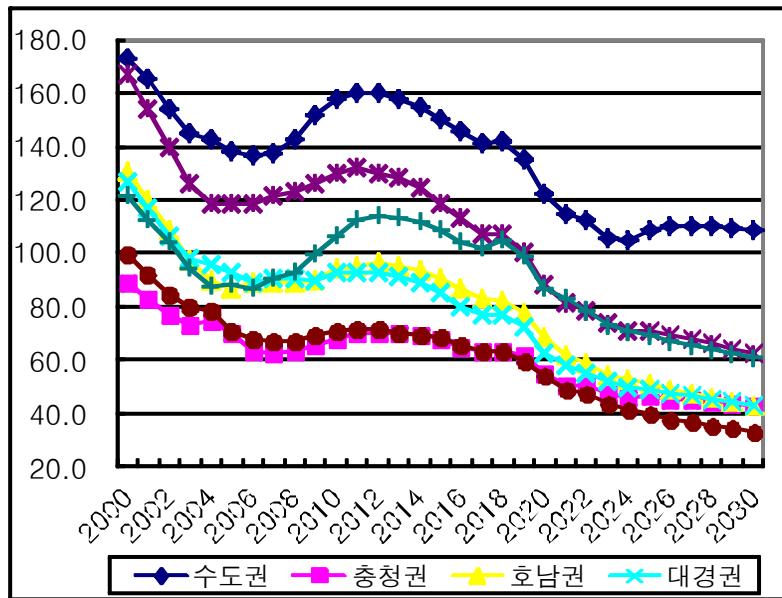
2) 대학의 정원 충원율

- 저출산 학령인구의 감소는 대학의 정원 충원에 어려움을 안겨 줄 것으로 예상된다.
- 대학 입학자원 규모를 18세 학령인구의 95%가 진학한다는 가정 하에 대학 충원율을 추정한 결과, 2018년 이후 부족 규모가 기하급수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됨(백성준 외, 2011, p. 83).
- 향후 5년간 대학입학자원의 감소로 인하여 지역대학의 미충원율이 심화될 것으로 예측됨. 전문대학 및 4년제 대학의 입학정원이 2010년과 동일하다는 가정 하에 지역별로 대학 충원율을 추정하면 동남권과 대경권이 타 지역에 비해 양호함. 반면 강원권의 충원율은 급격히 낮아질 것으로 전망됨(백성준 외, 2011, p.93).



[그림 II-2] 대학입학자원, 대학입학정원과 충원을 추정

자료: 백성준 외(2011). p.83



[그림 II-3] 지역별 충원을 추정

자료: 백성준 외(2011). p.93

나. 경기 침체와 대졸자 노동시장의 변화

- 향후 10년간 청년구직자의 취업난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어 대학 구조조정은 불가피 할 것으로 보임(고용노동부, 2012).
 - 2020년 경제활동 인구는 약 239만 명으로 증가, 저출산·고령화의 진행에 따라 청년층(15~29세)과 핵심 노동인력(30~50세)은 감소하고, 고령층(55세 이상)은 증가할 전망이다.
 -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신규 인력 학력별로 보면, 2020년까지 고졸은 32만 명이 부족할 것으로 전망됨. 그러나 전문대졸은 21만 9800명, 2년제 대졸자는 26만 5900명, 대학원 졸업자는 1만 5900명, 즉 전문대졸 이상 50만 1600명이 초과 공급될 것으로 전망됨.

<표 II-1> 2020년 노동시장 인력수급전망

(단위: 천 명)

학력수준	공급	수요
고졸	671	991
전문대졸	1,454	1,234
4년제대졸	2,230	2,064
대학원졸	880	865
전체	5,335	5,153

- 산업별 인력수요 측면에서 2020년까지 산업별 취업자는 농림어업(▽40.9만 명)과 제조업(▽14만 명)에서 감소하고 서비스업에서는 크게 증가(▲284만 명)할 것으로 전망됨(고용노동부, 2012).
 - 직업별 인력수요 전망에 따르면 1차 산업과 제조업 분야의 수요는 감소할 것으로 예측되나, 환경, 금융, 연구개발, 예술, 사회복지 등 서비스업의 인력 수요는 증가할 것으로 예측됨(백성준 외, 2011, p. 123).

<표 11-2> 고등교육기관 졸업자의 취업률 및 진학률(2011)

(단위 : 명)

구분	졸업자수		취업자수		취업률 (%)		진학률 (%)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여성
계	281,090	277,910	154,237	137,791	62.2	55.1	7.1	5.7
전문대학	81,709	106,507	45,571	60,018	61.0	60.4	3.9	3.4
교육대학	1,733	3,841	866	2,122	53.2	56.0	2.8	0.7
대학	152,638	141,329	77,786	62,418	58.7	50.0	9.2	7.5
산업대학	13,848	7,491	8,735	4,113	68.0	60.1	3.7	3.2
각종학교	365	495	103	137	40.7	35.1	9.6	5.7
일반대학원	25,333	17,382	16,848	8,312	80.6	59.4	8.3	7.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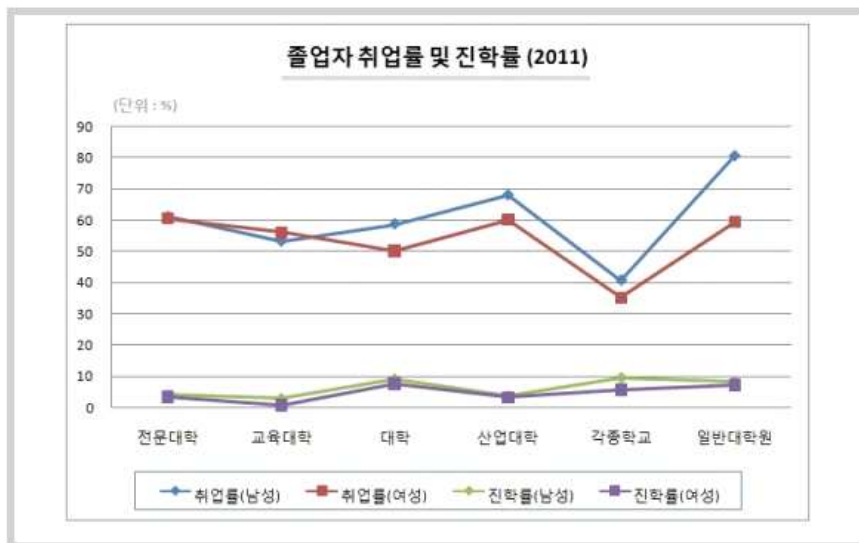
주: 1) 졸업자: 전년도8월졸업자및당해년도2월졸업자

2) 취업률 = 취업자/{졸업자-(입대자+진학자+취업불가능자+외국인유학생+제외인정자)}×100

3) 진학률 = 진학자/{졸업자}×100

4) 대학은 산업대학, 교육대학, 원격대학, 기술대학, 각종학교를 제외한 4년제 일반대학을 말함.

자료: 한국교육개발원(2011), 고등교육기관졸업자취업통계DB.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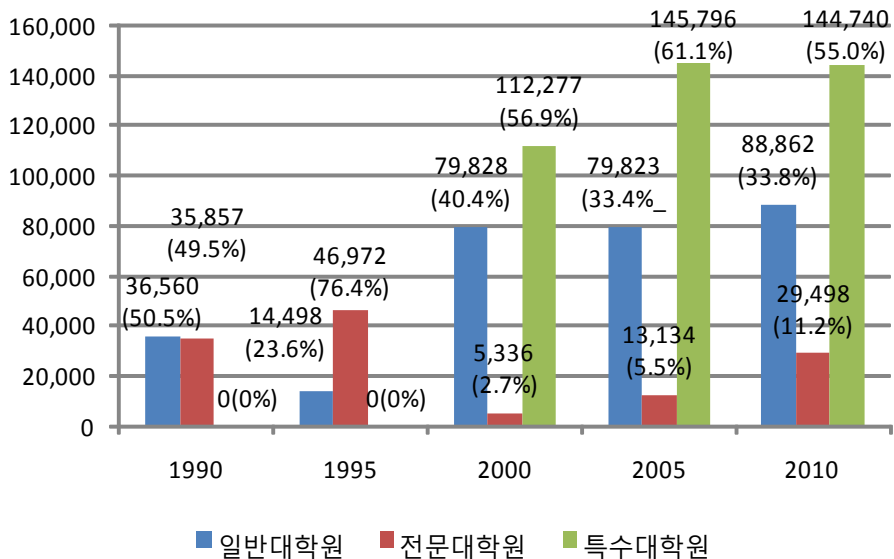


[그림 11-4] 고등교육기관 졸업자의 취업률 및 진학률(20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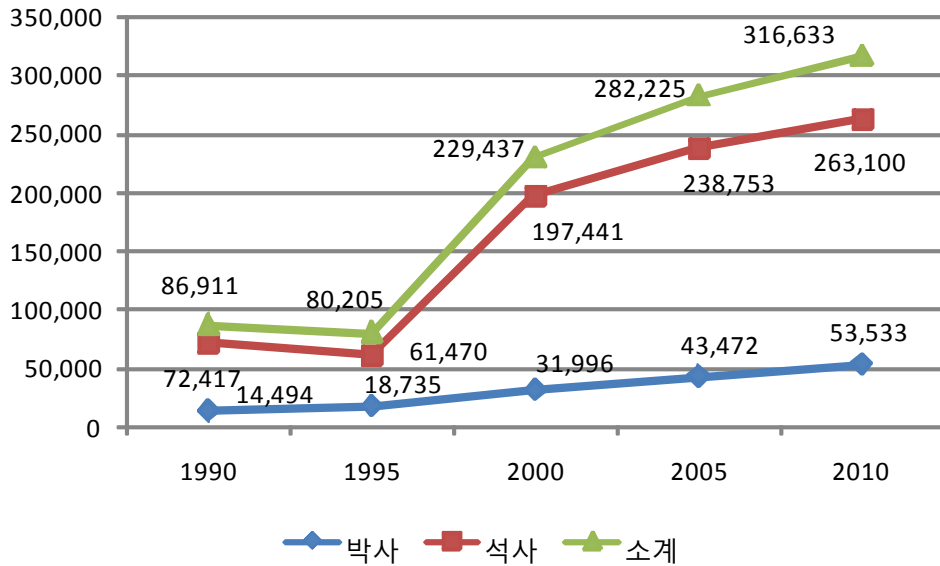
다. 평생학습사회와 고학력화

1) 대학원 진학자 수 증가

- 석·박사 과정에 등록하는 학생 수가 1990년대 이후 꾸준히 증가하여 왔음.
대학 졸업 이후에도 대학원에서 학업을 계속하는 인구가 증가되고 있음.
- 석사과정의 경우, 특수대학원 및 전문대학원의 재학생 수가 증가 추세이며
박사과정의 경우, 전문대학원의 재학생 수가 2000년대 크게 증가하고 있음.
- 이는 고도 지식산업사회에서 직업 관련 재교육의 필요성이 증대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됨.
- 일반대학원의 박사과정 재학생 수는 2000년 이후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석사과정의 재학생 수 또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음.



[그림 II-5] 대학원 진학자 수



[그림 II-6] 일반대학원 석박사과정 재학자 수

<표 II-3> 대학원 유형별 재적 학생 수 변화 추세(1965-2010)

연도	학위	일반대학원	전문대학원	특수대학원	합계
1965	박사	244(100.0)	0(0.0)	0(0.0)	244(100)
	석사	3,598(100.0)	0(0.0)	0(0.0)	3,598(100)
	소계	3,842(100.0)	0(0.0)	0(0.0)	3,842(100)
1970	박사	518(100.0)	0(0.0)	0(0.0)	518(100)
	석사	6,122(100.0)	0(0.0)	0(0.0)	6,122(100)
	소계	6,640(100.0)	0(0.0)	0(0.0)	6,640(100)
1975	박사	1,591(100.0)	0(0.0)	0(0.0)	1,591(100)
	석사	12,351(100.0)	0(0.0)	0(0.0)	12,351(100)
	소계	13,942(100.0)	0(0.0)	0(0.0)	13,942(100)
1980	박사	4,027(100.0)	0(0.0)	0(0.0)	4,027(100)
	석사	16,897(57.7)	12,388(42.3)	0(0.0)	29,285(100)
	소계	20,924(62.8)	12,388(37.2)	0(0.0)	33,312(100)
1985	박사	11,072(100.0)	0(0.0)	0(0.0)	11,072(100)
	석사	30,664(52.4)	27,801(47.6)	0(0.0)	58,465(100)
	소계	41,736(60.0)	27,801(40.0)	0(0.0)	69,537(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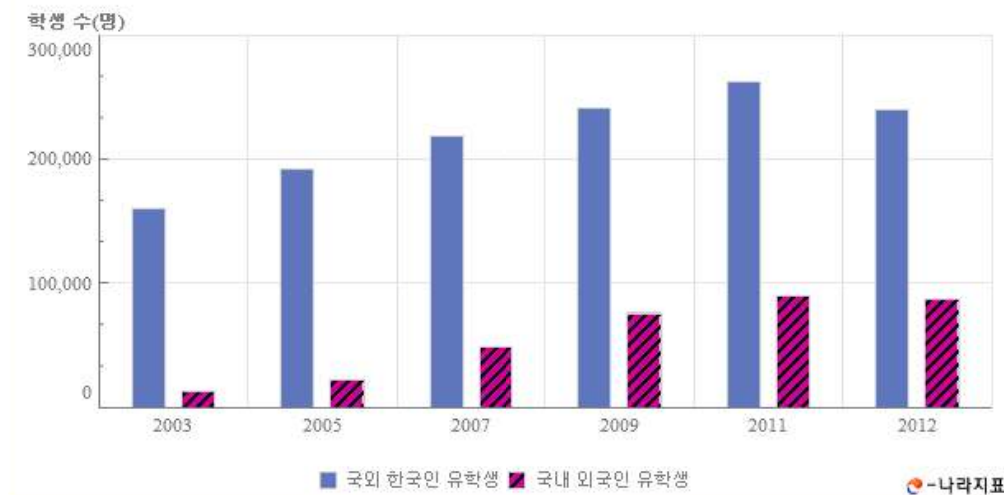
1990	박사	14,494(100.0)	0(0.0)	0(0.0)	14,494(100)
	석사	36,560(50.5)	35,857(49.5)	0(0.0)	72,417(100)
	소계	51,054(58.7)	35,857(41.3)	0(0.0)	86,911(100)
1995	박사	18,735(100.0)	0(0.0)	0(0.0)	18,735(100)
	석사	14,498(23.6)	46,972(76.4)	0(0.0)	61,470(100)
	소계	33,233(41.4)	46,972(58.6)	0(0.0)	80,205(100)
2000	박사	31,714(99.1)	282(0.9)	0(0.0)	31,996(100)
	석사	79,828(40.4)	5,336(2.7)	112,277(56.9)	197,441(100)
	소계	111,542(48.6)	5,618(2.4)	112,277(48.9)	229,437(100)
2005	박사	40,778(93.8)	2,694(6.2)	0(0.0)	43,472(100)
	석사	79,823(33.4)	13,134(5.5)	145,796(61.1)	238,753(100)
	소계	120,601(42.7)	15,828(5.6)	145,796(51.7)	282,225(100)
2010	박사	48,670(90.9)	4,863(9.1)	0(0.0)	53,533(100)
	석사	88,862(33.8)	29,498(11.2)	144,740(55.0)	263,100(100)
	소계	137,532(43.4)	34,361(10.9)	144,740(45.7)	316,633(100)

라. 국제화에 따른 학생 구성의 변화

○ 2012년 국내 외국인 유학생 수(대학)는 86,878명으로 2011년(89,537명) 대비 3.0% 감소함.

- 중국 등 개도국의 고등교육 수요 증대와 한류 확산, 정부 및 대학의 외국인 유학생 유치 노력으로 국내 외국인 유학생 수가 급격히 증가하였으나 세계적인 경제 불황 등으로 그 수가 감소함. 향후 외국인 유학생 유치를 위한 적극적인 홍보와 정부의 지원으로 국내 외국인 유학생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전망이다(통계청, 2012).

<표 II-4> 국외 한국인/국내 외국인 유학생(대학) 현황



국가	중국	일본	미국	베트남	대만	몽골	기타	계
유학생수(명)	55,427	4,093	2,665	2,447	1,510	3,797	16,939	86,878
비율(%)	63.8	4.7	3.1	2.8	1.7	4.4	19.5	100

자료 :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연보, 교과부 자체조사, 국립국제교육원,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마. ICT 기술의 발전

- 향후 5년 이내에 도입될 미래 기술을 매년 6개씩 뉴미디어 컨소시엄(NMC)이 선정하고 있음. 2011년도에는 e-book, 모바일, 게임, 증강현실, 동작인식 컴퓨팅, 학습분석기술(learning analytics)을 선정한 바 있음.
 - 단기적으로는 e-book과 모바일기기가 학습현장에 도입될 것으로 전망됨.
 - 중기에는 게임, 가상공간의 증강현실 등이 활용될 것으로 전망됨.
 - 장기적으로는 동작을 인식하는 컴퓨터를 활용한 실기, 실습교육, 학생의 토론, 발표 등 학생 데이터를 분석하여 맞춤형 교육을 실시할 것으로 전망됨.
- ICT 기술이 교육현장에 도입되면서 시공간을 초월한 다양한 형태의 고등교

육이 등장하여 고등교육 접근성을 확대해 줄 수 있을 것임.

- 온라인 교육 등을 제공하여 시공간적 제약을 넘어서 고등교육 접근성을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학령기 위주의 교육보다는 단기과정, 교과목 등, 소규모 단위 등, 개인의 필요에 의한 학습 과정 설계가 가능할 것임.
- 장기적으로 대학은 ‘교육 장소’로서의 역할은 줄어들고, ‘콘텐츠’ 제공자로서의 중요성이 커질 것임.

○ ICT 기술의 발달은 중단기적으로 대학 간 교육과정 연계에 활용될 수 있음.

- 대학 간 통폐합 과정에서 해당 대학이 제공하지 않는 과목은 타 대학의 온라인 강좌를 수강하거나 대학 간 공동학위 과정을 운영하여 백화점식 대학을 운영하지 않고도 학생 모집이 가능함.

○ 장기적으로는 대학 간 연계가 확산되고 국가적 차원의 고등교육 시스템으로 전환될 가능성도 있음.

- 개별 대학, 개별 교수자의 강의로 이루어지던 것이, 국가 전체, 전 세계의 우수 강의를 DB화하여 국가적 차원에서 제공 가능함.
- 대학은 공공 서비스 공급자로 대학의 명성보다는 교육의 질로 평가될 수 있음.

2. 연구보고서의 아젠다 분석을 통해 본 시기별 고등교육 변화 동향¹⁾

가. 고등교육의 유연성 강화(국제협력, 평생교육)

1) 단기(1~2년)

1) 여기서는 ‘중장기 고등교육정책 방안’ 마련과 관계있는 선행 연구 보고서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을 바탕으로 향후 고등교육의 변화 동향을 시기별로 정리하여 요약·제시한다.

- 고등교육의 유연성 강화를 위해 1~2년 이내에 단기적으로 우선 추진해야 할 아젠다는 성인 친화적 대학평생학습 사업의 확대, 대학 미진학자, 중도포기자 직업교육 확대(능력사다리 구축). Teaching 2.0시대의 e러닝 교수-학습 체제 구축 등임.
 - 신현석 외(2012)는 성인학습자를 위한 평생학습 선도 및 평생학습을 중심으로 하는 대학의 규모의 확대와 체계화를 위한 평생학습 사업 확대 및 직업교육의 확대를 제안함.
 - 백성준 외(2011)는 고등교육체제 개편의 배경을 인구구조의 변화, 경제·산업구조의 변화, ICT 및 e-learning, 글로벌화(Globalization)로 제시하고, 단기 아젠다로 지역별 각 산업에 필요한 인력양성을 위한 직업교육기관의 유형과 규모추정을 요구함.
 - 채재은 외(2009)는 차세대 이러닝(Teaching 2.0) 시대의 다양한 커뮤니케이션을 중심으로 한 교수-학습 유형별 모형 개발·보급의 필요성을 제안함.
 - 이혜영 외(2011)는 외국인 유학생이 학위과정을 잘 이수할 수 있도록 하는 관리에 초점을 두어 유학생 유치정책 추진의 경제성 제고를 제안함.

2) 중기(3~5년)

- 고등교육의 유연성 강화를 위한 중기 아젠다는 평생학습 관리 및 지원체제 구축, 성인학습자의 학비부담 경감 및 교육기회 확대, 성인학습자 학습지원을 위한 다양한 성인학습제도 확대, 국가산업·경제 발전을 위해 필요한 각 분야별·수준별 고등교육단계 직업교육 이수자 수요 파악, 외국인 유학생 유치 및 국제 협력교류 활성화, 고등교육의 국제화 강화 등임.
 - 신현석 외(2012)는 성인학습자의 학습지원을 위한 다양한 성인학습제도의 확대를 위해 학습자 특성을 반영한 특별전형 실시 및 선발인원의 점진적 확대와 성인학습자 특별전형제도의 다양화를 제안함.

- 백성준 외(2011)는 ICT 기술 및 교통수단의 발달이 대학에서의 직업교육 이수와 노동인력의 이동성을 촉진한다고 보고, 특성화·연계 네트워크에 기반한 고등교육체제의 실현을 위해 국가산업·경제 발전을 위해 필요한 각 분야별·수준별 고등교육단계 직업교육 이수자 수요 파악을 우선적으로 실시해야 한다고 제안함.
- 신현석 외(2012), 이병식 외(2005)는 고등교육의 국제화 및 교육네트워크를 강화하고, 학생인구의 다양화를 포용하는 학생지원체제를 마련하여 외국인 유학생 유치 및 국제 교육협력의 활성화를 제안함.
- 채재은 외(2009)는 국내 연구역량 제고를 위해 해외유학자 인력 및 우수 외국인 유학생의 전략적 유치·활용, 캠퍼스 국제화 등을 제안함.

3) 장기(5~10년)

- 장기 아젠다는 일과 학습이 병행 가능한 시간제 등록제의 보편화, 노년층 평생학습 요구를 충족하는 대학교육 확대, 학생·연구자 이동 및 고용이 원활하도록 하는 동아시아 지식협력체 구축 등임.
 - 채재은 외(2009)는 인구고령화에 대응하여 고학력 노년층의 평생학습 요구를 충족할 수 있도록 대학교육을 확대하고, 성인들의 능력개발을 위한 학습휴가제와 고등교육간의 연계를 제안함.
 - 채재은 외(2009)는 한중일 동아시아 3개국의 선도대학 간 네트워크 체제를 구축하여 학생·교수 교류, 공동 커리큘럼 및 학위제도를 운영하고 상호비교 가능한 학점·학위·자격 인증시스템의 구안 및 발전을 제안함.

4) 미래(10년 이상)

- 고등교육의 유연성 강화를 위한 미래 아젠다는 유비쿼터스 캠퍼스 구축 및 고등교육 정책 협의·조정기구 마련 등임.

- 이병식 외(2005)는 현재의 고등교육 정책에 관한 범부처 간 통합·조정 이 취약한 구조를 보완하기 위한 전문기구의 마련의 필요성을 제언함.

나. 고등교육의 효율성 강화(질 보장, 구조개혁, 예산)

1) 단기(1~2년)

- 고등교육의 효율성 강화를 위해 질 보장, 구조개혁, 예산에 관한 단기 아젠다는 교원 질 개선 프로그램 개발, 교육역량 강화를 위한 대학 구조개혁 등임.
 - 이병식 외(2005)는 국가 혹은 대학 수준에서의 교원 질적 수준 제고를 위한 제도의 미흡을 지적하고, 지방대학의 우수교육 확보의 어려움과 근속연수나 연령에 의한 대학 교원의 보수체계의 보완을 위한 교원 질 제고 프로그램 개발을 제언함.
 - 유현숙(2011)은 학생들의 최소 수준의 교육권 보장을 위해 부실 사립대학의 진단 및 퇴출을 지원하되, 사전에 자율 구조조정 기회의 제공과 경영개선을 위한 컨설팅을 실시할 것을 제언함.
 - 신현석 외(2012), 이병식 외(2005)는 정부와 대학, 기업의 고등교육재정 부담을 확대하고, 부실대학의 장학금 지원 및 학자금 대출 지원을 규제함으로써 불균형적 고등교육재정구조의 개선을 제언함.

2) 중기(3~5년)

- 3년 정도의 기간이 소요되는 중기 아젠다는 대학 구조개혁을 위한 법제도 구축, 고등교육 재정투자 효과분석의 방식 혁신, 대학 구조조정 효율화를 위한 정부의 지원 등임.
 - 유현숙(2011)은 고등교육의 국제 경쟁력 확보를 위해 대학원 구조개혁을 통한 연구중심대학의 육성을 제언함.

- 신현석 외(2012)는 국·공립대학 평가제도 부활을 통해 구조개혁을 추진하되, 대학 특성화를 촉진하는 재정지원사업으로 전면 재조정 및 재구조화할 것을 제언함.
- 이해영 외(2011)은 사립대학 구조조정을 촉진하고 실효성 제고를 위한 법·제도적 기반을 구축할 것을 제언함.

3) 장기(5~10년)

- 고등교육의 효율성 강화를 위한 장기 아젠다는 국내 고등교육 질 보장 체제와 국제적 질 보장 체제의 연계, 고등교육의 재정투자 증대, 대학의 자율화 확대 등임.
 - 채재은 외(2009)는 국내 고등교육의 질 평가 방법 및 내용을 국제 동향에 맞추어 지속적으로 개선·홍보할 것을 제언함.
 - 이병식 외(2005)는 대학의 평가결과와 정부의 재정지원이 연계되는 현 상황은 학교운영에 대한 제약을 야기하므로 등록금 책정, 학생 선발권, 운영 등에 대한 자율화가 필요함을 밝힘.
 - 신현석 외(2012)는 국공립대는 공공성과 책무성을, 사립대학은 자율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 기조를 설정하여 대학의 지배구조를 개선하고, 유연한 교육과정 운영과 구조조정을 위한 각종 규제 철폐로 학사운영 및 학위체제를 유연화할 것을 제언함.

4) 미래(10년 이상)

- 10년 이상 소요되는 미래 아젠다는 의식·관행·법제도 정착 등의 내용을 포함함.
 - 백성준 외(2011)는 시장 메커니즘에 근거한 새로운 형태의 고등교육체제 실현을 위해 고등교육기관과 정부는 교육 수요자에게 서비스에 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현명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유현숙(2011)은 한계상황에 처한 사립대학의 경영정상화를 위해 교육력 향상을 위한 교육과정의 다양화·특성화 및 경영 개혁 체제 구축 등을 통한 노력 관행의 정착을 제언함.

다. 고등교육의 책무성 강화

1) 단기(1~2년)

- 고등교육의 책무성 강화를 위해 정보공시, 대학 인증 및 평가를 위한 단기 아젠다는 정보공시체제의 보완 등임.
 - 채재은 외(2009)는 대학교육 비용, 대학 등록금 책정, 대학교육 성과 등과 같이 고등교육 수요자들의 수요가 많은 정보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아울러 대학정보 공시 방법의 개선을 통해 소비자 접근성 및 활용성을 제고할 수 있는 콘텐츠를 정교화할 것을 제언함.

2) 중기(3~5년)

- 수요자 관점의 평가로 대학제도 전환 등임.
 - 신현석 외(2012)는 별도의 고등교육 평가전담 준 공공기구를 만들어, 민간평가기구의 평가인증, 연구, 연구 및 정보공시의 총괄기능을 부여하여 국민의 관심과 요구를 적극적으로 반영할 것을 제언함.

3) 장기(5~10년)

- 수요자 교육성과 기반 책무성 강화 등임.
 - 신현석 외(2012)는 교육여건 및 학교운영에 대한 중요 공시항목을 확대하며 공시정보 신뢰도 개선 및 수요자 중심정보 제공을 통해 공시정보

활용 확산을 위한 수요자 중심, 학습성과, 취업률 중심 대학 정보공시 제도의 효율화를 제언함.

4) 미래(10년 이상)

○ 유비쿼터스 학습지원 교육환경 구축 등임.

- 채재은 외(2009)는 차세대 교수-학습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여 학습자 중심의 교육 패러다임을 수용할 수 있는 선진 인프라 구축을 제언함.
- 신현석 외(2012)는 유비쿼터스 시대의 도래에 맞추어 최첨단 정보통신 기술의 활용을 통해서 현재 대학교육이 갖는 시간·장소·전달 방법의 제약을 제거한 유무선 통합서비스에 기반한 유비쿼터스 캠퍼스 구축 및 학습관리시스템(LMS) 연계 모바일러닝 활성화 등을 제언함.

라. 고등교육의 효과성 강화

1) 단기(1~2년)

○ 고등교육의 효과성 강화를 위한 단기 아젠다는 대학의 연구역량 확충 및 평가제도 정비, 산학협력 지원강화, 대학·교수 인센티브 제도화 등임.

- 채재은 외(2009)는 서비스업 등 새로운 산학협력 분야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산학협력의 새로운 영역을 확대할 수 있는 인센티브의 확대를 제언함.
- 서중해(2010)는 산학협력의 실질적 성과 도출을 위해 대학 연구역량을 확충하고 수월성을 지향하도록 연구 평가 등 관련 제도 정비를 요구함.

2) 중기(3~5년)

- 중기 아젠다는 인재양성을 위한 투자 확대, 산업 수요에 부합하는 교육과정의 개발, 연구환경 개선, 산업체와 대학 간 지속협력 방안 마련 등임.
 - 백성준 외(2011)는 특성화·연계네트워크에 기반한 개방형 고등교육체제 실현을 위해 국가 차원의 우수대학 육성, 발전 계획 수립의 필요성을 강조함.
 - 채재은 외(2009)는 기업의 산학협력 활동 참여를 위하여 제도 및 고등교육단계별로 적합한 산업선도형 인력양성체제를 구축하는 등 지속 협력을 위한 ‘호혜형 산학협력’ 촉진의 필요성을 언급함.
 - 신현석 외(2012)는 지역 수요 맞춤형 산학협력을 확대하고, 산업단지 내 산학융합캠퍼스 조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지역발전을 위한 산학연 협력 강화를 제언함.

3) 장기(5~10년)

- 장기적으로 수요자의 요구를 반영하고, 대학교육의 사회적 적합성을 제고하고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아젠다를 도출함.
 - 서중혜(2010)는 양적 성과에 치중된 산학협력 평가지표를 실질적인 산학협력 성과가 반영될 수 있도록 정비가 필요함을 강조함.
 - 채재은 외(2009)는 분과학문의 경계를 허물고 학제 간 융합연구를 활성화하여 융합연구 및 교육이 가능하도록 학사구조를 유연화하고, 신성장동력 분야 등 국가전략분야의 고급융합기술 인력 양성 지원을 강조함.

4) 미래(10년 이상)

- 우수대학에 대한 집중 투자 및 육성에 중점을 둔 고등교육 발전전략 수립 등임.

- 백성준 외(2011)는 특성화·연계네트워크에 기반한 개방형 고등교육체 제 실현을 위해 국가 전체를 하나의 경제권역으로 보고 국가 차원의 고등교육체제의 설계·운영을 위한 우수대학 집중투자 및 육성 전략이 필요함을 언급함.

마. 고등교육의 공공성 강화

1) 단기(1~2년)

- 고등교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단기 아젠다는 소외계층 학습자를 위한 정보제공, 소외계층 대학생의 대학원 진학 지원 프로그램 운영 등임.
 - 채재은 외(2009)는 지역의 사회·경제적 자본 형성의 중추로서 대학의 혁신적 역할 요구가 증대됨에 따라 지방대학 중심의 산·학·연 네트워크 구축 지원, 지방대학의 탄력적 교육과정 및 학사운영 지원, 국제화와 특성화를 기반으로 한 지방도시와 지방대학의 상호발전 유도 등을 제언함.

2) 중기(3~5년)

- 고등교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중기 아젠다는 고등교육의 기회형평성 제고, 등록금 인하, 기회균등선발제 확대 및 정착 등임.
 - 김영철(2011, 2012)은 고등교육의 형평성 제고를 위한 기회균등선발제의 확대 및 정착, 입학사정관제 정착, 수시전형 확대, 지역균형 선발과 사회적 배려자 전형 등 대학의 자발적 기회형평성 관련 전형 확대 등을 제언함.
 - 신현석 외(2012)는 서민·중산층의 반값등록금 실현을 위한 대학생 맞춤형장학금 확대, ICL(든든장학금) 운용개선 및 이자 부담 축소, 대학 특성화 촉진 및 지원, 지방대학 및 전문대학 교육 특성화 등을 제언함.

- 채제은 외(2009)는 대학입학을 목표로 한 소외계층 학생의 학력증진 강화정책을 제안함.

3) 장기(5~10년)

- 고등교육의 공공성 확대를 위한 장기 아젠다는 학습자의 경제부담 완화, 맞춤형 대입제도 확대, 고등교육의 형평성 등임.
 - 신현석 외(2012)는 대입 공정성·형평성 제고 및 입시부담의 경감을 위해 현재 대학본부에 집중되어 있는 학생선발권을 학부(모집단위) 단위로 분산하는, 대입전형의 분권화·자율화 추진을 제안함.
 - 또한, 입학사정관제를 소외계층, 사회적 배려 대상자를 위한 ‘적극적 차별 대책’으로 전환하여 소득 맞춤형 대입제도 도입을 제안함.
 - 이병식 외(2005)는 성, 연령,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른 고등교육의 불평등 요소를 낮추어 기회의 형평성 제고를 제안함.

4) 미래(10년 이상)

- 고등교육의 공공성 확대를 위한 미래 아젠다는 지역 내 대학의 기능 강화, 대학 수입구조 다변화, 교육기회 형평성 제고 방안 등임.
 - 김영철(2011)은 교육기회의 형평성 제고를 위해 전담 정부기구를 신설하여 대학 진학에서의 지역 간, 계층 간 격차 해소를 제안함.
 - 신현석 외(2012)는 민간의 대학 기부금 제도를 활성화하여 대학 수입구조의 다변화와 대학이 지역 내 교육연구 문화의 허브기관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할 것을 제안함.
 - 채제은 외(2009)는 대학이 지역주민들이 학습하고 휴식하며 문화체험 등을 할 수 있는 복합지원센터로서 기능할 수 있도록 하는 정부의 지원을 강조함.

<표 II-5> 선행연구 아젠다 정리

구 분	기 간	내 용
고등 교육의 유연성 강화	단기 (1~2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인 친화적 대학평생학습 사업 확대(신현석) - 지역별 각 산업에 필요한 인력양성을 위한 직업교육기관 유형 및 규모추정(백성준) - 외국인 유학생 유치의 경제성 제고(이혜영) - 고등교육시장에서 획득한 직업교육 결과의 공식적 평가·인정 및 이의 노동시장에서의 활용(백성준) - 대학 미진학자, 중도포기자 직업교육확대(능력사다리 구축)(신현석) - Teaching2.0 시대의 e러닝 교수-학습 체제 구축(채재은) - 대학의 평생교육 기능 강화를 위한 투자 확대(이정미)
	중기 (3~5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국인 유학생 유치 및 국제 협력교류 활성화(신현석) - 평생학습 관리 및 지원체제 구축(신현석) - 고등교육의 국제화 강화(이병식) - 국제 교육네트워크 강화(신현석) - 해외 유학자 인력 관리 및 우수 외국인 유학생의 전략적 유치·활용(채재은) - 외국인 유학생 학습권 강화를 위한 기반 구축(이혜영) - 외국 대학 및 프로그램의 전략적 유치 및 캠퍼스 국제화 지속 추진(채재은) - 성인학습자의 학비부담 경감 및 교육기회 확대(신현석) - 성인학습자 학습지원을 위한 다양한 성인학습제도 확대(신현석) - 국가산업·경제 발전을 위해 필요한 각 분야별·수준별 고등교육단계 직업교육 이수자 수요 파악(백성준)
	장기 (5~10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과 학업이 병행 가능한 시간제 등록제의 보편화(채재은) - 고등교육 분야의 선행학습 인정제도 확대(채재은) - 고등교육기관 간의 상호협력, 학생·연구자의 이동 및 고용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동아시아 지식협력체 구축(채재은) - 성인들의 능력개발을 위한 학습휴가제와 고등교육간의 연계 강화(채재은) - 노년층의 평생학습 요구를 충족하는 대학교육 확대(채재은) - 국내의 고등교육 환경 및 인구 고령화를 고려한 재정투자 필요(이정미) - 고등교육 ODA 활성화를 위한 투자 확대(이정미)
	미래 (10년 이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비쿼터스 캠퍼스 구축(채재은) - 고등교육 정책 협의·조정 기구 마련(이병식)

고등 교육의 효율성 강화	단기 (1~2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등교육 질 보장 총괄·조정 기능 수행 주체 정립(채재은) - 부실대학 진단 지표(유현숙) - 교원의 질 개선 프로그램 개발(이병식) - 핵심적인 현안과제에 대한 적극적 대처(이병식) - 종합적인 정책 틀 마련(이병식) - 고등교육 재정 확충과 지원체제 정비(신현석, 이병식) - 대학의 교육역량 강화를 위한 구조개혁(유현숙) - 대학 구조조정 추진 정책의 일관성, 통일성 제고(이혜영)
	중기 (3~5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등교육 체제의 연계강화(이병식) - 고등교육 정보 종합 포털 구축(이병식) - 융합연구 및 교육이 가능하도록 학사구조 유연화(채재은) - 부실대학 진단 및 퇴출 지원(유현숙) - 사립대학 구조개혁에 관한 법제도 구축(유현숙) - 고등교육의 질 확보 체제 확립(이병식) - 대학의 기능별 분화 활성화를 위한 개별적 분류기준 도입(이혜영) - 고등교육에 대한 재정투자 효과분석 방식의 혁신(이정미) - 지역별 단계적 교육수요에 따른 고등교육기관별 적정 분포 및 규모 등에 대한 정책 판단(백성준) - 사립학교에 대한 경영컨설팅 시스템 구축 마련(유현숙) - 고등교육기관의 책무성과 투명성 강화를 위한 질 보장 체제 구축(채재은) - 대학의 구조개혁을 위한 연구중심대학의 육성(유현숙) - 국립대학 구조개혁·통폐합(신현석, 채재은, 유현숙) - 부실대학 정리를 위한 법령 마련(이혜영) - 국립대학 법인화(채재은, 유현숙) - 사립대학 구조조정(신현석, 채재은) - 대학 구조조정의 지속적 추진(이정미) - 사립대학 구조조정 효율화를 위한 정부 지원(유현숙)
	장기 (5~10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내 고등교육 질 보장 체제를 국제적 질 보장 체제와 연계(채재은) - 국제적 수준의 고등교육 질 보장(신현석) - 고등교육을 위한 재정투자 규모의 획기적 증대 필요(이정미) - 대학 운영체제의 유연화(신현석)
	미래 (10년 이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학의 경영 정상화를 위한 노력 관행 정착(유현숙) - 고등교육시장에서의 공정한 거래보장에 필요한 정보 및 재정 지원 서비스 등을 위한 새로운 법적·재정적 기제 마련(백성준)

고등 교육의 책무성 강화	단기 (1~2년)	- 대학정보공시체제의 정교화(채재은)
	중기 (3~5년)	- ‘수요자 관점 평가’로 대학평가제도 전환(신현석)
	장기 (5~10 년)	- 수요자 교육성과 기반 책무성 강화(신현석)
	미래 (10년 이상)	- 유비쿼터스 학습을 지원하는 교육환경 구축(신현석, 채재은)
고등 교육의 효과성 강화	단기 (1~2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학의 연구역량 확충 및 평가제도 정비(서중혜) - 우수 석·박사과정생 연구장학금 지원(채재은) - 잘 가르치는 대학, 잘 가르치는 교수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제도화(채재은) - 서비스업 등 새로운 산학협력에 대한 지원 강화(채재은) - 산학협력의 새로운 영역을 창출할 수 있는 인센티브 확대(채재은)
	중기 (3~5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등교육 체제와 노동시장의 연계 강화(이병식) - 대학의 교수-학습 기능 강화를 위한 종합지원 대책 마련(채재은) - 고등교육의 질, 영향력, 효과성에 대한 DB를 구축하여 고등교육의 질 보장 체제와 연계(채재은) - 우수 인력의 양성에 필요한 국가 차원 우수대학 육성·발전 계획 수립(백성준) - 미래 유망분야 창의인재 양성 및 선제적 투자 강화(신현석) - 교육여건 및 역량 강화(이병식) - 산학 연계강화(이병식, 서중혜, 이해영) - 대학생을 위한 학습환경, 생활환경 개선(신현석) - 교육역량강화를 위한 재정지원 확대(이정미) - 산업체 중심으로 대학과 연구기관의 인력 교류 확대(채재은) - 산업수요에 부합하는 교육과정 개발(이혜영) - 지역발전을 위한 산학연 협력 강화(신현석) - 연구환경 개선(신현석) - 기업의 산학협력 활동 참여를 위한 제도 기반 구축(채재은) - 고등교육 단계별로 적합한 산업 선도형 인력양성체제 구축(채재은) - 산업체와 대학 간의 지속적 협력을 위한 ‘호혜형 산학협력’ 촉진(채재은)
	장기 (5~10 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업현장의 근로자 등의 수요자 요구를 반영할 수 있는 다양한 학위유형 도입(채재은) - 고급융합기술 연구인력 양성(채재은) - 대학 교육력과 대학생 직무능력 강화(신현석) - 대학교육의 사회적 적합성 제고(신현석) - 실질적 산학협력 성과창출을 위한 평가·보상제도 정비(서중혜)

고등 교육의 공공성 강화		- 대학·대학원의 학문연구 경쟁력 강화(신현석)
	미래 (10년 이상)	- 우수 대학에 대한 집중투자·육성에 중점을 둔 고등교육 발전전략 수립 (백성준)
	단기 (1~2년)	- 소외계층 학생 및 성인학습자의 대학입학 준비를 위한 정보제공 기반마련 (채재은) - 소외계층·성인학습자를 위한 대학생활 적응 및 정보포털 서비스 제공(채재은) - 국제화와 특성화를 기반으로 한 지방도시와 지방대학의 상호발전 유도(채재은) - 지방대학의 탄력적 교육과정 및 학사운영 지원(채재은) - 소외계층 대학생의 대학원 진학 지원 프로그램 운영(채재은) - 지방대학 중심의 산·학·연 네트워크 구축 지원 및 평가기제 운영(채재은)
	중기 (3~5년)	- 대학생 맞춤형장학금 확대: 서민·중산층 반값등록금 실현(신현석) - ICL(튼튼장학금) 운용 개선 및 이자 부담 축소(실질적 제로화)(신현석) - 대학입학을 목표로 한 소외계층 학생의 학력 증진 정책 강화(채재은) - 기회균형선발제 확대 및 정착(김영철, 2011) - 기회균등선발제의 안정적 정착 및 지속적 확대(김영철, 2012) - 고등교육의 기회형평성 제고를 위한 입학사정관제의 정착(김영철, 2011; 김 영철, 2012) - 고등교육의 기회형평성 제고를 위한 구체적이며 미래지향적 목표 설정(김영 철, 2011) - 지방대학 및 전문대학 교육 특성화(신현석) - 대학과 지역사회(산업)의 연계 강화(이병식) - 기회형평성 확충 차원의 수시전형 확대(김영철, 2011) - 지역, 계층 간 대학진학의 격차 해소를 위한 구체적 미래지향 목표 설정(김 영철, 2012) - 지역균형 선발과 사회적 배려자 전형 등 대학의 자발적 기회형평성 관련 전 형 확대(김영철, 2012) - 대학특성화 촉진 및 지원(신현석)
	장기 (5~10 년)	- 가계소득 중간계층 이하 대학생과 성인학습자를 위한 경제부담 완화(채재은) - 진로맞춤형 대입제도, 소득 맞춤형 대입제도, 학습맞춤형, 부담경감형 도입, 공교육 맞춤형 수학능력시험제도 개선(신현석) - 성인 맞춤형 전형제도 확대(신현석) - 고등교육의 형평성 제고(이병식) - 대학생 등록금 하향 적정화(신현석)
	미래 (10년 이상)	- 교육기회의 형평성 제고를 위한 전담 정부기구 신설(김영철, 2011) - ‘지역 복합 문화 및 혁신센터’로서 대학의 기능 강화(채재은) - 대학 수입구조 다변화, 특히 민간의 대학 기부금 활성화 방안(신현석) - 학생인구의 다양화를 포용하는 학생지원체제 마련(신현석)

3. 중단기 고등교육정책에 대한 전문가 의견조사

가. 고등교육 정책 과제 성과 및 향후 추진 필요성

- 그간 MB정부에서 추진된 고등교육 정책의 공과를 평가하고 차기정부에서 추진되어야 할 정책과제를 도출하기 위하여 전문가 의견조사를 실시함.
- MB정부에서 추진해 온 고등교육 정책과제에 대한 전문가 평가 결과, 학부 교육 선진화 선도대학 지원 사업(ACE), 두뇌한국21(BK21), 대학정보공시제, 박사 펠로우, 유학생 유치·관리 인증 역량 대학 등의 과제가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으며, 지금의 기조에 이어 향후에도 강력히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나타남.
- 대학구조개혁은 MB 정부에서의 성과가 두드러지지 않은 것으로 평가되었지만, 향후 추진 필요성 부문에서 4.4점으로 최고점을 획득하여 차기 정부에서 확대되어야 할 것으로 확인됨.

1. MB 정부에서 추진해 온 고등교육 정책 과제를 다음 표와 같이 제시하였습니다.

- (1) 각 과제별 성과를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2) 향후 폐지, 축소, 유지, 확대의 정도를 표시하여 주시고, 이유를 서술해 주십시오.

(전체 응답 평균)

번호	내 용	(1) 성과	(2) 향후 추진의 필요성
1	국립대 법인화	3.5	3.7
2	국립대 총장 직선제 폐지	3.1	3.5

3	대학구조개혁	3.3	4.4
4	대학기관 평가제	3.1	3.9
5	대학교육역량강화사업	3.5	4.0
6	세계 수준의 연구중심대학 육성 사업(WCU)	3.0	3.5
7	학부교육 선진화 선도대학 지원 사업(ACE)	3.7	4.3
8	두뇌한국21(BK21)	3.7	4.1
9	박사 펠로우	3.6	3.7
10	입학사정관제	3.1	3.5
11	기회균등 선발제	3.5	4.0
12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제도(ICL)	3.5	4.0
13	대학 등록금 인하 정책	2.3	3.0
14	산학협력 선도대학 육성 사업(LINC)	3.5	4.1
15	캠퍼스 아시아 (CAMPUS ASIA)	3.4	3.9
16	외국인유학생 유치 · 관리역량 인증대학	3.6	4.2
17	해외진출 지원	2.8	3.5
18	고등교육 재정교부금	2.5	3.8
19	대학 자체 평가	3.2	3.8
20	대학정보공시제	3.7	4.4

(1점: 매우못함, 2점: 못함, 3점: 보통, 4점: 잘함, 5점: 매우잘함)

나. 차기정부²⁾ 추진 정책과제

- MB 정부에서 추진된 고등교육 정책과제 이외에 추가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정책과제에 대하여 전문가들에게 의견을 구한 결과, 대학재정 충실화(재정 지원 확대 및 법 개정)가 빈도 4를 획득하여 가장 높은 비율의 응답을 보였음.
- 이외에 대학통폐합, 대학특성화 및 차별화, 대학경쟁력 강화, 대학 평가시스

2) 여기서 차기정부는 이 연구가 시작된 시점이 박근혜 정부가 탄생되기 직전이기에 때문에 이처럼 표현된 것이며, 실제로 그 이후에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되었으므로 현 시점에서는 박근혜 정부를 지칭함.

템 개선 등이 중단기 고등교육 정책에서 추진되어야 할 세부 과제로 지목되었음.

2. 차기 정부에서 상기한 정책 과제 이외에 추진해야 할 정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번호	내 용	빈도	비율
1	대학재정 충실화(재정지원 확대, 법개정)	4	9.1
2	대학 통폐합	3	6.8
3	대학특성화, 차별화	3	6.8
4	대학경쟁력 강화	3	6.8
5	대학 평가시스템 개선	3	6.8
6	대학 회계관리 강화	2	4.5
7	고등교육전담기구 신설	2	4.5
8	평생교육중심 고등교육기관 모델 개발 및 적용	2	4.5
9	입학전형 내실화	2	4.5
10	글로벌인재 양성체제 구축	2	4.5
11	지방대학 육성	2	4.5
12	대학 정원축소	1	2.3
13	대학 자율화 확대	1	2.3
14	우수인재 육성방안 마련	1	2.3
15	사립대학 구조개혁	1	2.3
16	종합정책 수립	1	2.3
17	국립대학발전방안 마련	1	2.3
18	지역기반 시스템 확충	1	2.3
19	국립대학 책임경영제 도입	1	2.3
20	교수업적 평가제도 체계화	1	2.3
21	소외계층에 대한 적극적 차별 시정조치 (Affirmative Action) 및 지원 프로그램 도입	1	2.3
22	교수학습 및 진로지원체제 강화	1	2.3
23	문이과 통합교육 실시	1	2.3
24	수요주도형 학사운영 및 학위체계 개편	1	2.3
25	기후변화 대응교육의 다각화 및 전문화	1	2.3
26	환경변화를 반영한 교육과정 개편	1	2.3
27	산학협력 관련 정책의 발전방안 마련	1	2.3
합 계		44	100.0

다. 차기정부 추진 우선순위 정책과제

- 차기정부에서 추진해야 할 정책과제들을 우선순위 및 빈도별로 확인한 결과, 대학구조조정이 가장 높은 빈도의 응답을 차지하였으며, 우선순위 또한 평균 2.9위를 기록하여 가장 중요성이 높은 과제로 선택되었음.
- 이어 다수의 전문가들이 국제화를 추진 과제로 설정하였으나, 우선순위에 있어서는 평균 7.1위를 기록하여, 필수적이나 시급하지 않은 정책 과제로 분류되었음.
- 이외에도 응답 빈도 및 우선순위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 대학교육역량 강화사업, ACE 사업, 지역대학 발전방안 모색, 국가장학금 지원확대, 재정지원 및 투자확대가 우선순위별 10대 과제 안에 선정되었음.

3. 위 2번 문항의 응답내용을 포함하여, 차기 정부에서 추진해야 할 과제를 우선순위별로 10가지를 선정하시고, 그 이유는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서술해 주십시오.

번호	과제명	빈도	우선순위	
			응답	평균
1	대학구조조정/개혁	8	1/7/1/2/3/2/4/3	2.9
2	국제화 강화	7	7/5/10/9/10/6/3	7.1
3	대학교육역량강화사업	5	6/8/7/6/1	5.6
4	ACE	4	3/7/4/2	4.0
5	지역대학 발전방안 모색	4	5/5/1/5	4.0
6	안정적 재정보호	4	3/1/4/8	4.0
7	국가장학금 지원 확대	4	1/7/5/4	4.3
8	재정지원/투자 확대	4	1/1/10/9	5.3
9	평가시스템 개선	4	7/3/6/8	6.0
10	ICL	4	6/8/6/5	6.3
11	입학사정관	3	5/5/7	5.7

12	산학협력정책	3	8/7/2	5.7
13	전형제도 개선	3	8/3/7	6.0
14	대학평가인증제	3	2/8/9	6.3
15	운영 책무, 투명성 강화 (책임경영제, 회계제도 도입 등)	3	8/4/9	7.0
16	평생교육 중심 고등교육기관	3	7/7/7	7.0
17	캠퍼스아시아	3	10/10/6	8.7
18	교육연구 통합체제 구축	2	2/3	2.5
19	사회변화에 따른 교육과정 개편	2	1/7	4.0
20	BK21	2	4/4	4.0
21	WCU	2	4/4	4.0
22	고등교육 질 강화 모색	2	4/6	5.0
23	마스터플랜 수립	2	10/1	5.5
24	대학정보공시	2	9/9	9.0
25	LINC	2	10/8	9.0
26	고등교육 관련 전담기구 설치	1	1	1.0
27	대학등록금 인하 정책	1	2	2.0
28	대학경쟁력 개념 재정립	1	2	2.0
29	정책기조결정	1	2	2.0
30	대학경쟁력 제고정책	1	2	2.0
31	국립대 법인화	1	3	3.0
32	우수인재 육성	1	3	3.0
33	전문대 체제개편	1	3	3.0
34	협력과 연계를 위한 조정위원회 구성	1	4	4.0
35	기후변화 대응교육의 다각화 및 전문화	1	4	4.0
36	대학 자율화	1	5	5.0
37	대학 특성화	1	5	5.0
38	경계 없는 캠퍼스 구축	1	5	5.0
39	외국인 유학생 질 관리	1	6	6.0
40	수요 주도형 학사운영 및 학위체제 개편	1	6	6.0
41	대학자체평가	1	8	8.0
42	학습-노동-복지 순환형 (한국형) 캠퍼스타운 구축	1	8	8.0
43	행정역량 강화	1	9	9.0
44	박사 펠로우	1	9	9.0

45	대학원정책	1	9	9.0
46	대학교육 기회의 형평성 제고와 교육재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외국인 고액 사교육 기관에 대한 대책 마련	1	9	9.0
47	지역기반 고등인재의 재교육 체제 구축	1	9	9.0
48	교원 인사정책	1	10	10.0
49	소외계층 학생의 고등교육 기회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중등단계에서부터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장학제도 마련	1	10	10.0
50	국립대학 발전방안	1	10	10.0
합 계		110	—	—

III. 중기 고등교육정책 10대 과제³⁾

1. 고등교육정책의 기본 방향

가. 고등교육정책의 비전

- ☐ “세계적으로 경쟁력 있는 고등교육체제의 구축을 통한 글로벌 지식국가로의 발전”
 - 빠르게 진화하는 과학 및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로 전 세계 국가의 지식 주도권 경쟁이 날로 치열해지고 있음.
 - 다가오는 저출산·고령화의 그늘 그리고 교육여건 개선에 대한 내부적인 필요성이 동시대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역동적인 고등교육 환경의 변화에 부응하기 위한 새로운 개념의 고등교육체제 구축이 필요하게 됨.

나. 목표

- ☐ “고등교육의 기반 확립과 체질 개선을 통한 경쟁력 있는 고등교육체제의 구축”
 - 고등교육정책의 비전을 실현하기 위한 실천 목표는 ‘경쟁력 있는 고등교육체제 구축’을 실질적으로 가능하게 하는 것으로 ‘고등교육의 기반 확립과

3) 중기 고등교육정책 10대 과제는 향후 5년 동안 존속할 차기 정부인 박근혜 정부의 고등교육정책 과제를 선행 보고서 고찰과 전문가 면접을 통해 도출되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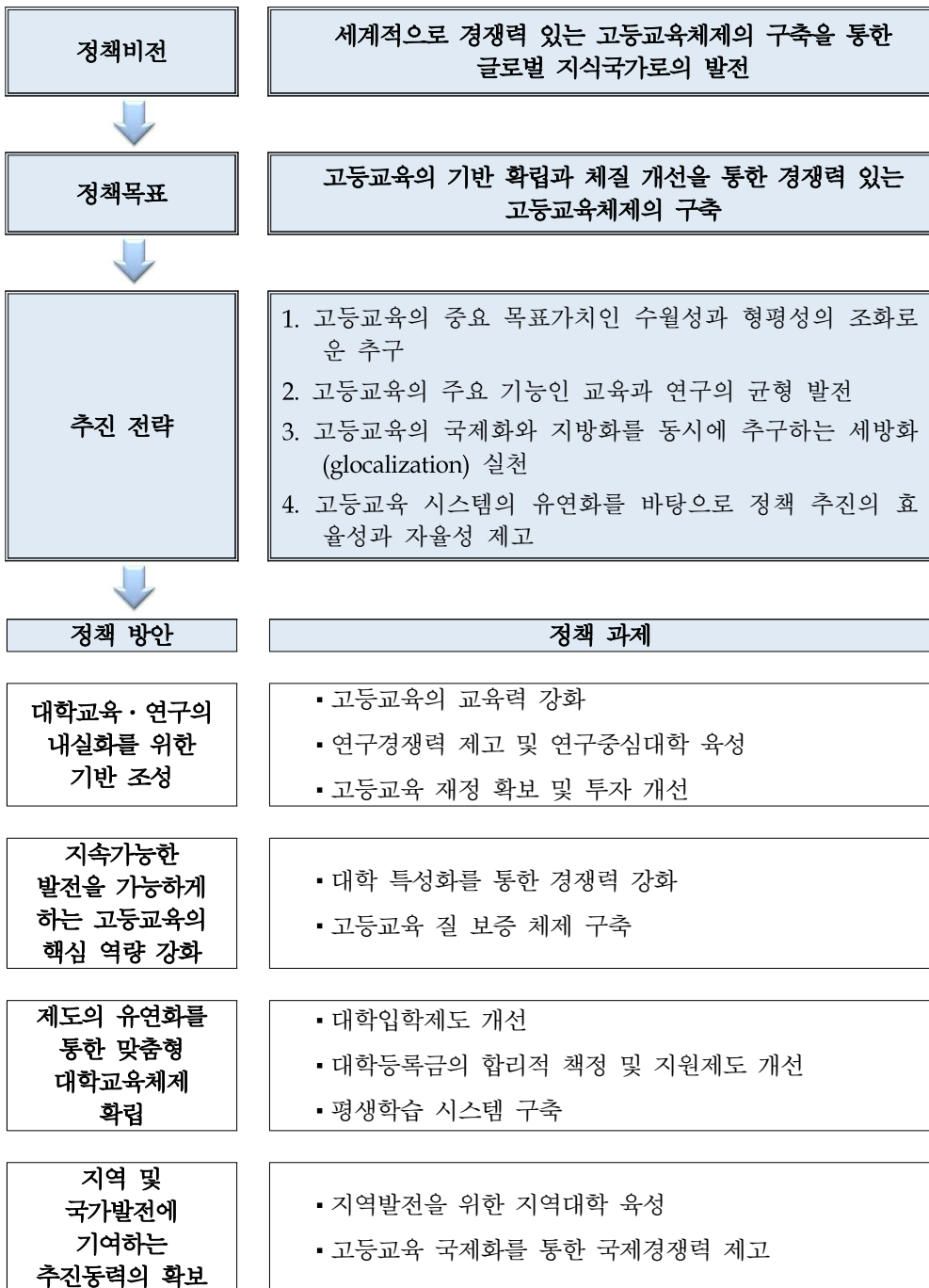
체질 개선'에 두어야 함.

- 고등교육의 기반 확립은 고등교육의 환경 변화에 부응하기 위한 기본적인 여건과 체제를 갖추는 것을 의미함.
- 체질 개선은 경쟁력 있는 고등교육체제 확립을 위하여 요구되는 조건을 정책을 통해 적극적으로 정비해 나가는 것을 의미함.

다. 추진 전략

- 차기정부에서 고등교육정책의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세부적인 정책방안 및 과제들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추진 전략은 다음과 같음.
 - 고등교육의 중요 목표가치인 수월성과 형평성의 조화로운 추구
 - 고등교육의 주요 기능인 교육과 연구의 균형 발전
 - 고등교육의 국제화와 지방화를 동시에 추구하는 세방화(globalization) 실천
 - 고등교육 시스템의 유연화를 바탕으로 정책 추진의 민주성과 효율성 제고

<표 III-1> 중기 고등교육정책의 기본 방향



2. 중기 고등교육정책 10대 과제

<표 III-2> 고등교육정책 정책 과제별 세부 과제

정책 과제	세부 과제
1. 고등교육의 교육력 강화	1-1. 학부교육 내실화를 통한 대학 교육력 강화 1-2. 직업교육 강화로 대학생 직무역량 제고 1-3. 대학원교육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연구교육 활성화 1-4. 교육프로그램 운영 유연화 1-5. 학습환경 및 생활환경 개선
2. 연구경쟁력 제고 및 연구중심대학 육성	2-1. 대학원의 학문연구 경쟁력 강화 2-2. 글로벌 연구중심대학 육성을 위한 재정지원 사업 재구조화 2-3. 미래 유망분야 창의인재 양성 및 선제적 투자 강화 2-4. 안전한 연구환경 조성 및 연구비 지원 확대
3. 대학입학제도 개선	3-1. 학생 맞춤형 대입제도 3-2. 입학사정관제 개선 3-3. 대입전형 간소화를 통해 학생·학부모 부담 경감
4. 대학등록금의 합리적 책정 및 지원제도 개선	4-1. 대학 등록금 적정화 유도 4-2. 효율적인 재정지원 체제 구축 4-3. ICL(튼튼학자금) 운용 개선 및 이자 부담 축소 4-4. 대학 기부금 활성화 방안 마련
5. 대학 특성화를 통한 경쟁력 강화	5-1. 대학특성화 촉진 및 지원 5-2. 국공립대학 구조개혁 추진 5-3. 산학협력을 통해 고등교육의 사회적 적합성 제고 5-4. 전문대 교육특성화
6. 고등교육 질 보증 체제 구축	6-1. 수요자 관점에서의 대학교육 질 관리 6-2. 대학교육의 질 보장을 위한 관리 수행 주체의 설립 6-3. 대학의 질 관리 노력 정도와 정부 지원 사업과의 연계 강화
7. 지역발전을 위한 지역대학 육성	7-1. 지역 수요 기반 맞춤형 산학협력의 활성화 7-2. 지역 기업-대학 순환형 교육체제 구축과 인력 수급 안정화 7-3. 지역 교육·문화 창달을 위한 지역 네트워크 허브 구축
8. 고등교육 재정확보 및 투자개선	8-1. 고등교육 재정의 확충과 안정적 확보를 위한 법적 제도 마련 8-2. 대학재정 자원의 다각화 지원 8-3. 대학 재정운영의 효율화 및 전문성 강화
9. 고등교육 국제화를 통한 국제경쟁력 제고	9-1. 외국인 유학생 및 학자 유치를 위한 지원 서비스 강화 9-2. 대학의 국제화 추진을 위한 질 제고 및 관리 체제 구축 9-3. 글로벌 네트워크의 활성화와 교육협력사업의 효과 증진
10. 평생학습 시스템 구축	10-1. 일과 학습이 병행 가능한 학위과정 및 학사 시스템 10-2. 성인학습자의 학비 지원 및 세제 감면 혜택 10-3. 평생학습 중심대학 확대 및 성인학습 지원 강화

가. 고등교육의 교육력 강화

1) 필요성 및 정책목표

□ 필요성

- 대학 및 대학원의 급속한 증가에 의한 양적 성장에 비해 고등교육의 질적 성과는 낮은 수준
 - 국제비교에서 중등교육 학업성취도는 최상위권이지만 고등교육에 대한 평가는 하위권
 - ※ 스위스 IMD(2011년 국가경쟁력보고서): 한국 국가경쟁력은 22위, 교육경쟁력은 29위, 그러나 대학교육은 59개국 중 39위
- 고등교육의 질적 경쟁력을 뒷받침할 교육 인프라 취약
 - 대학교원 1인당 학생 수가 OECD 평균의 2.2배, 시간강사가 대학 전체 수업시수의 36%를 담당하는 등 교육여건 취약
 - ※ '07년 교원 1인당 학생 수 : 한국 32.7, OECD 평균 15.8, 미국 15.0, 일본 10.4
 - 우수한 교원의 유치 및 교원의 교육성과 제고를 유인하는 성과시스템 미흡. 업적과 상관없이 근무연수에 따라 자동승급, 교육역량 향상을 위한 동기유발 제한
 - ※ '07년~'10년 31개 4년제 국공립대의 전임교원 이상자 승진심사 통과율 98.9%
- 현재 대부분의 대학에서 교원업적평가 시에 교육보다 '연구업적'에 더 많은 비중을 두고 있어서 학부교육이 소홀히 운영되는 현상 발생
 - 연구에 대한 업적평가는 세밀화·계량화되어 있는 반면, 학생의 강의 평가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교육평가는 경시되고 있는 실정
- 대학생을 위한 기숙사, 유비쿼터스 학습 지원체제 등 교육여건 미비
 - 대학생 기숙사 수용률이 18.3% 수준에 불과하여 지방 출신과 저소득층 학생들이 주거난을 겪고 있으며, 사립대의 경우 기숙사비의 상승으로 가계 부담이 늘어나고 있는 실정

□ 정책목표

- 대학·대학원의 교수·학습 기능 강화
- 대학·대학원 교육의 내실화를 통해 대학·대학원의 교육프로그램을 국제적 통용이 가능한 수준으로 향상
- 기숙사 수용률을 점차적으로 확대하여 대학·대학원생의 생활환경 개선

2) 정책추진 경과 및 현황

- 1990년대 중반 이후 다양한 재정지원사업을 통한 대학교육 발전 노력 전개
 - ※ 대학재정지원사업 규모 비약적 확대: 18,469억('01) → 63,952억('09) (통계청, 2010)
- 2008년 대학교육역량강화사업 신설, 이전의 대학재정지원사업과 차별화
 - 대학의 교육역량 및 성과를 측정·평가할 수 있는 객관적·정량적 지표를 활용한 공식에 따라 지원 대상 대학 선정 및 재정 지원
 - 학부 수준의 교육역량 강화, 대학의 자율성 제고와 대학 간의 경쟁 촉진 목적
 - 교육여건 및 성과를 반영하는 '선택과 집중' 원칙 강화
 - 선정대학에 대해서는 교육과정 개편, 교육 및 실습활동 지원, 교육여건 개선 등 자율적 교육역량 강화 지원

<표 III-3> 대학교육역량강화사업 선정 대학

2009년	⇒	2010년	⇒	2011년
88교/196교(44.9%)		88교/199교(44.2%)		80교이내/200교(40%)

- 학부교육 선진화 선도대학(ACE) 지원 사업
 - 학부교육의 전체적인 질과 경쟁력 향상을 위해 '잘 가르치는 대학' 모델의 확산을 목표로 도입
 - 선정된 대학교는 4년간 약 30억 원씩 지원
 - '10년도 11개교, '11년도 11개교, '12년도 3개교 등 총 25개교 선정·지원

3) 성과와 문제점

□ 성 과

○ 학부의 기초교양교육 강화

- 인문교양과 전문기술을 갖춘 융합인재 양성을 위해 융·복합 교양교육 프로그램을 대학에 제공하여 활용 유도

※ ('11) 대교협·서울대·한양대·성균관대 컨소시엄으로 기초교양교육센터 구축 및 프로그램 개발 → ('12) 개발된 프로그램 대학 제공·확산

○ 학부교육 선진화 선도대학(ACE) 평가를 내실화하고 우수성과 확산

- 수업의 질 관리 체계 개선, 교수업적 평가 개선, 교육과정 개편 등 총체적 학부교육 시스템 개선 평가
- 컨설팅 위주의 중간평가(11개 대학 대상)를 통해 대학의 자체 목표 달성을 지원하고, 우수모델을 발굴하여 타 대학으로의 확산 유도

○ 대학의 여건을 고려하여 교육역량강화사업의 선정방식과 평가지표 보완

- '12년부터 교육역량강화사업을 국·사립을 구분하여 선정·지원
- 예체능계 취업률 보완 및 남·여 취업률 차이 반영 등 평가지표 개선

□ 문제점

○ 대학교육의 사회적 적합성 부족

- 사회경제적 수요를 반영하지 못한 학과체제로 인력수급 불균형 야기
- 그간 대학은 산업 및 사회 변화보다 대학 편의를 고려하여 학과 증설

※ 평균 학과 수: '90년 37.5개→'08년 61.6개(1.6배 증가)

○ 산업계 수요를 반영하지 못한 교육과정 운영 등으로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인력 양성·공급에 한계(skill mismatch)

- 산업현장에서 요구하는 지식, 역량과 대학 교육과정의 연계성 부족
- ※ 교과목의 산업수요 일치도('08): 자동차 분야 61%, 건설 엔지니어링 65%
- 전문대학의 전공심화과정을 통한 학사학위 수여, 유사한 학과체제 등으로 4년제 대학과 전문대학 간 차별성 부족

- 등록금 인하, 학과 구조조정에 따른 교양교육의 축소
 - 교양교육이 교육역량강화사업, 학부교육 선진화 선도대학 지원 사업 등 각종 대학평가에서 학부교육 내실화의 척도로 활용됨에도 개편 대상 1순위로 거론
- 대학역량강화 평가지표의 타당성 문제
 - 취업률, 대학생 충원율, 등록금 등 평가 지표의 개선 필요성 대두
 - 대학의 특수성이 반영되지 않는 정량적 평가의 한계점 존재
 - 대학별로 가중치 달성이 쉬운 지표에 역량을 집중하다 보니 각 대학별 정책이 유사하게 마련되는 상황 발생
- 재정지원 방식의 한계
 - 정부 주도의 하향적 재정지원, 평가 기반 시장형 방식 채택, 특정 분야의 사업단 중심 지원 등으로 인해 대학의 교육역량을 제고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는 비판

4) 세부과제

가) 학부교육 내실화를 통한 대학 교육력 강화

- 대학의 교수-학습 기능 강화
 - 학업지도(Academic Advising)라는 정규 교과목 개설·운영 권장
 - ※ 목포대 : 학업지도(Academic Advising)라는 정규 교과목을 개설해 교수와 학생이 적어도 1주일에 한 번은 진지한 대화의 장 마련. 신입생에게는 MVP(MNU Vision Program)라는 대학 비전 갖기 프로그램을, 졸업생에게는 MPP(MNU Pride Program)라는 자신감 갖기 프로그램을 정규 교과목으로 편성·운영 중
 - 국가 및 국제 수준의 교수-학습 우수사례 벤치마킹 장려로 우수사례 확산기제 마련
 - 학생 강의평가 결과를 대학 홈페이지에 공개 권장

※ 학부교육 선진화 선도대학 지원사업 : 강의평가 공개여부를 평가지표로 활용

- 재정지원사업 평가 시 교수학습지원센터 운영 실적 및 성과 중시
- 학문분야별 교육목표 및 성과기준 설정, 분야별 평가개선안 제시

○ 대학교수 교육력 제고를 위한 교원제도 혁신

- 교수평가제도 활성화 : 다양한 학생 지도 활동, 교수법 개선, 학생 취업지원 활동, 현장 실습 및 산학협력 활동 등 교육 업적의 비중을 크게 늘린 인사 및 성과급 제도 마련·시행
- 강의 평가결과를 홈페이지에 공개(공개비율은 대학 자율로 결정)
- 교수 승진심사 엄격화 등을 통해 교수 성과시스템 개선 : 승진심사 시 교육력과 연구력을 대학특성에 따라 차등 적용(연구중심대학은 연구력에, 교육중심대학은 교육력에 더 비중)
- 대학(학부) 교수 승진 시, 학생 강의평가 점수 반영 필수화(일정 비율 이상) : 연구실적과 함께 학생의 강의평가 결과를 승진심사에 반영하도록 재정지원기준에 반영
- 현행 호봉제를 교육·연구 성과에 따라 연봉이 결정되고 누적되는 성과급 연봉제로 전환
- 교수 1인당 학생 수를 OECD 수준으로 개선 : 연차별 교수 1인당 학생 수를 대학생 맞춤형 장학금 지원에 연계 반영

○ 시간강사제도를 ‘강의연구교수’ 제도로 전환

- 시간강사제도를 전면 폐지하고, 대학 비정규직 교원제도를 ‘강의교수’ 제도로 전면 전환
- 최소 2년 계약제로 운영. 고등교육법의 교원 범위에 포함하여 자격과 권한 인정
- 교육의 질 제고를 위해 대학의 비정년 교원의 보수 현실화
- 비정년 트랙 교수, 강사에 대한 학생의 강의평가 결과를 재임용에 적극 반영

○ 교육의 질 제고를 위해 대학의 비정년 교원의 보수 현실화, 정규직 임용 확대

- 비정년 트랙 교수, 강사에 대한 학생의 강의평가 결과를 재임용에 50% 이상 반영
- 교원확보율을 단계적으로 확대 : 총액인건비제도를 활용하여 우선적으로 교원확보율을 높이도록 유도하고, 미흡한 대학에 대해서는 재정지원 대상에서 제외

나) 직업교육 강화로 대학생 직무역량 제고

- 학습성과와 직무능력 중심의 ‘교육력지표’를 개발하여 대학생의 학습력 제고, 이를 바탕으로 직무능력인증제 도입
 - 학습성과, 교육성과 등 ‘교육력지표’ 중심 대학평가 개발·시행. 대학교육을 이수한 후 갖추어야 할 지식, 기술, 소양, 취업률, 직무능력, 교육만족도 등 반영
 - ※ 미국의 CLA(Collegiate Learning Assessment), 호주의 GSA(Graduate Skills Assessment) 등 시행
 - ※ 직원 채용 시 직무능력 평가제도 반영하는 기업에게 인센티브 제공
- 대학 간 창의적 교육경쟁과 학습 촉진을 위한 철저한 학습관리 및 평가체제 운영
- 대학생 ‘직무능력시험’ 제도 도입 :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주도로 대학생과 졸업생을 대상으로 공통 직무능력시험과 분야별 직무능력 시험 도입, 점수결과 인증제 실시
 - 전공분야별로 직무능력시험 응시율과 결과를 정보공시에 반영

다) 대학원교육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연구교육 활성화

- 대학원 교육력 강화
 - 교수가 연구실적에만 치중하지 않고 학교교육 및 수업에도 관심을 집중할 수 있도록 교수 업적평가 시 교육·수업의 비중 점차 확대

○ 대학원 교육체제 개편

- 부실하게 운영되는 대학원대학 및 대학원의 전공 구조개혁 추진
- 대학원의 자율적인 구조조정 유도 : 선택과 집중 및 특성화 유도
- 대학원 질 제고를 위한 재정지원 개선 : 대학원교육 선도모델 개발·운영 지원, 지원대상의 변화(기관 → 프로그램 → 개인), 특히 자율적 구조조정과 취업률 향상, 평가를 통한 정원관리 등
- 학위과정 다원화(석사학위 중심 대학원 육성)
- 대학원 유형·학문분야에 따른 학위명 재정비, 정부 대학원 전담조직 확충

○ 대학원 질 관리체제 확립

- 대학원 입학 조건 강화 : 대학원 전략별 입학정책 수립·운영, 외국인 학생 선발요건 강화(어학요건, 학력요건 심사), 대학원 입학자격시험(K-GRE) 도입
- 석·박사 학위과정의 설치기준 강화 : 전임교원 확보율, 전임교원 강의율, 교수연구실적, 강의평가 실적 등 강화된 기준 반영
- 평가 활용자(user)를 고려한 대학원 전공별 평가체제 구축 : 학생·학부모·기업 등을 위한 평가/ 정부 재정 지원을 위한 평가/ 대학원 자체 역량 평가/ 대학원 평가인증형/ 민간기구 평가 등

○ 국내 박사 최소할당제 도입

- 맹목적인 외국박사 선호현상을 완화하고, 시간강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국가의 교육, 연구기관에 국내 박사 최소할당제 도입
- 우선적으로 국립대학, 국책연구기관(정부출연(연))부터 할당제 도입 추진
- 국내 박사과정 프로그램의 질 제고의 계기로 활용

라) 교육프로그램 운영 유연화

○ 학사운영 및 학위체제 유연화

- 다양한 형태의 학위제 도입 : 사회와 기업이 요구하는 고급수준의 직무수행 능력 취득이 장단기 과정을 통해서 가능할 수 있도록 다양한 학위 유형 도입
- 시간제·계절제 등록 확대, 학생 스스로 디자인하는 자율 전공 활성화
- 복수전공제도 활성화 및 전공분야 취업전망이 일정 기준 이하인 경우 전공 변경 허용
- 수업연한 중심의 학위수여 제도 폐지, 학위별 최소 이수학점제 도입 : 융복합 학문의 활성화, IT 기술 발달 등으로 인해 새롭게 출현할 수 있는 다양한 전공 개설 촉진
- 자격증, 선행학습 등에 대한 인정제도를 도입하여 성인학습자의 고등 교육 기회 확대

○ 대학별 연계·협력 체제 확대

- 대학 리그 형태의 네트워크화와 대학 간 구조조정 및 학사운영 교류 지원·촉진
- 교육의 질 관리를 전제로 한 대학네트워크 내 공동학위제 적극 도입

마) 학습환경 및 생활환경 개선⁴⁾

○ 맞춤형 책임지도제, 학생 맞춤형 학습·진로·재정 지원체제 구축

- 입학에서부터 졸업 때까지 학교와 교수가 책임지고 교육하는 ‘맞춤형 책임지도제’ 도입
- 모든 대학에 학생지원센터 설치 의무화, 운영 내실화
- 대학생 맞춤형 학습관리 시스템, 맞춤형 진로지원 시스템 개발·운영, 맞춤형 재정지원 시스템 개발·운영

4) 미래기획위원회(2012: 162-163)에서 참조.

- 교수 1인당 학생 수 연차적 개선
 - 모든 대학을 대상으로 향후 5년 동안 교수 1인당 학생 수 개선계획을 세워 이를 달성한 대학에 한하여 등록금 지원 연계 추진
- 대학 도서관 확대, 실험실습 장비 선진화
- 기숙사 확충 등 생활환경 개선 지원
 - 대학생 기숙사 건립과 운영 지원 : 지역별 공동 기숙사 건립 시 재정 지원 확대

나. 연구경쟁력 제고 및 연구중심대학 육성

1) 필요성 및 정책목표

□ 필요성

- 대학원의 급속한 증가에 따른 양적 성장에 비해 질적 성과는 항상 필요
 - 논문 피인용도 등 질적인 성과 면에서 여전히 경쟁력 정체
 - ※ 우리나라 SCI 논문 피인용 횟수: ('03) 2 .50/29위 → ('05) 2.79/30위 → ('09) 3.47/30위
 - ※ 2010년도 The Times 대학평가 국가별 200위권 내 대학 수: 미국 72개교(1위), 영국 29개교(2위), 중국 6개교(7위), 일본 5개교(10위), 한국 4개교(11위)
- 고등교육의 질적 경쟁력을 뒷받침할 연구 인프라 취약
 - 연구역량을 뒷받침할 핵심 연구인력의 해외 유출 심화
 - ※ 한국인 미국박사학위 취득자 미국체류 계획(NSF): '00년 58.4% → '07년 68.3%

□ 정책목표

- 연구중심대학의 연구력 신장을 통해 글로벌 경쟁력 확보

- 교육자·연구자 단위의 재정지원 확대로 연구동기 강화 및 우수 교육자와 연구자 확보 경쟁 촉진
- 우수 연구 인력과 자원이 모이도록 연구 환경 개선

2) 정책추진 경과 및 현황

- 1997년 교육부 교육개혁위원회의 ‘연구중심대학 육성 방안’ 제시
- 1999년 BK21(Brain Korea)사업 추진
 - 대학 학사구조의 획기적 개혁을 목표로 한 대학원 육성에 초점
 - 대학의 교육 및 연구력 강화
 - 미래 국가 발전 핵심 분야의 연구 촉진 및 인력 양성
 - 논문의 질 향상을 위해 각종 평가지표에 SCI 등재기준을 사용하여 국제적 표준에 부합하도록 하는 동시에 연구비중앙관리제를 도입하여 투명한 연구비 집행 도모
- 2007년 2단계 BK21 사업 발주
 - 대학원 연구인력 양성 지원 사업의 전개
 - 연구개발보다 인재양성에 목적을 두고, 지역중심의 분권적·상향식 사업 추진
 - 지역 우수대학원 육성사업을 신설하여 지역산업과 연계한 지방대학 육성에 박차
- 2008년 WCU(World Class University)사업 추진
 - 세계적 수준의 대학 및 대학원 육성을 위한 사업으로 외국 석학 초청을 통해 교육 및 연구개선을 시도하고 발전 도모
 - Brain Drain에서 Brain Gain 전환을 위한 방안 마련
 - 창의적 실용지식 창출 역량 제고를 통한 미래 국부의 원천 확보
- 2011년 ‘제2차 과학기술인재 육성·지원 계획’
 - 세계 수준의 연구중심대학 육성(WCU) 사업을 통해 신성장동력 및 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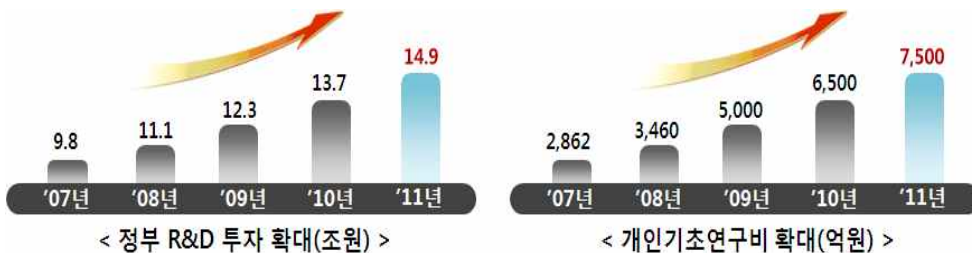
복합분야의 연구 지원

- 석사 중심의 대학원 운영체제를 박사과정 중심으로 개편
- WCU와 BK21사업으로 분산된 대학원 재정지원사업을 WCU와 GPS(Global Ph.D Scholarship) 사업 체제로 통합(학과단위의 연구역량 강화 사업인 WCU, 대학원 단위의 연구역량 강화 사업인 GPS)

3) 성과와 문제점

□ 성 과

- WCU, BK21 등 주요 대학 재정지원사업을 추진하여 대학의 연구역량 강화
 - QS평가 세계 200대 대학 : ('07) 2개교 → ('11) 5개교
 - WCU사업의 성과 : 5년간 총 8,250억 지원(연 1,650억 원), 해외우수학자 유치('11년 342명), WCU 참여교수의 NSC(Nature, Science, Cell) 게재 논문 수('08.12~'10.9) 11편
 - 과학기술대학(원)(KAIST, GIST, DGIST, UNIST) 특성화 추진
 - 서울대 법인화 추진 :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10.12) 및 시행령('11.9) 제정
- R&D 투자 확대
 - 지난 4년간, 중장기 투자계획(577 Initiative)에 따라 정부 R&D투자 지속 확대
 - GDP 대비 총 R&D(정부+민간) 비중은 '10년 3.74%로 세계 3위 수준
 - 정부 R&D투자를 '08년 11조원에서 '11년 15조원 수준으로 확대



[그림 III-1] 정부 R&D 투자 및 개인기초연구비 수준

□ 문제점

- 학문간 융합·협동 연구에 대한 대학교원의 인식이 부족하다는 지적 제기
 - 우수한 박사과정 학생이 외국으로 유학을 감에 따라 국내 대학원의 연구역량 저하 심화
 - 근원적인 인센티브 제공이나 연구시스템 설계를 위한 접근 필요
- 연구자 개인의 윤리의식 부재로 중복개제, 무단도용 등의 문제가 국내 연구자의 연구역량 향상에 걸림돌로 작용
 - 연구 성과의 공개 및 평가 등이 보편화되고 국내외 대학 간 교류가 심화되어감에 따른 투명한 연구윤리의 확립 필요

4) 세부과제⁵⁾

가) 대학원의 학문연구 경쟁력 강화

- 연구역량 우수대학 및 우수 석·박사 과정생 집중 지원
 - 연구 잠재력이 높은 대학에 연구비, 외국인 교수 초빙경비 등을 포괄적 펀딩 방식으로 기관단위 집중 지원, 우수 석·박사 과정생 펠로우십 지원
 - 대학원 교육선도 모델 개발·운영 지원, Post-Doc. 제도 활성화 및 재정 지원 확대
- ‘조인트 어포인트먼트(Joint Appointment)⁶⁾’ 형태의 교수 채용 확대 : 외국 대학교수 국내 교수 겸직, 국내 대학 간 겸직도 허용
 - ※ 사례 : 고려대 경영대는 최근 현직 미국 명문대 교수 2명(모건 L. 스윙크 미시건주립대 교수와 애릭 린드플레시 위스콘신·메디슨대학 교수)을 새로 임용함. 두 교수는 올해 여름학기부터 1년에 한 과목씩 강의를 맡게 됨. 고려대 교

5) 미래기획위원회(2012: 151-155)에서 참조.

6) 미국에서는 보편화한 제도로, 한 교수가 두 개 대학에 동시에 소속되는 형태. 한국식으로는 겸직교수에 가까움.

수와 공동 연구를 수행하는 한편 고려대 석·박사 논문 지도도 할 예정임

- 미래 선도기술 분야 중심 산학연 연구협력 강화
 - 미래사회 핵심 선도기술 분야에 산학연 연구협력을 통한 미래 핵심 기초·원천 기술 개발
 - 대학과 연구기관의 우수인재, 연구 인프라 등의 연계를 위해 산학연 공동연구실 설치 및 특화된 전문대학원 설립 지원
- 우수 외국인 교수 유치 및 국내외 연구협력 활성화
 - 우수 외국인 교수 초빙 및 정주여건 개선 등을 통해 외국인 교수 유치 확대 지원, 국내외 교수·연구자 간 네트워크 활성화

나) 글로벌 수준의 연구중심대학 육성을 위한 재정지원 사업 재구조화

- 국제적 수준의 연구중심 대학 10개교 집중 육성
- 분야별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재정지원 사업 재편

<표 III-4> 대학원 재정지원 재편 방향

현 행		재편 방향	비고
BK21*	· 대학원생 및 신진연구인력 지원으로 학문후속세대 양성 · 1단계: 1조 3421억원('99~'05) · 2단계: 2조 300억원('06~'12)	· '12년 사업 종료시 BK21과 WCU를 통합하여 연구중심 대학 육성사업에 지원 · 단순 장학금 지원사업이 아닌 연구성과를 제고하는 사업으로 재편	통합
WCU**	· 세계수준의 연구중심대학 육성 · 규모: 약 5,400억원('08~'12) · 학과 및 전공단위 지원		
GPS***	· 우수 연구인력 장학금, 연구비 지원 · 95억원('10), 94억원('11), 155억원('12) · 개인 단위 지원	· 대학원생 지원사업으로 유지	존치

* Brain Korea ** World Class University *** Global Ph.D Scholarship

다) 미래 유망분야 창의인재 양성 및 선제적 투자 강화

○ 미래 유망분야 창의인재 양성

- 지식기반 첨단융복합 시대를 선도할 핵심 창의인재 양성 추진 : 문화 콘텐츠·S/W·디자인 등 미래 고부가가치 시장에 대응한 창의인재 (Smart Creator) 양성
- 미래 산업수요전망에 따라 대학별로 강점분야 중심 전문대학원을 육성하는 등 고급인력 양성 확대, 특히, 기상·환경 분야 등 녹색산업 고급인력 양성
- 의료, 법률, 경영·금융·물류 전문가 등 고부가가치 서비스 전문인력 양성
- 창조적 지식생산 기반 구축 등을 위해 인문사회 연구인력 양성

○ 융·복합 학문 등과 혁신 학문 분야에 대한 선제적 투자 강화

- 분과학문 간 경계를 허물고 학제 간 융합연구를 활성화하며, 인문학과 자연과학의 소양을 고루 갖춘 통섭형 인재양성을 위한 학과구조 설계·운영
- 학과/학부 소속 교수제도를 단과대, 계열별 또는 본부 교수단으로 개편하여 현장 수요에 따라 학과/학부의 신설 및 통폐합 촉진
- 융·복합 기술 개발 등과 같은 신성장동력 분야를 발굴하여 국가전략 분야의 고급융합기술 인력 양성을 지원하고, 이를 위한 산학연 연계·협력체제 강화
- 대학과 연구기관의 우수인재, 연구 인프라 등의 연계를 위해 산학연 공동연구실 설치 및 특화된 전문대학원 설립 지원 확대

라) 안전한 연구환경 조성 및 연구비 지원 확대⁷⁾

- 대학 및 연구기관의 연구실 환경개선과 안전한 연구문화 정착을 위하여 연구실 안전윤리 제정 및 안전교육 프로그램을 교과목으로 개설하여 이수 의무화(on-line)
 - 우선적으로 이공계 대학원생 석·박사 과정생을 대상으로 추진
- 전임교원 연구비 지원을 확대하고, 국공립 및 사립대 간 연구비 지원 편차 완화
 - ※ 전임교수 1인당 연구비('11년) : 약 7,000만원, 국공립대 1억 300만원, 사립대 5,800만원
- 기관 간, 연구자 상호간 국제 교류 및 국제 공동연구 지원 사업을 통해 대학과 연구기관의 연구 활동 국제화 지원
- 대학의 연구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국내외 학술정보 관리 및 유통체제 정비 및 학술정보 제공 확대
- 대학연구 현장의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하는 동시에 연구비 집행의 투명성 제고
 - 규제완화와 집행의 자율성을 높여 연구자가 불필요한 규정에 얽매이지 않고 연구에 몰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되, 연구비 부정사용에 대해서는 엄격히 책임을 묻음.

다. 대학입학제도 개선⁸⁾

1) 필요성 및 정책목표

☐ 필요성

7) 미래기획위원회(2012: 164-165)에서 참조.

8)미래기획위원회(2012: 111-116)에서 참조.

- 2013학년도 대입전형의 수가 3,000여 가지가 넘고, 전형요소의 다양화로 학부모뿐만 아니라 고교교사도 진학지도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이러한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대입전형을 간소화할 필요가 있음.
- 대학마다 서로 다른 지원서 양식을 사용하고 있고, 제출해야 하는 서류도 다양하여 수험생의 입시 준비 부담 증가하였음. 입학사정관제에서는 공통원서양식을 부분적으로 활용하고 있음.
- 현재 입시전형료는 평균 7만 원 선임. 수시와 정시 등 수험생이 중복 지원하는 것이 일반화되어 있는 상황에서 큰 부담이 되고 있음. 따라서 한 번의 원서작성으로 대입지원이 완결될 수 있는 공통원서접수 시스템 구축이 필요함.

□ 정책목표

- 대입전형 간소화를 통해 학생, 학부모 입시부담 경감
- 대입전형의 공정성·형평성 제고

2) 정책추진 경과 및 현황

- 2000년대 대입제도 특징 비교
 - 국민의정부 : 주로 수능시험 위주로 대입전형 진행 ⇒ 사교육비 증가
 - 참여정부 : 고교내신(의도적)과 논술(비의도적) 비중 확대 ⇒ 사교육비 증가
 - 이명박정부 : 성적위주 입시 해소 위해 입학사정관제 확대 ⇒ 대입전형의 복잡화와 컨설팅 증가
- 2008학년도 수능등급제 도입 후 시행 1년 만에 전격 폐지
- 대입자율화의 기초 하에 현 정부에서 입학사정관제 본격 도입·시행
 - 입학사정관제 법적 근거 마련('12.1.26)

- 5년간 약 60여 개 대학, 총 1,505억 원 지원
- 2010년 고교 졸업생 100명당 79.0명이 대학 진학(통계청, 2010). 이는 10년 전(66.6%)에 비해 13.6% 상승한 수치에 해당
 - ※ OECD 주요국가 대학 진학률('08): 미국(68.6%), 일본(68.1%), 독일(42.7%)

3) 성과와 문제점

□ 성과

- 대입제도 일반적 성과
 - 우수한 인재 선발을 위한 다양한 전형 도입
- 입학사정관제 성과
 - 교과와 비교과 간의 균형 있는 교육 도모, 진로 활동 활성화, 학생들이 봉사/동아리 등 교내의 다양한 교육프로그램과 활동에 적극 참여
 - 대학 차원에서는 학생선발에 있어 대학자율 및 적성과 소질, 건학 이념 및 교육목표를 고려한 선발 확대
 - 입학사정관전형 합격생의 높은 학업성취도 및 전공만족도와 낮은 중도 탈락율

□ 문제점

- 수시모집, 입학사정관제의 확산으로 대입전형 복잡화
 - 2010학년도 97개 대학 24,622명, 2011학년도 126개 대학 약 4만 명 이상
- 전형의 복잡화로 인해 대입 진학 컨설팅 사교육 확대
 - 온라인뿐만 아니라 오프라인에서도 입시학원들이 ‘면접 컨설팅’이라는 명목으로 입학사정관제 자기소개서, 포트폴리오, 면접 준비까지 대행해주며 10~50만원의 비용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국·영·수 위주의 시험 탓에 입시학원으로 몰리는 사교육을 막겠다고 입학사정관제를 도입했으나, 오히려 입학사정관제 컨설팅 업체까지 가세해 사교육 시

장이 더욱 커지는 현상 발생

- 입학사정관제 확대에 의한 대입제도 공정성 시비, 계층 간 불평등 우려
 - 입학사정관의 신분 불안정(높은 비정규직 비율)과 연륜과 경력을 갖춘 전문가 부족으로(20~30대가 전체의 73.6%) 공정성 시비
 - 입학사정관제가 교육의 양극화를 초래한다는 지적도 있음. 다양한 분야의 우수 학생을 선발하기 위해 도입된 입학사정관제가 특목고 출신 학생과 고소득층 자녀에게 상대적으로 유리한 측면 부각

4) 세부과제

가) 학생 맞춤형 대입제도

- 진로 맞춤형 대입제도 도입
 - 전공계열·모집단위별 진로 맞춤형 전형 개발 및 도입 지원
- 모집단위별 전형 특성화와 선수과목 구분: 전형의 간소화와 타당성 동시 확보
- 성인 맞춤형 대입제도 도입
 - 전문계열 고교 졸업 후 사회생활을 경험한 지원자 중심의 재직자전형
 - 수능, 논술, 내신 등의 전형요소와 무관한 별도의 성인대상전형: 40~50대를 위한 시니어마이스터전형, 60대 이상을 위한 실버전형

나) 입학사정관제 개선

- 기회균형선발에 적용
 - 입학사정관제를 농어촌특별전형, 사회적배려대상자전형, 취업자전형 등 대입기회의 균형을 실현할 수 있는 ‘약자 보호 정책(affirmative action)’으로 전환
 - 입학사정관제 지원예산의 대부분이 ‘입학사정관’이라는 전문가(교직원) 양성에 사용되고 있는데, 국고 활용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개

별 대학의 교육목적에 부합하는 인재선발보다는 국가·사회적 가치에 부합하는 인재선발에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

○ 추수관리 시스템 정착

- 기회의 균형이 결과의 균형으로 이어지도록 대학 입학 이후 맞춤형 학습지원 확대로 학생 성장 지원
- 기회균형선발로 입학한 학생의 경우, 일반적으로 다른 전형에 비해 학업성취도 수준은 차이가 남. 이러한 차이를 전제로 선발하였으므로 그 차이가 없어질 수 있도록 입학 이후 철저한 학생 관리를 통해 우수한 성적으로 학업을 마칠 수 있음.

다) 대입전형 간소화를 통해 학생·학부모 부담 경감

○ 전형방식의 간소화·투명화 : 전형방식(전형 절차) 단순화, 전형기준 공개

- 대입전형을 크게 유형화(범주화)하고 유형별로 전형요소 통일 : 정시는 수능중심 전형(수능우선선발전형)으로 일원화, 수시는 내신중심 전형(학생부우수자전형)과 논술중심 전형(논술우수자전형)으로 이분화
- 전형요소의 간소화 : 일반전형은 전형요소를 최소화, 전형기준과 전형 지표 통일. 입학사정관제에서 반영하는 전형요소 최소화

○ 공통원서접수 시스템 구축

- 한국형 UCAS*인 ‘대학입학지원센터’(가칭) 설치·운영
- 대입전형 관련 정보와 자료 확보, 대입컨설팅, 전공 관련 진로 확인과 진로컨설팅, 전형서류 접수, 합격 통보 등을 종합한 대입 관련 포털 서비스 체제 구축
- 지원자가 여러 대학을 각각 지원해야 하는 복잡한 절차와 부담을 ‘지원센터’를 통해 한번만 지원하도록 함으로써 학생의 응시부담 완화, 대학의 전형절차 간소화 유도

※ 영국의 UCAS(Universities and Colleges Admission Service) : 학생-고교-대학

을 연계하여 학생의 대학 응시 및 진학 대학 결정을 지원하는 독립적인 기관

라. 대학등록금의 합리적 책정 및 지원제도 개선

1) 필요성 및 정책목표

☐ 필요성

- 현재 대학 등록금 총 규모는 연 15조 원이며, 우리나라 등록금은 미국에 이어 세계 2위에 달함. 세계 최고 수준의 대학 진학률과 과다한 대학 등록금은 대졸자 청년실업 증가, 학생·학부모 교육비 부담 증대 야기(미래기획위원회, 2012: 117)
- 현재 학자금 대출이자율이 3.9% 수준이나 대학생의 상환 부담이 여전히 높은 만큼 대출 금리를 소비자 물가상승률 수준으로 추가 인하 필요

☐ 정책목표

- 고등교육의 형평성 실현
- 돈 걱정 없는 대학교육 실현
- 학자금 대출이자 완화

2) 정책추진 경과 및 현황

- 1989년부터 대학 등록금 책정이 자율화된 이후 등록금 수준에 대해서 사립 대학은 등록금 전액을 자율로 정하고 있으며 국립대학의 입학금 및 수업료는 공공요금 관리 차원에서 정부가 결정하고 기성회비만 대학 자율로 결정
 - 현 정부는 대학 자율화 정책기조에 맞추어 등록금 자율책정을 유지하되, 대학 등록금 인상 관련 갈등을 최소화하고 학부모의 등록금 부담

을 경감하는 방향으로 정책 추진

- 현 정부는 ‘빈곤의 대물림을 끊는 교육복지 프로젝트’라는 슬로건 하에 저소득층 가정의 대학생 장학금 지급, 소득연계형 학자금 용자제도 실시를 통해 현재의 대학 등록금 반값으로 낮추겠다고 공약. 대선 직후 2008년 현 정부의 등록금 해법과 관련된 큰 틀은 소득계층별로 차별화된 맞춤형 학비 지원 제공으로 시작
- 2009년 10월 학생 및 학부모의 등록금 부담 해소를 위한 ‘취업후 상환 학자금 대출제도(ICL)’의 시행 전격 발표
 - 등록금 수준을 제한하거나 인상률의 상한선을 제시하는 등과 같이 등록금 수준에 대한 직접적인 규제 정책 활용 대신 학생에 대한 장학금 또는 학자금 대출제도 등과 같이 등록금 부담을 완화하는 정책을 강화하는 간접적인 접근 채택
- 2009년 11월 등록금과 관련된 여러 건의 고등교육법 개정법안 발의되어 현재 국회 계류 중

<표 III-5> 고등교육법 개정 법안 내용

법안명	주요내용
08. 7. 4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138, 김희철의원 등 24인)	· 학교의 설립·경영자가 수업료와 그 밖의 납부금을 당해 연도 직전 3개년 물가상승률 평균의 1.5배 이상 인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서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
08. 7. 31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496, 나경원의원 등 14인)	· 학생장학금 지급 및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등으로 지출되는 학교기부금에 대해 10만원까지 세액공제 하되 등록금 인상률이 3년 평균 소비자물가인상률의 2배를 초과하는 대학은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이를 공시하도록 함
08. 11. 27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2282, 안민석의원 등 17인)	· 등록금 인상에 관한 상한 마련, 국·공립대학의 등록금 차등부과제, 정부의 등록금 기금을 통한 등록금 대납제 등을 실시

08. 12. 15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93048, 권영길의원 등 13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의 설립·운영자는 연간 대학등록금의 총액을 해당 연도 직전 3년간의 전국가구 연평균소득액의 합계액을 3으로 나눈 금액의 12분의 1 이하로 정하고, 그 범위 안에서 학생들의 경제사정에 따라 등록금을 차등 책정하도록 함. · 학교의 등록금 결정과정에 학생대표 등이 참여할 수 있는 등록금심의기구를 설치하고, 등록금 결정과 관련하여 학생대표들의 조정 신청이 있는 경우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시정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함
09. 2. 2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3676, 이성현의원 등 10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09년 2월 2일에는 학교의 설립·운영자가 연간 대학등록금의 총액을 책정하는 때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공시하는 금액 범위에서 책정하여야 함 ·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해당 연도 직전 3년간의 평균 물가 상승률의 1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다음 연도의 대학등록금의 상한을 정하여 매년 9월 공시하여야 하며, 해당 연도 대학등록금 책정현황을 매년 4월 1일까지 공시하도록 함
09. 4. 17 교육관련기관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454. 권영진의원 등 32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등교육기관의 공시대상정보에 등록금 및 학생 1인당 교육비의 산정근거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
09. 4. 17 교육관련기관 정보 공개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454. 권영진의원 등 32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등교육기관의 공시대상정보에 등록금 및 학생 1인당 교육비의 산정근거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
09. 8. 26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5771. 손범규의원 등 12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업료 그 밖의 납부금을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함
09. 11. 9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6491, 김학용의원 등 14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업료, 그 밖의 납부금의 납부방법과 납부시기를 신용카드를 통한 분납 등으로 다양하게 정하여 학생들이 필요에 따라 선택하여 학생과 학부모의 부담을 줄이고, 이를 시행하는 대학에는 정부에서 우선적으로 재정적 지원

출처: 이정미(2009). 대학 등록금 정책의 정치학적 분석. 한국교육정치학회 제27차 학술대회.

- 한국장학재단의 설립과 취업후학자금상환제도 도입
 - 정부 장학금 지원사업은 한국장학재단 통해 운영. 정부는 2009년 5월 7일부터 시행된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9415호, 2009. 2. 6, 제정]을 토대로 한국장학재단 설립
 - 재단에서는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법률 제9935호, 2010. 1.22, 제정]을 토대로 ‘든든학자금’ 운영
- 대학등록금 책정 공개 및 등록금 상한제도
 - 「고등교육법」 제11조(등록금 및 등록금심의위원회)에서는 등록금심의위원회의 설치·운영, 적정 수준의 등록금 책정, 등록금 인상률의 제한, 정부의 고등교육 재정지원 확대 등에 대해서 규정
 - 2011년 9월 15일 신설 또는 개정 조항으로 2012학년도 등록금 책정 및 공개부터 적용
- 대학의 등록금 면제 및 감액제도
 - 2012년 2월 대학의 등록금에 대한 면제 및 감액제도는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규칙(이하 수업료 규칙)」 [교육과학기술부령 제105호, 2011. 4. 22]과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이하 등록금 규칙)」 [교육과학기술부령, 제 131호, 일부개정 2011. 12. 28]을 법적 토대로 함.
 - 2011년 반값 등록금 논쟁이 가열됨에 따라서, 2011년 6월 23일 한나라당은 2012년 1조 5,000억 원 규모의 국가장학금 지원 계획 발표, 이는 국회 예산심의회에서 2,500억 원이 증액되어 총 1조 7,500억 원 규모의 국가장학금 사업 추진

3) 성과와 문제점

□ 성 과

- 취업후학자금상환 제도인 든든학자금 제도(ICL)의 도입으로 등록금 부담 부

분 해소

- 등록금의 인상 규제나 장학금 지원 확대 유도
 - 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을 평가하고 선정하는 과정에서 장학금 지급률이나 등록금 인상률 등을 중요 포괄지표의 하나로 활용함으로써 간접적으로 등록금의 인상 규제나 장학금 지원 확대를 유도하고 있음.
- 장학금 지원액 증가
 - 2007년(979억 원)에 비해 2011년 현재 장학금 지원액(5,218억 원)은 5.3배, 장학금 수혜자는 5.0배 각각 증가
- 등록금 인상률 안정화
 - 참여정부 시기에 높은 인상률(7.4~10.3%)을 보였으나 최근에는 물가상승률 이하
 - ※ 4년제 일반대학 191개교 '11년도 연간 평균 등록금은 국·공립대학 4,430천원으로 '10년(4,403천원) 대비 0.60% 인상, 사립대학 7,686천원으로 '10년(7,514천원) 대비 2.29%인상

□ 문제점

- 세계 최고 수준의 대학 진학률과 과다 등록금은 대졸자 청년 실업 증가, 최고의 학부모 교육비 부담, 학생·학부모 부담 증대 야기

4) 세부과제

가) 대학 등록금 적정화 유도

- 대학의 등록금 하향 적정화 유도, 장학금 확대 자구노력에 대한 정부 지원 확대(미래기획위원회, 2011: 117-118)
 - 대학 등록금 인하 비율과 장학금 확대 비율에 연계한 일정 비율의 정부 지원 실시
 - 대학 운영비 절감 유도, 대학등록금 산정 제도 개선

※ 감사원이 표본조사한 대학 35곳(사립대 29곳, 국공립대 6곳)의 최근 5년간
예·결산 분석 결과 연평균 6,552억 원(대학별 연평균 187억 원)의 차액 발생.
산술적으로만 따졌을 때 등록금의 12.7%에 해당하는 액수가 부풀려진 것(연
합뉴스, 2011.11.03)

- 등록금 상한제 적용 준수 : 인상 경우에도 최근 3년간 물가상승률 이
하로 규제
- 사립대의 과다 적립금 규제 : 등록금 적립 원천적 금지

○ 등록금심의위원회 기능 강화

- 대학별로 운영되고 있는 등록금심의위원회에 참여하는 교직원·학생·
전문가의 비율과 대표성 합리적으로 개선
- 대학 재정이 투명하게 운용되도록 관리·감독 기능 강화

○ 등록금 지원을 위한 연간 부담액은 약 6조 : 정부 4.05조 + 대학 소득연계
장학금 1.95조

- 중산층·서민 등록금 지원액 50% 중 국가 67.5% 부담(전체 등록금
27%, 4.05조)+[추가액]
- 국가 부담액: 전체 등록금의 27%(4.05조)+융자액 차액이자
- 추가 부담액: 이미 지원되고 있는 정부 장학금 0.5조원을 빼고 산정하
면 3.5조+알파

나) 효율적인 재정지원 체제 구축

○ 맞춤형 재정지원 서비스 시행

- 대입전형에서 활동하는 입학사정관처럼 학생의 형편과 사정을 고려하여
재정지원을 종합적으로 상담해주는 장학사정관(또는 재정지원상담사)
배치

○ 재원 규모를 고려하여 일정 수준의 소득하위가구에게 등록금 감면 혜택이
돌아가도록 추진

- 대학생 개인 소득요건에 근거하되, 등록금은 대학에 직접 지원

- 부실대학의 장학금 지원 및 학자금 대출 지원 규제(선택과 집중)
 - 장학금 지원 및 학자금 대출 기준의 단계적 강화를 통한 책무성 강화
 - 신규 입학생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장학금 지원 규제사항을 차년도 입학전형 이전에 공시
- ※ 저소득층 학생은 대학의 부실 판정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

다) ICL(튼튼학자금) 운용 개선 및 이자 부담 축소⁹⁾

- ICL 용자제도 유형 구분 및 운영 방식 개선
 - 다음과 같이 A, B, C 3가지 유형으로 전략적 접근
 - 대출이자 단리 계산, 군복무 기간과 대학 재학기간(4년)에는 이자 공제

<표 III-6> ICL 유형 구분

구 분	주 요 내 용
ICL A형	· 저소득층 서민과 중산층에 대한 등록금 일부 무이자 용자 · 상환조건: 졸업 후 1년 거치 5년 상환. 이때까지 상환하지 못하면 B형으로 전환
ICL B형	· 현행 ICL 방식의 유형. · 상환조건: 졸업 후 취업 전까지는 이자만 부담, 취업 후 원리금 함께 상환
ICL C형	· 최소 거주비·생활비에 대한 용자 · 금리는 4% 수준 이하로 운용

- 용자 대상 범위 일부 확대 : 대학원생 이용 허용
 - 다만, 대학원생 이용에는 이용 범위, 금리를 별도로 적용함. 등록금 외에 최소한의 주거비와 생활비도 일부 용자 허용
- 대출 원리금 소득 공제 도입 : 현재 소득공제 안 됨

9) 미래기획위원회(2012: 121)에서 참조.

라) 대학 기부금 활성화 방안 마련¹⁰⁾

- 기업의 대학기부금 소득공제를 확대 등 기부금제도 개선 : 현재 기업이 대학에 기부하는 시설비나 장학금에 대해 50%의 소득공제를 하고 있는데, 이를 상향 조정
- 기업의 대학 학자금 지원 촉진·조장: 직원과 그 자녀들에게 대학 학자금을 지원하는 기업에 대한 세제혜택 확대 제공

마. 대학 특성화를 통한 경쟁력 강화

1) 필요성 및 정책목표

☐ 필요성

- 지금까지는 대학 및 학과 통폐합, 정원 감축 등 양적인 구조조정에 치중. 앞으로는, 축소지향형 구조개혁이 아닌 대학 특성화와 연계된 구조개혁을 통해 대학의 경쟁력 제고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발전적인 모델을 창출해야 함.
 - ‘대학구조개혁방안’(’04.12)에 따라 대학통합, 정원 감축, 학과 및 학부 감축을 재정지원사업과 연계하여 그동안 추진해 왔으나 아직은 특성화, 경쟁력 제고 등 그 효과가 미약(미래기획위원회, 2012: 123)
 - 보다 강화된 형태의 ‘선택과 집중’ 그리고 효과 검증에 의한 대학 특성화 필요
- 각 대학은 경쟁력 확보가 충분히 가능한 영역을 선택하여 특성화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한 전략과 역량을 집중함으로써 그 분야에서 최고 수준의 경쟁력 확보해야 함.

10) 미래기획위원회(2012: 121)에서 참조.

□ 정책목표

- 특성화 및 전공 구조개혁 등과 연계한 국공립대학 구조개혁 추진
- 전공 특성화와 연계된 질적인 특성화 추진
- 전문대학의 교육특성화를 통해 산업인력을 적시에 배출

2) 정책추진 경과 및 현황

- 문민정부 : 국제전문인력양성지원사업(1996), 지방대학 특성화사업(1997) 도입
- 국민의정부 : 1단계 BK21사업(1999), 국립대학 발전계획(2000)
- 참여정부 : 대학구조개혁 방안(2004.12.28.), 산학협력중심대학사업(2004), 수도권대학특성화사업(2004)
- 이명박정부 : 다양한 특성화의 영역 가운데 대학구조개혁에 중점
 - 구조개혁 추진 체계화(사립) : 정부재정지원제한→학자금대출제한→경영부실대학→퇴출

3) 성과와 문제점

□ 성 과

- 대학구조개혁
 - 대학자체평가 및 대학평가·인증 도입 : ('11) 31개 대학, 35개 전문대 참여
 -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43교) · 학자금대출제한대학(17교) 발표('11)
 - 사립대학 경영컨설팅 지원 : ('10) 36개교 → ('11) 20개교
 - 중대 부정·비리 적발 대학 폐쇄 : ('11) 2개교
 - 구조개혁 중점추진 국립대학 지정 : ('11) 5개교(4개교는 총장 직선제 폐지 등 자체구조개혁 추진 MOU 체결)

○ 2단계 BK21 사업

- 고급 인력 양성 체제 구축을 통한 우수 인재의 육성과 연구력 향상, 국제협력이 증진된 점 등이 긍정적인 성과로 평가받고 있음.
- 인력양성에 사업의 중점을 두으로써, 석·박사과정 학생의 안정적 학업 수행 지원
- 대학원생 장단기 연수 등 국제협력 사업으로 학생들의 국제적 안목 형성 지원

○ 2차 산학협력중심대학사업

- 취업률의 경우 최근의 청년층 취업난과 특히 지방대학 출신이라는 한계에도 불구하고 좋은 취업 성과를 보여, 본 사업에서 보일 수 있는 효과적인 인력 양성 성과라고 판단할 수 있음.

□ 문제점

○ 2단계 BK21 사업

- 사업자체의 특수한 목적이 우수인재의 양성에 있었기에 ‘선택과 집중’의 논리에 치중하였다고는 하나 서울 및 국립대학 그리고 이공계열에 집중하여 사업이 진행되었다는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음.

○ 2차 산학협력중심대학사업

- 사업의 특성화 및 내실화가 부족하고, 사업 추진과정에서 학교와 산업체간 괴리를 좁히지 못하고 있으며, 산학연계를 통해 연구 성과를 사업화할 수 있는 법 규정이 미미함.
- 공용장비센터 운영비의 부족, 참여 교수 및 학생들에 대한 인센티브 부족, 지역 기업체의 낮은 사업 참여율이 지적됨.

4) 세부과제

가) 대학특성화 촉진 및 지원

<표 III-7> 대학특성화 방향과 추진

	현 행(2012까지)	발전 방향
방향	대학의 자율적인 발전전략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학별로 특화된 질적인 특성화 추진 · 대학특성화를 촉진하는 재정지원사업 재구조화 · 전공구조개혁을 통한 특성화 촉진
추진	대학별 자율적 특성화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학 유형별(연구, 교육, 평생학습, 산학협력) 중심대학으 로 특성화하도록 재정지원 사업 재구조화 · 대학 특성화 발전계획과 연계된 재정 지원 · 학과단위 재정지원사업 확대 · 지방대·전문대학 특성화, 산학협력사업 위주로 집중 지원

○ 대학별 특성화 위주 재정지원 확대¹¹⁾

- 연구중심, 교육중심, 평생학습중심, 산학협력중심대학으로의 구조개편 적극 유도
- 각 유형별로 대학 경쟁력 평가기준을 차별화하여 경쟁체제 유도: 소수의 연구중심대학, 다수의 학부(교육)중심대학 육성, 시·도별 1~3개의 평생학습중심대학 육성, 산학협력 중점대학에 집중적인 재정 지원 제공
- 전공 특성화와 연계된 질적인 특성화 지원
- 중간평가 반영 강화: 중간평가를 더욱 강화하여 철저하게 평가한 후 성과 부실 대학, 사업의 지원 중단, 지원 계속 여부 판단

11) 미래기획위원회(2012: 130-131)에서 참조.

유형	특성	수도권	지방대	전문대
교육중심대학		대학교육역량강화사업		
			2단계 NURI사업	
연구중심대학		BK21+WCU 통합사업(GBU)		
		GPS사업		
평생학습중심대학			평생학습중심대학지원사업	
산학협력중심대학			광역경제권선도사업	
		산학협력중심대학사업		

[그림 III-2] 대학 유형별 · 특성별 재정지원 사업 방향

출처: 미래기획위원회(2012: 131).

○ 대학 특성화 촉진을 위한 재정지원사업 재조정

- 대학교육의 질 제고를 위한 교육역량강화사업, ACE 사업(학부교육선진화선도대학) 등이 구조개혁에 치우치고 있으므로 대학 특성화가 촉진될 수 있도록 사업을 재구조화
- '12년도에 사업이 종료되는 BK21과 WCU사업을 통합(가칭 GBU, Global Best University)하여 연구중심대학 육성에 지원하고, GPS사업은 우수 연구인력 지원사업으로 유지
- 정해진 포물러 지표의 획득점수에 따라 대학별로 사업예산을 배분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대학의 전공별 특성화를 추진할 수 있도록 특성화 지원방식의 변경 추진. 특히, 대학 유형별(연구, 교육, 평생학습, 산학협력 등) 중점대학에 전공 특성화를 촉진하도록 집중적인 재정 지원 추진
- 대학단위 재정 지원은 필수사업으로 한정 : 목적과 영역이 분명한 사업 위주 지원
- 학과단위 지원사업 확대 : 미래 유망분야 창의인재 양성, 선제적 투자 분야

나) 국공립대학 구조개혁 추진¹²⁾

- 현재 추진하고 있는 구조개혁에 국립대·사립대를 거의 동일한 평가방식(예: 하위 15% 대학 구조개혁)으로 적용하고 있어 각각의 특성에 맞는 구조개혁을 유도하는 데 한계를 지님.
- 기존 구조개혁 사업을 전면 재평가하여 성과를 점검하고 새로운 모델 제시
 - 국·공립대학 통폐합 및 구조개혁 재정지원사업의 절차와 성과를 엄정하게 평가하여 그 결과를 새로운 국공립대학 구조개혁 사업을 설계하는 데 활용
 - 향후 국·공립대학 구조개혁은 대학 특성화 및 연합국립대학체제 추진에 따른 전공 구조개혁과 연계하고, 궁극적으로 대학의 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절차와 성과 평가기준을 대학 유형별로 제시하여 활용

<표 III-8> 국공립대학 구조개혁 계획

- ▶ 1차('13-'14): 권역별 연합 국립대학체제 준비
기존 통합대학 : 대학 특성화와 연계한 전공 구조개혁
- ▶ 2차('15-'16): 권역별 연합 국립대학체제 추진
전체 전공 구조개혁(권역별 연합국립대학체제 추진에 따른 국립대학 내부의 전공 구조개혁)
- ▶ 3차('17년) : 전체 국립대학을 권역별 연합 국립대학체제로 정착

- 국·공립대학 평가제도 부활을 통해 구조개혁과 특성화를 유도하고, 재정지원과 연계
 - 기존의 평가지표를 활용하되 평가 절차를 간소화하며, 대학의 유형별로 지표 적용을 달리하는 '맞춤형 평가지표'를 개발하여 컨설팅을 중심으로 하는 평가시스템 운영
 - 평가결과 미흡한 대학은 자발적으로 대학 간 통폐합 및 자체 구조조정을 할 수 있도록 컨설팅 제공, 우수 대학은 재정지원을 통해 특성화를 유도하고 그 성과가 가시적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컨설팅 지원

12) 미래기획위원회(2012: 124-125)에서 참조.

- 국·공립대학 재정지원사업의 방향 설정
 - 대학특성화를 촉진하는 재정지원사업으로 전면 재조정
 - 대학구조개혁을 통한 연합 국립대학체제 및 전공 구조개혁 지원·촉진
- 지역과 상생하는 구조개혁 가속화
 - 지역과 대학의 강점분야를 특성화하는 구조개혁 촉진 : 시장성·경제성이 높아 국립대학이 반드시 담당하지 않아도 될 연구와 교육영역은 축소하고, 시장 공급은 부족하나 반드시 필요한 공공재 영역에 대한 교육연구에 집중하도록 교육단위 구조조정 추진
 - 자발적이고 합리적인 구조개혁 추진 : 지역 내 국·공립대학이 연합하여 유사·중복 영역을 통·폐합하고 캠퍼스별 특성화를 추진하는 구조개혁 추진
 - ※ 사례 : 교통·물류 전문인력 양성(충주대-철도대), 교원양성기관 통합(제주대-제주교대)
 - 특성화 및 경쟁력 상승효과가 예상되는 대학구조개혁을 선별하여 집중 지원
 - ※ 사례 : 노동시장의 사회적 수요를 반영한 학과(전공) 통폐합, 변경 등을 추진하는 대학에 재정지원
- 현재 법인화되었거나 법인화를 추진 중인 대학 이외에는 법인화 추진 중단
 - 서울대와 울산과기대의 법인화 정착 : 국립대학 법인화 선도모델 창출
 - 법인화를 추진 중이거나 희망하는 대학의 법인화에 대비, 법인화 수반 종합적인 개혁을 추진하되 정부와 대학의 역할을 분명히 함.
 - 법인화의 추진 주체는 대학이며, 자발적인 법인화 추진계획에 대해 정부는 책무성 확보 차원에서 행·재정적인 지원 여부 판단
 - 나머지 대학에 대해서는 국립대학 구조개혁을 추진하며, 법인화 추진을 중단함.
- 대학의 질 보증을 통한 상시 구조조정 체제 구축
 - 대학 특성화를 지향하는 자율적 구조조정 추진이 될 수 있도록 행·재

정 지원

- 특성화 지원사업을 전공 구조조정, 정원 감축과 연계하여 추진

○ 대학 지배구조 개선

- 국공립대의 지배구조 개선은 공공성과 책무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사립대학은 자율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 기초를 설정
- 국공립대의 경우 교수 직선에 의한 총장 선출을 지양하고, 의사결정 기구로서 대학평의회 활성화를 통해 대학의 공공성과 책무성 강화

○ 국공립대학 인사 및 재정 운영 혁신

- 행·재정 운용은 자율적으로 운영하나 성과에 대한 책무를 요구하는 방향
- 국립대 교원인사제도 개혁 : 총액인건비제도 전체 적용, 교원정원 규제 혁파, 국립대 교원 성과급적 연봉제는 기존의 Zero-Sum 방식에서 추가적 재원확보를 통한 Plus-Sum 방식으로 전환하여 갈등요소 완화
- 국립대 수익사업 수익금을 정부에 귀속시키지 않고, 해당 대학에서 쓰도록 함

다) 산학협력을 통해 고등교육의 사회적 적합성 제고

○ 고등교육 단계별(전문대-대학-대학원)로 특성화된 산업인력양성체제 구축

- 전문대는 산업현장 실무능력을 보유한 전문직업인 양성에 주력
- 대학은 자기주도적 창조적 인재양성에 주력
- 대학원은 신성장 산업을 주도할 고급융합기술 중심의 인력양성 담당

○ 기업체 수요를 반영한 전문기술인력 양성 프로그램 육성

- 조선, 자동차, IT 등 지역 산업 수요에 기초한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
- 계약학과 및 특성화학과 개설, 산업체 현장실습 활성화
- 노동시장 변화 대응* 및 학과 통·폐합, 정원 조정 등 지속적인 학과 체제 개편

※ 다양한 학과 신설 사례 : 웨딩매니지먼트과, 디지털문예창작과, 호텔조리음료과

- 교수업적평가에 산학협력실적의 비중 증가 등과 같이 개별 대학의 산학중심형 대학체제 개편 노력 및 산학협력 성과를 정부 재정지원사업에 반영하는 비율 강화

라) 전문대 교육특성화¹³⁾

- 전문대 육성사업도 대학특성화의 맥락 속에서 지원
 - 기업체와 취업 협약을 통한 맞춤형 기술인력 지원사업에 재정지원 집중
- 전문대 교육경쟁력 강화
 - 전문대 졸업 후 바로 4년제 대학에서 전문 직업교육 프로그램을 계속 공부할 수 있는 여건 마련
 - 우수 전문대 - 4년제 대학 공동학위제 검토. 전문 직업교육 프로그램이 우수한 전문대학과 4년제 일반대학이 상호 협약에 의하여 공동으로 학위를 수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마련
- 기업의 인력양성 지원을 위한 기업대학제도 도입
 - 기업에서 운영하고 있는 비학위과정인 사내대학에 대하여 일정한 요건을 갖추는 경우 기업대학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학위 인정
 - 기업대학의 교육프로그램 운영 및 등록금에 대해서는 고용보험기금에서 지원하는 등 다양한 지원방안 검토
- 전문대를 직업교육 글로벌 허브로 육성
 - 해외 진출 한국기업에 근무할 인력을 현지 대학·산업체와 국내 전문대학이 연계하여 맞춤형 인력으로 양성
 - 해외 산업체의 교육수요는 전문대학의 주문식교육을 통하여 반영하고, 해외 교육기관과 전문대학간의 협약으로 직업교육 지원
 - 현재는 해외진출업체의 인력수요에 맞추어 외국인 유학생을 위탁받아 직업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나 향후에는 해외취업을 원하는 모든 전문대학

13) 미래기획위원회(2012: 135-137)에서 참조.

생을 대상으로 사업 확대

- 해외 진출 한국기업으로의 취업을 원하는 전문대생의 수요를 확대하기 위하여 인턴십 프로그램을 해당대학뿐만 아니라 전문대학협의회 차원에서도 병행하여 운영

※ 인턴십 프로그램은 방학 중 또는 학기 중에도 모두 가능하도록 하며, 인턴십 참여 학생에게는 학점으로 인정하여 학업에 지장이 없도록 함

<표 III-9> 글로벌 허브 육성 지원 사업(Global Hub College)

구분	현 행	발전방향
목적	외국인 유학생을 위탁받아 학교에서 직업기술교육 실시에 중점	해외진출 한국기업에 근무하고자 하는 국내학생 및 유학생 인력양성
대상	외국인 유학생	외국인 유학생 + 국내 학생
인턴십	해당 전문대학의 학생	모든 전문대학의 학생

○ 일과 학습의 병행구조 정착 촉진

<표 III-10> 일과 학습 병행구조 정착 계획

구분	추진 방향
고교 ⇒ 직장 및 전문대 이행 촉진	· 산학협력 취업약정제(협약학과) 활성화 · ‘특성화고(마이스터고)-전문대-산업체-지자체(교육청 포함)’가 공동으로 인력을 양성하여 취업과 연계
직장 ⇔ 전문대(전문학사) 병행 활성화	· 산업체위탁교육 지원 확대 : 전문대학과 산업체가 협약을 통해 재직자 교육을 실시하고 전문학사학위 수여
직장 ⇔ 전문대(학사) 과정 이수 가능 경로 구축	· 전문대학에 ‘학사학위 수여 전공심화과정’을 확대하여 재직자를 위한 전공분야 연계 학사학위 취득 경로 구축

○ 전문대의 성인직업교육 기능 강화

- 학령인구 감소에 대응하여 성인을 새로운 입학자원으로 받아들여 성인 대상 맞춤형 장단기 직업훈련 프로그램 개발·운영
 - 재직 경력자의 계속교육 기회를 확대(work to school)하기 위하여 전문대학의 전공심화과정을 확대하고, 주기적인 점검을 통하여 운영을 내실화
- ※ 전문학사 총 입학정원의 약 5~10%수준까지 확대('11년 기준 약 4.7% 수준)

바. 고등교육 질 보증 체제 구축

1) 필요성 및 정책목표

□ 필요성

- 지난 20여 년간 대학 설립 자율화 정책 추진에 따라 대학의 수가 증가하면서 고등교육 수요자의 요구를 충족시켜 왔으나, 질적인 측면에서는 대학 간 편차가 큰 편임.
- 우리나라의 등록금 수준은 OECD 국가 중 3위로 높은 편이나 대학교원 1인당 학생 수는 OECD 평균의 2배가 넘어 질적 면에서 일부 대학을 제외하고는 세계적 수준에 도달하지 못하는 실정임(OECD, 2011).
- 그간 정부는 대학의 질을 제고하기 위하여 각종 대학평가와 정보공시제를 추진하면서 대학의 책무성을 제고하고자 노력을 경주하였으나 그 효과성이 아직까지 가시적으로 입증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으로 고등교육 시장 개방에 대비하여 질 관리를 통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함.

□ 정책목표

- 대학교육의 질 제고를 위한 제도적 기반 수립
- 대학 자율화 확대에 따른 대학의 책무성 강화
- 대학의 질 보증 체제 구축을 통한 구조 개혁 기반 마련
- 대학의 질을 제고하고 글로벌 경쟁력 있는 대학 육성

2) 정책추진 경과 및 현황

- 대학정보공시제 운영
 - 교육 소비자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대학의 책무성 강화 차원에서

2008년부터 의무적으로 기본적인 운영 상황과 교육 및 연구 여건에 대한 주요 정보를 웹사이트를 통해 공시하도록 하는 대학정보공시제 추진

<표 III-11> 대학정보공시제 도입 현황

일 시	내 용
2004. 12. 28	· 대학구조개혁의 일환으로 ‘대학정보공시제 도입’ 발표
2005. 4. 7.	· 교육관련 정보의 공개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1587)을 이주호 의원이 국회에 발의하여 입법화 추진
2007. 5. 25.	·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이 제정 공포됨 · 특례법 제 2조에서 ‘공개’와 ‘공시’의 개념을 구분함. ‘공시’는 교육 관련 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국민의 정보공개에 대한 열람, 교부 및 청구와 관계없이 미리 정보통신망 등 다른 법령이 정하는 방법으로 적극적으로 알리거나 제공하는 공개의 한 방법으로 규정하고 있어 일반법과는 별도로 특례법을 제정함.
2008. 1. 18.	· 교육정보공시 총괄 및 항목별 관리기관 선정 · 대학정보공시 총괄기관: 한국교육개발원 선정
2008. 11. 4.	·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안) 국무회의 통과
2008. 12. 1.	· 대학 알리미 사이트(www.academyinfo.go.kr) 오픈
2011. 1. 1.	· 대학정보공시 총괄 기관 변경 · 한국대학교육협의회로 이전

○ 대학 자체평가

- 고등교육법 제 11조 2(평가)에 의거하여 학교는 교육과학기술부가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기관의 교육·연구, 조직·운영, 시설·설비 등에 관한 사항을 스스로 점검·평가하여 그 결과를 공시하도록 함(2007년 신설).
- 관련 교육과학기술부령 : 고등교육기관의 자체 평가에 관한 규칙(2008년 제정)
- 현재 대학교육협의회가 주관하여 이루어지고 있으며, 대학의 교육, 연구, 조직, 운영, 시설, 설비 등 각종 사항을 자체적으로 점검하여 그 결과를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를 통해 공시

○ 학자금/재정지원 제한대학 공표

- 2011년부터 대학 구조조정 정책의 일환으로 실시되고 있으며 취업률, 재학생 충원율, 교원확보율, 장학금 지급율 등 명확한 정량적 지표를 통해 한계/부실 대학을 선별하여 자구노력을 촉구할 목적으로 시행되고 있음.
- 2011년 17개 대학 2012년 13개 대학(대학 7개, 전문대 6개)임. 2011년도 제한 대학으로 공표된 대학 중 정원감축, 등록금 인하, 취업률, 전임교원확보율 제고를 위해 노력한 6개 대학은 대출 제한 대학에서 벗어남.

3) 성과와 문제점

□ 성 과

- 대학정보공시제가 운영됨에 따라 교육소비자의 알 권리를 충족하고 대학의 투명성과 책무성을 제고할 수 있게 됨.
 - 총 433개 대학 13개 분야 71개 항목 113개 세부항목을 정기 공시 8차례(2월·3월·4월·6월·7월·8월·9월·11월) 및 수시공시를 통해 공시됨.
 - 사용자 편의성 증진을 위해 영어와 중국어 서비스도 추가됨.
- 대학의 자발적인 참여를 바탕으로 대학 자체평가 자료가 대학 홈페이지 또는 대학정보공시제에 탑재되고 있음.
- 대학의 자발적인 참여를 바탕으로 대학 자체평가 자료가 각 대학 홈페이지 또는 대학정보공시를 통해 발표되고 있음.

□ 문제점

- 고등교육기관 책무성 제고를 위한 정책적 시도가 계속되었으나, 실효성 있는 시스템으로 정착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미래기획위원회, 2012: 138)
- 대학정보공시제의 정착 과정에서 시스템 안정화, 외국어 서비스 제공으로 사용자 편의성 증대되고 있으나 잦은 공시, 공시 내용의 신뢰성, 수요자의

요구 반영 지표가 추가적으로 보완되어야 함.

- 대학정보공시제 항목 중 일부는 대학 재정지원 사업과 연계하여 활용되고 있으나 정보 자료의 신뢰성을 100% 담보하지 못하는 상황 하에서 재정 사업과의 연계 추진은 어려움.

3) 세부과제¹⁴⁾

가). 수요자 관점에서의 대학교육 질 관리

- 수요자 요구를 중점적으로 반영한 대학평가 체제로의 전환
 - 학습성과, 고등직업 기초 역량, 취업가능성(employability), 취업률 등을 적극 활용한 대학 평가의 확대
 - 연구 성과의 기업 이전, 산학협력 성과, 기업 투자 유치 정도 등의 사회적 수요에 부응하려는 대학의 노력을 반영한 평가의 확대
 - 대학교육의 성과 측정을 위한 평가 도구 개발 및 공정한 진단체제 구축
 - ※ 대학교육의 학습성과 측정을 위해 미국(CLA), 호주(GSA), OECD(AHELO)는 시행하고 있음. 현재 우리는 대학생 핵심역량진단(K-CESA)사업을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서 수행 중으로 도구의 안정화를 통해 교육성과 측정, 평가를 광범위하게 적용하여 볼 수 있음.
- 대학교육 투자 비용 대비 효율성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소비자 중심의 정보 제공
 - 대학정보공시제를 활용하여 각종 대학평가 중 수요자 관심 대학평가 항목의 주기적 공개 및 정보 활용성 제고
 - 정부 지원사업의 평가결과를 일괄적으로 공개하여 대학여건에 대한 투명한 정보 제공
 - 국회, 정부, 산업체 등 대학 수요자 맞춤형으로 대학교육에 관한 성과 정보의 종류 및 사용자 편의성 증대

14) 미래기획위원회(2012: 138-142)에서 참조.

- 대학 자체평가 및 학문분야 평가·인증을 국제적 수준으로 관리 강화
 - 다양한 학문 분야 평가 및 인증 시행을 통한 질 관리 강화
 - 국제적 수준의 인증 기준을 적용하고, 동시에 국제적 인증제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
 - 대학 내부에 질 관리 시스템을 가동하여 자율적으로 자체평가와 평가 인증에 참여하여 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인증 획득 프로그램, 기관에 대해서는 정책적 지원

나) 대학교육의 질 보장을 위한 관리 수행 주체의 설립

- 대학교육의 질 관리를 담당하는 별도의 평가 기관 설립
 - 대학평가를 전담하는 준 공공기관을 설립하고 현재 수행되고 있는 민간 평가기구의 평가인증, 연구, 연수 및 정보공시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
 - ※ 언론사(중앙일보, 동아일보), 대교협, 공학, 의학인증원 등 제각각의 평가와 정보 공개가 이루어지고 있음.
- 정부 산하 기관을 설립하더라도 지나치게 정부의 입장을 수용하지 않고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독립성을 부여할 필요가 있음.
 - 국제적 수준에서의 질 관리 기준, 학점 인정, 자격과 학위의 호환성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고 독립적으로 대학 평가를 수행할 수 있도록 권한 부여
 - ※ 미국(CHEA와 연방정부), 영국(QAA), 호주(AUQA), 일본(NIAD-UE), 스위스(CAQ), 프랑스(CNd'E) 등에서는 정부가 고등교육기관의 질 보장을 위한 기구를 설립·운영하고 있음.

다) 대학의 질 관리 노력 정도와 정부 지원 사업과의 연계 강화

- 대학정보공시제, 대학 자체평가, 인증제 등 다양한 질 관리 시스템과 연계한

대학 재정지원의 차등화

- 대학의 질관리 역량에 따라 차등적으로 대학재정지원 사업 실시
- 체계적, 주기적 평가를 실시하고 미흡한 대학은 구조개혁과 연계하여 퇴출 유도
- 대학의 절대적, 상대적 장단점 파악하여 대학 특성화 정책과 연계
- 국가 장학금 지원 대상 선정에 활용
 - ※ 미국: 평가인증을 받지 않은 대학의 재학생은 연방정부 학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
 - ※ 캐나다: 주 정부 평가결과와 연동된 재정지원 시스템
 - ※ 호주: AQUA 감사 지적 사항 미반영 시 해당 주 또는 지역 정부에 의해 예산 삭감 조치

○ 대학 내부의 대학교육 질 관리 시스템 구축과 교육 개선 촉진

- IR(기관연구, Institutional Research)을 강화하여 강의 만족도, 교수역량평가, 교육프로그램 효과성 분석, 학생 등록/졸업 등의 변화 관찰 데이터를 객관적으로 분석하여 질 관리에 반영
- 대학 내부의 질 관리 조직 운영과 질 관리 가이드라인 설정, 질 관리 피드백 시스템 작동 점검

사. 지역발전을 위한 지역대학 육성

1) 필요성 및 정책목표

□ 필요성

- 글로벌(global) 패러다임과 전통적 지역(local) 패러다임이 공존하는 오늘날과 같은 글로벌 시대에는 지역이 세계와 직접 접촉하기에 규모의 경제화와 지역 특성화가 동시에 추진되어야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음.
- 지역경제의 규모화를 위해서는 지식, 기술, 산업 및 인력을 집약화 하고, 지역 간 차별화된 경제 구조를 갖추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수도권 인구가동

현상과 맞물려 입학자원이 유출되고, 지방 대졸자 또한 취업으로 유출되어 지역 내 인력 수급차가 발생함.

- 지역 경제 활성화를 촉진하고 산업 발전에 기여할 우수한 인재를 육성하고, 지역 주민과 교류하며 동시에 세계와 융합할 수 있는 구심점 역할을 담당할 지방대학 육성이 요구됨.

□ 정책목표

- 지방대학 교육여건 개선과 질 제고
- 대학별 특성화 추진을 통한 경쟁력 강화
-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지역 간 균형 발전 도모

2) 정책추진 경과 및 현황

- 역대 정부별 지방대학 육성정책의 기초 및 주요 사업

<표 III-12> 역대 정부별 지방대학 육성 정책

	문민정부	국민의정부	참여정부	MB정부
정책기조	지방대 특성화	지방대육성법제정 시도	국가균형발전	수월성, 효율성, 경쟁력
주요사업	국책공대육성 지방대 특성화	지방대 육성지원 BK21(지역대학)	NURI 사업	대학역량강화사업 LINC사업

- 광역경제권선도산업인재양성사업 추진
 - 권역별 선도 산업 분야 우수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 및 연구기반 구축을 목표로 하여 수도권을 제외한 5+2 광역경제권의 선도 산업별로 1~2개 대학을 선정하여 20개교에 총 사업비 1,000억 원 지원
- 산학협력선도대학육성사업(LINC) 추진

- 기존의 여러 산학협력 사업을 하나로 종합하여 지역 산업계와의 연계를 높이고자 하는 목적으로 수행

<표 III-13> 산학협력선도대학육성사업

'11년도			'12년도		
구 분	사업비	지원규모	구 분	사업비	지원규모
광역시권 선도산업 인재양성	1,000억 원	20개교	산학협력 선도대학 육성사업	1,700억 원	50개교 내외
산학협력중심대학	310억 원※	17개교			
지역거점연구단	145억 원	7개교			
계	1,455억 원※	44개교 ※※			

○ 지역 우수인재 유치 및 지원 강화

- 글로벌 박사 펠로우십(Global PhD. Fellowship)의 지역인재 트랙 신설
- 지역대학 학생에 대한 국가지원 장학금(근로장학금, 성적우수 장학금) 및 공익재단의 장학지원 확대
- ‘당해 연도 입학정원의 5% 이내, 당해 학년 모집단위별 입학정원의 10% 이내’였던 학사편입 선발 비율을 각각 ‘2% 이내와 4% 이내’로 축소

○ 지역대학 발전방안(2012.06.27.) 수립을 통해 지방대학 발전을 위한 종합적인 방안 마련

- 산학협력선도대학(LINC) 육성사업의 규모를 2배 이상 대폭 확대하여 3,800억원 규모의 지역대학 육성 대표 브랜드 사업으로 키워나갈 계획
- '13년부터 향후 5년간 매년 150명씩 국립대학 교원 정원을 확충하여 '25년까지는 교원 확보율 100% 달성
- 지역 우수인재 유치 및 지원 강화
- 글로벌 박사 펠로우십(Global PhD. Fellowship)의 지역인재 트랙 신설
- 지역대학 학생에 대한 국가지원 장학금(근로장학금, 성적우수 장학금) 및 공익재단의 장학지원 확대

3) 성과와 문제점

□ 성과

- MB정부는 역대 정부와 달리 별도의 지방 소재 대학 육성을 위한 사업이 정부 출범 초기부터 추진되지 않았음. 수월성과 효과성의 관점에서 지방대학 경쟁력 기반 확충사업으로 대학 간 경쟁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사업이 진행되고 있음.
- 지역대학 발전방안을 마련하여 2013년 지방대학 집중 지원 계획을 수립함.

□ 문제점

- 별도로 운영되던 NURI사업이 편입되어 지방대학 육성을 위한 종합적이고 독립적인 사업이 부재하게 되었으며, 취업률 지표가 지원 대학 선정에 영향을 미쳐 지방대학이 상대적으로 불리한 상황임.
- 기존에 추진되던 광역경제권선도산업인재양성사업, 산학협력 중심대학, 지역거점연구단 사업을 통합하여 규모화하였으나 실제 통합으로 인한 시너지 효과 제고가 요구됨.
- 지역대학 발전 방안이 마련되었으나 재정지원 확충 방안이 미흡하고, 정권말기의 레임덕으로 인하여 추진력이 부족하여 향후 실현 가능성이 낮음.

4) 세부과제¹⁵⁾

가) 지역 수요 기반 맞춤형 산학협력의 활성화

- 산학협력중심대학 육성사업, 산학협력중심전문대학(LINC)사업의 지속·확대 보완 추진

15) 미래기획위원회(2012: 159-161)에서 참조.

- 산학협력중심대학 육성사업은 지방대학과 지역이 연계하여 각 지역별 특화된 산학협력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기반 마련
 - 지역별 차별화, 대학 간 차별화가 이루어질 수 있는 지역 수요 반영된 산학협력 모델 발굴
 - 산학협력을 통한 지역 내 인적 물적 자원의 교류 활성화
- 지역단위의 기업 수요 맞춤형 산업기술 연구 및 인력 양성 시스템 구축
- 지역 산업의 유형과 특성에 부합하는 지역 고유의 경쟁력 있는 산업 기술 개발을 위한 산학협력 연구 및 교육 중심형 사업을 동시 추진
 -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지역 특화된 산학협력 우수 모델의 창출과 확산
- 맞춤형 인력양성을 통한 대졸자 취업 안정화 지원
- 지역산업 특화형 인재를 육성하여 졸업 후 고용 가능성 증대
 - 지역 내 취업 지원을 통해 인력 유출(brain drain) 방지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의 선순환 고리 형성

나) 지역 기업-대학 순환형 교육체제 구축과 인력 수급 안정화

- 기업 수요 맞춤형 학과 및 교육프로그램 개발 운영을 통한 인력 수급 안정화
- 기업의 기술 및 인력 수요 조사에 기반한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맞춤형 인력 육성
 - 기업의 요구에 맞춘 교재개발 및 교육 시설 완비할 수 있도록 지원
 - 중소기업이 자체적으로 기업 내에서 소화하기 어려운 교육 프로그램을 대학에서 개설하여 교육·훈련 서비스 지원 및 기술 이전
- 학교-일터 간의 연계를 통한 현장 중심형 인력 양성
- 지역 기업에서의 인턴십 이수하여 현장 중심형 교육 실시
 - 기업 특화형 PBL(Problem Based Learning) 실시하고 기업 담당자의 교육 평가 참여하여 피드백 제공
 - 기업 인력의 대학교육 참여 확대

- 중소기업의 재직자 재교육을 통한 평생직업능력개발 확대
- 취업연계를 통한 지역 인력 지역 내 수급
- 산업 단지 내 대학(원)에 계약식/주문식 맞춤형 중·단기 학과를 설치하여 직장인 재교육 수요에 부응
 - 캠퍼스의 일부를 산업 단지 내에 위치시켜, 재직근로자 학습 편의성 도모
 - 대학 연구자 및 협력 회사 직원이 상주하는 산업 단지 내 캠퍼스를 조성하여 교육·연구 연계 시너지 효과 제고

다) 지역 교육·문화 창달을 위한 지역 네트워크 허브 구축

- 지역 주민의 교육·문화를 공유할 수 있는 장소이자 네트워킹 할 수 있는 기능을 강화하여 지역 교육·문화의 허브로써의 기능 담당
 - 교육·문화 세미나를 개최하여 현대적 개념의 향교와 서원의 기능 담당
 - 교육·문화 콘텐츠를 개발하여 지역 축제를 개최하여 지역 문화 확산과 공유의 장 마련
- 대학을 중심으로 파트너 기업, 지자체, 연구 기관의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상호 교류 활성화를 위한 지역 교육·문화 프로젝트 지원
- 연성적인 교류 확대를 통하여 지역 네트워크의 허브 역할 담당

아. 고등교육 재정확보 및 투자개선

1) 필요성 및 정책목표

□ 필요성

- 학령인구의 감소로 대학 재정 수입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며 외부적으로는 등록금 인하와 인상 제약 압력이 가해지고 있어 대학의 재정 여건은 매우 취약한 상황에 놓여 있음.
- 대학의 질 제고를 위한 신입교원 채용과 교육 역량 강화에는 상당한 재원이 소요되나 수도권 대학 집중화 현상으로 지방대학의 경우 학생 충원을 미달 사태를 맞아 재정적 곤란에 봉착함.
- 고등교육의 발전을 위해서는 양적 성장에 상응할 만한 질적 부문에 대한 투자가 요구되기에 대학교육의 역량 강화 및 질 제고를 위한 대학 재정 확충과 효율적인 투자 계획이 수립되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됨.

□ 정책목표

- 고등교육 재정 확충
- 대학재정 효율화를 통한 대학 효과성 증진
- 안정적 재정 마련을 통한 일관성 있는 대학 정책의 수행

2) 정책추진 경과 및 현황

- 문민정부 : 교육재원 GDP 대비 5% 확보정책을 추진
- 국민의정부 : 교육세 확충 노력, GDP 대비 6% 확보 정책 추진
- 참여정부
 - 균특회계 :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지방대학의 특성화와 우수인재 양성을 위해 지방대학 혁신역량 강화사업으로 2,400억 원을 균특회계로, 수도권에는 대학특성화 600억 원, 그리고 지역발전을 선도하는 산·학·연 중심대학 및 학교기업 육성을 위해 450억 원을 균특회계로 지원

○ MB정부

- 대학재정의 확충으로 2008~2010년 사이 3,875억 원이 증가하여 9.2%의 증가율을 보임.
- ‘학술연구역량강화’ 항목이 823억 원 증가하여 38.0%의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음.
- ‘대학교육역량강화’ 항목과 ‘국립대학운영지원 항목’이 각기 654억 원과 3,028억 원 증가하여 10.0%와 14.0%의 높은 증가세를 보였음.
- ‘대학구조체제개선’ 항목과 ‘고등교육 ICT 지원’ 항목은 405억 원과 31.8억 원이 감소하여 각기 55.5%와 30.4%의 높은 감소세를 보였음.
- 2008년 629.3억 원에 달하던 ‘대학의 특성화·다양화’ 항목은 2011년 3억원 규모로 사실상 소멸되었음.

○ 포물러 펀딩 재정 지원 방식으로의 전환

- 2008년 포물러 펀딩 방식에 의해 총 1000억 원의 대학교육역량 강화 사업 지원
- 4년제 대학에 적용된 포물러는 총 5개로 취업률, 재학생 충원율, 전임 교원확보율, 장학금 지급률, 학생 1인당 교육비이며, 지역별, 규모별, 대학특성별 8개 유형으로 구분하여 동일 유형 내에서의 대학 간 경쟁 유도

3) 성과와 문제점

□ 성 과

- 고등교육재원 배분과정에 포괄보조금제도와 포물러펀딩제도를 도입함으로써 고등교육재원 배분방법이 다양화됨.
- 대학 재정지원 사업을 교수·연구자 및 학생 중심의 지원 방식으로 개편하되, 대학원과 학부수준으로 사업구조를 단순화함.

□ 문제점

- 대학 재정지원사업의 원칙으로 ‘선택과 집중’을 강조하고 있어 교과부가 가장 중시해야 할 균형적인 대학 성장, 학습권 보호 및 교육력이 저해될 우려가 존재함.
- 대학 구조조정 관련 지표를 재정지원사업에의 신청 요건으로 삼음으로써 대학에 대한 정부의 조성(助成) 책임을 약화시키는 문제를 낳고 있음.
- 교과부가 사업수행지침 등을 통해 재정지원에 따른 여러 제한을 가함으로써 결과적으로 대학의 장이 학칙으로 정할 수 있는 자율성을 상당부분 침해하는 문제를 초래할 수 있음.

4) 세부과제

가) 고등교육 재정의 확충과 안정적인 확보를 위한 법적 제도 마련

- 고등교육에 대한 공공 투자 확대를 위한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의 도입
 - 고등교육 재정의 안정적으로 확보하여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지원
 - 대학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면서 대학 스스로의 재정 효율성을 추구할 수 있도록 교부금을 지원하되, 재정 효율·효과성이 검증되지 않은 대학에 대해서는 지원하지 않도록 함.
- ※ 고등교육 투자 비중을 현재 0.6%에서 중장기적으로는 OECD 국가의 평균에 급전하는 0.92% 이상으로의 확대되어야 할 것임(이정미 외, 2011).
- 대학 재정의 안정성 확보를 위한 국공립대학 기본운영경비 보장 법제화
- 정부 고등교육 재정 지원 사업의 안정성 확보를 통한 정책의 일관성 유지
 - 지원 규모의 변동 폭을 최소화하여 차기년도 사업 계획 수립에 차질을 빚지 않도록 지원 규모의 안정화 추구

나) 대학재정 자원의 다각화 지원

- 지자체, 기업과의 산학 연계를 통한 재정 확충을 위한 적극적인 의지와 노력을 보이는 대학에 대해서 재정 우선 지원
- 발전기금 및 대학 기부 문화 활성화를 위해 기부금에 대한 세액 공제 혹은 면세 인정
- 학교기업, 기술지주회사, 특허, 제품 상용화 등을 통한 교육 부대 수입의 비중을 확대하도록 산학협력 평가와 연계

다) 대학 재정운영의 효율화 및 전문성 강화

- 대학 내 재정운용 조직 역량 강화 및 인력의 전문성 제고
 - 대학 내 예산 조직의 효율성 및 재정 운용 전문 인력의 확보 평가
 - 대학 재정 운영에 대한 전문 컨설팅 지원
 - 대학 내 구조조정을 통한 예산 절감 및 부정 사용 방지 시스템 구축
 - 외부 감사제도의 활성화
- 재원확충 다각화, 효율화 노력을 경주하는 학생정원 미충원 대학에 대해서는 특별 지원 대책 마련
- 대학재정 운영 투명성 제고 및 내실화
 - 대학이 예결산서를 공개하고 있으나 적정성을 검토할 기제가 미흡하므로 대학 재정 투명성 제고를 위한 자구 노력 촉구 외 외부 감사제와 재정운영 평가제도 도입

자. 고등교육 국제화를 통한 국제경쟁력 제고

1) 필요성 및 정책목표

□ 필요성

- 세계화·국제화의 시대적 흐름에 따른 고등교육의 글로벌화는 선택이 아닌 필수적인 사안이며 국가별로 정도의 차이가 있으나 전략적 차원에서 추진되고 있음.

※ 유럽은 볼로냐 프로세스 이후 통합적인 유럽고등교육 시스템 구축을 위해 고등교육 글로벌화를 추진 중. 호주는 고등교육 국제화를 통해 교육을 10대 수출 전략 산업으로 선정하여 적극적으로 추진. 일본도 외국인 유학생 유치에 2009-14년 동안, 매년 2억 엔 투자함.

- 최근 5년 간 외국인 유학생이 양적으로 증가되어 왔으나, 여전히 출신 국가는 일부 국가에 한정되어 있으며, 아시아 국가 간 학생, 연구자, 교수의 상호교류를 촉진하기 위한 국제적 수준의 질 보장, 학점, 학위·자격체제는 가시적으로 드러나 있지 않은 상황임.

※ 외국인 유학생은 전체 고등교육기관 재적학생의 1.3% 일본 4.7%, 미국 3.1%

- 학령인구 감소로 대학 입학자원의 감소가 2015년 이후 평균 2만 명으로 예상되고 있어, 외국인 유학생은 유치 대상임. 또한 글로벌화 시대에 학생 및 교수자원 확보를 위해서는 무한 경쟁이 예상되는 바, 장기적인 외국대학과의 교류 협력 강화, 국내 대학의 해외 진출의 기반이 마련되어야 할 필요성이 높음.

□ 정책목표

- 외국 우수 대학과의 경쟁을 통한 고등교육의 체제의 개선
- 국제적 수준의 대학교육의 질 확보
- 고등교육기관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2) 정책추진 경과 및 현황

- WTO 출범, FTA 확산 등 교육분야도 개방이 본격화됨에 따라 각국은 우수

인재 유치 및 고등교육 경쟁력 강화에 총력

- '04년 'Study Korea Project'를 수립하면서 유학생 유치 5만 명('10년)을 목표로 설정하였으나, 조기목표달성으로 '08년 유학생 유치목표를 10만 명('12년)으로 상향 조정
- '06년 '고등교육의 국제화 전략' 수립 이후 외국대학과의 교육과정 공동운영, 상호 학점 인정 등 각종 규제 완화
- '11년 국내대학 해외진출 시 현지국가의 설립요건을 적용하도록 완화
- '12년 국가차원의 글로벌 인재 육성, 교육경쟁력 강화 및 지역발전을 위해 교육국제화특구 등에 대한 규제 완화
- 고등교육 국제화를 위한 정부-대학 협의체, 국제교육진흥원 등 대학의 국제화를 지원할 수 있는 상설 기구 마련
- 국제화 촉진을 위한 유학정보서비스 제공, 고등교육 질 관리 국가정보센터 등 홍보 인프라 구축

3) 성과와 문제점

□ 성 과

- 외국인 유학생 및 학자 유치
 - 2008년 외국인 유학생 5만 명 유치 목표 달성 이후 2012년 현재 86,878명 유치(KEDI, 2012)
 - WCU사업을 통해 해외 학자 321명을 유치하고, 글로벌 교류 센터
- 외국교육기관의 국내 유치
 - 3개 교육기관, 우수 연구기관 31곳 유치
- 개도국 교육과학기술지원 10개교, 국제협력 선도대학 2개교 지정하여 한국형 ODA 사업 추진

□ 문제점

- 외국인 유학생 및 수용 기관의 질 관리 기제가 미흡함
- 외국인 유학생의 출신 국가가 중국에 한정되어 있어 향후 국가 간 교류 확대가 예상되는 개발도상국 학생들 유치에 노력을 경주하여야 할 것임.
 - 4년제 일반대학 기준 외국인 유학생 중 중국인의 비율은 84% (KEDI, 2012)
- 해외 대학 캠퍼스 유치에 성공하였으나 아직까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음.

4) 세부과제

가) 외국인 유학생 및 학자 유치를 위한 지원 서비스 강화

- 외국인 유학생 및 학자의 한국 및 대학 정착 서비스 강화
 - 한국어 강좌 및 문화 적응 프로그램 개발
 - 학습 적응을 위한 상담, 교재, 교육 프로그램 활용을 위한 상담 지원

- 한국인과 교류할 수 있는 문화, 여행 이벤트 제공
- 우수 외국인 유학생 및 학자의 학업 및 연구 수행을 위한 지원금
 - 개발도상국의 우수 외국인 유학생 선발하여 장학금 지급 확대
 - 우수 연구자 선정하여 연구 지원금 지원
- 국내 기업에서의 인턴십 및 연구 교류 지원
 - 외국인 유학생에게는 글로벌 수준의 대기업에서의 인턴십 기회 제공
 - 외국인 학자, 연구자에게는 글로벌 수준의 대기업 연구소와 연구 협력할 수 있도록 지원
- 캠퍼스 국제화 사업을 통해 외국인 유학생, 연구자, 교수 등이 이주하여 학습, 연구할 수 있는 협력적 문화 조성
- 유학 및 연구 계약 기간이 종료되더라도 취업과 연계하여 국내에 잔류할 수 있도록 외국인 유학생의 국내 자격증 취득 및 중소기업 취업지원
- 중국 이외의 유학생 유치 국가를 다변화하고 향후 국가 간 교류가 활성화될 지역의 유학생을 집중적으로 지원하여 친한 인력의 양성

나) 대학의 국제화 추진을 위한 질 제고 및 관리 체계 구축

- 외국인 유학생 유치 및 해외대학과의 교류를 위한 최소한의 교육프로그램 및 캠퍼스 환경 인증제 추진
 - 외국인 유학생 및 연구자를 위한 대학의 질 정보 제공
 - 해외 대학과의 교류를 위한 국가 인증으로 활용
- 외국인 유학생 선발 및 졸업의 질 관리 체계 구축
- 영어강좌의 기준과 질 가이드라인 마련
 - 영어 강의 가능 교수자의 자격과 질 기준 설정
 - 영어 강의 수강자의 자격과 질 기준 설정
- 국제화 인증 교육 기관의 해외 유학생 유치 우선 지원

다) 글로벌 네트워크의 활성화와 교육협력사업의 효과 증진

- 대학 간 국제교류 활성화를 위한 국제교류 프로그램 강화
 - 동아시아 국가를 우선 시작으로 공동 교육과정 운영을 통한 학생, 교수 교류 강화 및 학점 인정 시스템 구축하여 대학생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 현재 추진 중인 캠퍼스 아시아 프로젝트의 지속, 확대 추진
- 경제자유구역 내 대학 유치 및 정착 지원 활성화
 - 해외 대학 국내 캠퍼스 설치 시 관련 규제 완화와 조기 정착 및 성공적 안착을 위한 인센티브 제공
 - 경제자유구역 특화, 지역 경제와 연계된 해외 대학 캠퍼스 유치
 - 해외대학 캠퍼스 내 아태지역 학생 유치를 위한 학생 지원
- 해외에 한국 대학 캠퍼스 설치
 - 동아시아 지역 이외의 베트남, 미얀마, 몽골, 태국 등 한국 기업 진출이 활발한 지역의 인력 육성을 위해 해외 캠퍼스 설치하여 한국형 대학 교육 실시
- ODA 사업과 지식 공유
 - 한국의 경제발전에 기여한 고등교육, 산학협력 모델 전파
 - 한국형 대학 설립과 기술 이전을 위한 ODA 사업 지원

차. 평생학습 시스템 구축

1) 필요성 및 정책목표

☐ 필요성

- 급속한 과학기술의 발달과 함께 기술 변화의 주기가 짧아지고, 융합학문이

새롭게 출현함. 이러한 변화에 빠르게 적응하고, 미래를 선도해 나가는 데 필요한 고도의 지식과 기술 습득이 지속적으로 요구됨.

- 저출산·고령화가 빠르게 진전됨에 따라 경제활동기간이 늘어나고, 직업을 유지해야 할 필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사회경제적 변화에 적응하기 위한 평생직업 교육이 요구됨.
 - 우리나라 55~64세 인구의 직업관련 비정규교육 참여율은 8%로 OECD 평균 26%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대부분 취미, 여가 형태의 학습 위주로 참여(OECD, 2012)
- 20대 전후의 학령인구를 대상으로 한 대학교육의 패러다임은 평생학습의 시대적 요구를 수용하는 데 한계가 있으며 평생학습 시대에 부응할 수 있는 대학의 변화가 요구되는 시점임.

□ 정책목표

- 성인학습자에 대한 학습 기회 부여와 국가 인적자원개발
- 평생학습을 통한 직업능력개발과 삶의 질 향상
- 평생학습으로의 대학 교육 패러다임 전환

2) 정책추진 경과 및 현황

- 1995년 5월 31일 교육개혁방안에서 제시된 ‘열린교육사회, 평생학습사회 (Edutopia) 건설’을 위한 평생교육법 제정·시행 요구
 - 평생교육법상의 각종 제도 도입 및 운영을 위한 세부 실행계획 마련 필요성 대두
- 2000년 평생교육법 시행
 - 평생교육센터 설립, 지역평생교육정보센터 설립, 평생교육사 양성, 평생학습축제 개최
 - 평생학습도시 지정, 소외계층교육지원사업, 문해교육사업, 금빛자원봉

사단 발족, 지역인적지원개발사업, 평생교육백서 발간

○ 2002년 「제1차 평생교육진흥종합계획('02~'06)」 수립

- 「국가인적자원개발기본계획의 실행을 위한 평생학습진흥종합계획」
- 2001년 「국가인적자원개발기본계획」과 연계된 평생학습 분야의 구체적인 실행계획 마련
- 주 5일 근무제와 주 5일 수업제 도입 전망에 대비한 지역평생학습체제 구축 필요성
- 지식기반사회와 평생학습사회의 도래, 고령화 사회로의 진입, 교육인적자원부의 출범, 평생교육법의 시행 및 교육복지국가 이념의 계승 발전 등 시대적 배경
- 평생교육 관련 집단 간 사회적 파트너십을 형성하여 21세기 지식사회에 맞는 평생학습진흥 종합계획을 수립, ‘열린교육, 평생학습사회’ 건설을 통한 국가인적자원 개발에 기여 목적

○ 2008년 「제2차 평생교육진흥종합계획('08~'12)」 수립

- 「제1차 평생학습진흥종합계획('02~'06)」 종료 및 2008년 「평생교육법」 개정에 따른 후속 연동 계획 마련
- 저출산·고령화 및 양극화 현상에 대비하여 ‘학습, 고용, 복지, 문화’를 연계
- 소외계층에 대한 사회적 공적 지원 시스템 마련
- ‘배우는 즐거움, 일구어 가는 내일, 함께 살아가는 평생학습사회 구현’의 비전 설정

○ 2008년 대학 평생교육 활성화 지원 사업 추진

- 1차년도인 대학이 성인학습자를 위하여 평생교육 체제로 전환하는 인프라를 구축하고, 성인학습자에게 교육을 제공하는 시범운영 단계를 마련함.
- 2009년도에는 대학 본부 체제를 개편하는 ‘평생학습중심대학 육성사업’과 대학부설 평생교육원을 지원하는 ‘대학부설 평생교육원 활성화 지

원사업'으로 나누어 추진함.

- 2010년부터는 두 사업을 '대학 평생교육 활성화 지원사업'으로 통합하여 운영하고 있음.

3) 성과와 문제점

□ 성 과

- 대학의 평생교육 기능 강화의 기반을 마련하고, 성인학습자에게도 다양한 고등교육에 대한 접근 기회를 확대해 줌.
- 교육소외계층의 고등교육에 대한 접근 기회 확대
- 지역사회와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모형 개발, 평생 학습의 인프라 및 운영 체제 구축 시도
- 대학과 지역사회 간 네트워크가 활성화
- 학습자의 학습결과를 인정받고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들의 계획 시도

□ 문제점

- 대학에서 정규 학생 외에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차원에 머물러 있고, 성인학습자 친화적 대학 환경 조성 및 대학 운영 시스템 변화로까지는 확산되지 못함.
-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계획 및 운영체제의 부재로 단순히 대학에서 정규 학생 외에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차원의 교육운영에 머물고 있음.
- 성인학습자 친화적 대학 환경 조성에 있어서 전반적인 대학 운영 시스템 개선 차원의 노력이 미흡함.

4) 세부과제

가) 일과 학습이 병행 가능한 학위과정 및 학사 시스템

- 시간제 등록을 통해 직장인이 직업을 유지하면서도 지속적으로 교육·훈련을 받을 수 있는 유연한 대학의 학사시스템이 요구됨.
- 다양한 고등교육 수요자의 요구를 반영한 학위 제도
 - 획일적인 학술중심 교육과정을 다양화하여 중·단기 교육과정 운영
 - 직업전문학위 제도의 도입
- 성인 대상 선발 제도의 다양화
 - 현재 운영 중인 전문대학의 학사학위 전공 심화과정과 같이 졸업 후 직장 생활을 유지하면서 동일 계열 상위 과정으로 진행되는 학위 과정을 이수할 수 있도록 허용
 - 경력을 고려한 성인대상의 선발 기준 마련

나) 성인학습자의 학비 지원 및 세제 감면 혜택

- 중소기업이나 벤처기업과 같이 사내에서의 교육·훈련 여력이 부족한 기업의 근로자가 고등교육기관 등록 시 학비 지원 및 세제 감면 혜택 부여
- 직업능력개발계좌제 등록 대상 기관을 대학으로 확대하여 근로자의 교육·훈련 선택의 폭을 다각화함.
- 실업자, 구조조정 대상자, 고령자 등 경제적 여력이 부족한 성인학습자에 대한 학자금 대출제도 신설
 - ※ 현재 든든학자금은 만 35세 이하에만 적용대상

다) 평생학습 중심대학 확대 및 성인학습 지원 강화

- 평생학습 중심 대학 사업을 확대하여 한국형 평생학습 선도 대학 중점 육성

- 지역별로 평생학습 중심 대학을 선정하여 성인학습자를 대상으로 한 교육과정과 성인 및 경력자를 대상으로 한 주문·맞춤식 교육과정 운영
 - 대학 중심의 평생학습 활성화 사업의 확장 및 활성화 차원에서 학령기 학생 층원이 어려운 대학을 성인학습자만을 대상으로 한 성인평생학습 대학으로의 시범 전환
 - 특히, 농어촌 지역의 대학을 성인대상 평생학습대학으로 전환하여 고령자 대상 귀농·귀촌 교육 실시하여 환경 친화적 산업 및 농어촌 취업 활성화
- 성인학습자의 학습환경을 고려한 ON/OFF라인 교육과정 개설
- Blended Learning, Mobile Learning 등 학습자 편의 제공
- 이직, 전직, 창업을 위한 컨설팅 및 자금 지원
- 성인대상 전문 이직, 전직 취업 상담 지원
 - 교내시설 활용, 자금 지원, 기술 창업 등에 대한 지원

IV. 장기 고등교육정책 10대 방안¹⁶⁾

1. 미래 고등교육 환경의 메가트렌드 분석

- 고등교육 환경변화에 대한 연구와 분석이 우리의 고등교육 맥락에서 본격적으로 수행되기 시작한 것은 이른바 지식기반 사회로의 진입이 시작된 1990년대 말부터라고 할 수 있음.
- 이즈음부터 정부는 이전에 비하여 비교적 체계적이고 중장기적인 비전하에 고등교육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경쟁력 제고를 위한 다양한 개혁사업을 추진해 나가기 시작하였음.
- 그러나 이러한 개혁 추진에 상응하는 고등교육 미래 변화와 관련된 연구물은 그리 많지 않음.
- 교육부의 정책과제, 정부출연연구소의 과제 등 소수의 유관 과제에서 전망하고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고등교육 미래 환경의 메가트렌드¹⁷⁾를 분석하면 다음과 같음.

가. 인구 및 사회구조의 변화와 고등교육

- 앞으로 우리 고등교육의 모습을 변화시킬 것으로 예상되는 가장 중요한 메가트렌드의 하나는 저출산에 따른 학령인구의 감소 및 그에 따른 대학입학 자원 감소임.

16) 장기 고등교육정책 10대 방안은 미래 고등교육 변화 동향 관련 보고서에 대한 고찰과 전문가 자문을 통해 도출되었음. 여기서 장기는 시기적으로 5년 이후를 말하며, 차기 정부인 박근혜 정부 이후를 말함.

17) 미래학자 J. Nisbitt는 80년대 초에 발간한 그의 저서 ‘메가트렌드’에서 메가트렌드란 1, 2년 사이에 일어나는 변화가 아니라 7년 이상 10년, 20년 후의 미래 등 장기간에 걸쳐서 일어나는 큰 변화로 메가트렌드를 정의하였다.

- 고령화 현상이 가속됨에 따라 생애를 통한 고등교육 요구가 증대될 전망이며, 외국인의 유입을 통한 다양한 다문화 양상이 사회 전반에 확산될 전망이다.

1) 학령인구의 감소

- 세계의 총인구는 2007년 약 66억 7,123만 명에서 2050년에는 약 91억 9,129만 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 한국의 총인구는 2007년 약 4,846만 명에서 2050년 약 4,234만 명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국회입법조사처, 2010).
- 2010년 인구 및 주택 총 조사 결과 우리나라 총인구수는 48,219천 명으로 2005년에 비해 2.0%가 증가하였으나, 인구증가율은 2000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함(통계청, 2011).
- 2010년 이후 한국의 합계 출산율은 OECD 평균 및 주요국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남. 이에 따라 학령인구 감소현상이 지속되어 초·중·고등학교 학생 수는 2015년이 되면 615만 명, 2020년에는 549만 명, 2030년에는 532만 명으로 감소할 전망이다.
- 이는 대학진학희망자 수 감소로 연결되어(<그림 7> 참조), 2008년의 입학정원 규모가 동결되는 것으로 간주할 때 2016년에 이르면, 대학에 들어가고자 하는 학생 수가 대학의 정원보다 적어져 학생 충원이 어려워짐.



[그림 IV-1] 대학입학정원과 18세 인구추이

자료 : 통계청(2009a). 향후 10년간 사회변화 요인분석 및 시사점. p.15.

2) 고령화 추세

- 노년 퇴직자 생산성 향상을 위한 전문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활성화가 요구될 전망이다.
- 우리나라의 고령화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음. 65세 이상을 고령화의 기준으로 볼 때, 고령화 인구의 비중이 1980년 3.8%에 불과하였으나, 2018년이 되면 14%, 2026년 20%가 되어 이른 바 초고령 사회로 진입할 전망이다.¹⁸⁾
- 우리나라의 경우 베이비붐 세대의 퇴직이 이미 시작되었는데, 이들의 절반 이상이 고등교육을 이수한 고학력층이고, 전문적 직업 기술과 역량을 보유함.
- 학교교육에서 쉽게 달성할 수 없었던 사회적·문화적 기능을 평생학습을 통해 구현하고자하는 수요가 증대될 것으로 예측됨.
 - 고령화 추세는 고등교육의 모습을 변화시키는데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

18) 이러한 속도는 이미 2006년에 초고령 사회에 도달한 일본이나 이탈리아와 비교해 보더라도 매우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라 할 수 있음.

할 것으로 예상됨. 은퇴 이후 제2의 삶을 설계하고 준비하기 위한 교육 요구가 증대될 것이며, 직업생활을 하기 위할 뿐만 아니라, 문화생활이나 여가의 향유를 통해 풍요로운 삶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교육에 대한 수요가 증대될 전망이다.

3) 다문화 가족의 증가 및 다양한 모습의 가족

- 가족구조가 다양화되면서 이들에 대한 직업교육 수요 및 학습 수요도 다양화될 것임.
- 2010년 현재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 등록 인구는 91만 9천 명임. 이는 1990년에 비하여 18배가 증가한 수치이며, 전체 인구 중 1.9%를 차지함(통계청, 2011).
- 외국인의 유입은 다문화 가족의 지속적인 증가를 가져오고 있으며, 다문화 가족의 증가와 더불어 가족의 모습도 다양화될 전망이다.
 - 독신 가구, 무자녀 가정, 한부모 가정, 부자·모자 가정, 이혼·재혼 가정, 동성애 가정, 청년 독립 가정 등

4) 사회구조와 문화의 다양화

- 웰빙 트렌드와 함께 삶의 질을 추구하는 분위기가 사회 전반적으로 확산될 전망이며, 이러한 변화는 또한 소비자들이 고등교육에 자신의 의견을 반영하려는 욕구가 높아지는 현상을 초래할 것임.
- 현대 사회는 창의성과 지식이 더욱 중시되는 지식정보사회로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으며, 그에 따라 문화의 중심도 변화하고 있음(이호영 외, 2006; 재인용).
- 21세기 미래사회에서 문화는 사회구조, 생활양식, 가치체계에서부터 경제·산업 환경의 변화에 이르기까지 매우 광범위한 분야와 결합하여 새로운 가

치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됨.

- 특히 통방융합·기기의 융복합화·UCC 등 쌍방향적 IT 환경과 문화가 결합하면서, 문화의 중심도 소수가 다수에게 메시지를 전달했던 아날로그 문화에서 네트워크화 된 개인중심의 문화로, 콘텐츠가 중심이 되는 문화로 변화하고 있음(이호영 외, 2006; 재인용).
 - 지식의 공동 활용에 가치를 둔 웹2.0 기술(X-Internet, Flex, Ajax, 오픈 API, RSS, PMash-up 등)을 통해 경제, 문화, 행동양식 등이 변화하면서 쌍방향 커뮤니케이션 기술은 참여 및 소통문화의 도구로 활용되고 있음.
- 향후에는 아이디어와 창의적 사고를 가진 계층과 지식산업이 세계를 이끄는 시대가 될 것으로 전망됨(정보화추진위원회, 2008).
- 개방·공유·협업을 통한 지식의 활용, 새로운 가치의 창출, 다양성의 확대가 사회전반의 창조적 파워로 발전되는 새로운 문화현상이 확산될 것으로 전망됨.
- 한류가 아시아 문화를 주도하고 외국인 근로자와 결혼이주자가 급증하는 세계화의 진전 속에서 개방적 다문화 사회가 요구될 전망이다.
- 국내 유입되는 다양한 사회구성원에 대한 소극적인 포용을 넘어, 전 세계의 다양한 문화를 이해하고 적극적으로 해외인력을 유치하는 등 지구촌 사회 속에서의 열린 다문화사회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해지고 있음.
- 사회 전반에서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경제적 성장뿐만 아니라 환경 보호, 사회적 책임 등 트리플 보텀 라인(Triple-Bottom-Line)을 갖추어야 한다는 윤리 및 가치의 문화가 확산되고 있음.
- 인문학과 기초학문 중심의 교양교육을 통해 인간과 삶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공동체적 가치를 실현하려는 지식인 양성의 중요성이 증대될 전망이다.

나. 과학기술 혁신 및 산업의 고도화와 고등교육

- 21세기 지식·정보화 사회에서 과학기술의 발전은 우리 고등교육의 모습을 산업사회와는 현저하게 다른 모습으로 전환시킬 것으로 전망됨.
- 지식기반경제(Knowledge Economy)를 견인하기 위한 고등교육의 중요성은 더욱 중요해질 전망이다.

1) e-Learning과 u-Learning의 일반화

- 고등교육은 시간적·공간적 제약을 뛰어넘어 제공될 것이며, 인터넷, SNS의 사용¹⁹⁾으로 정보의 습득은 물론 교육의 모습까지 변화시킬 전망이다.
- 온라인 공간에서 현실공간과는 별개의 가상의 공간을 만들어내면서 ‘가상현실’(virtual reality) 기법을 응용한 ‘가상 산업’이 유망한 성장산업으로 떠오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 이에 유엔미래포럼에서는 2015년이 되면 대부분의 학교 교육현장은 세컨라이프(www.secondlife.com)나 놀리지 가든(Knowledge Garden) 등 새로운 가상현실로의 이주가 시작될 것으로 전망한 바 있음(유엔미래포럼(<http://unfuture.org>)).
 - 동 포럼은 2030년이 되면 웹 17.0 시대로 모든 것이 네트워크화 되고 평생교육에서 노인 학생 비율이 대다수를 차지하게 되며, 정형화된 교과서 정보가 아닌 상시적으로 업데이트되는 정보로 공부하며, 아바타

19) 한국인터넷진흥원의 「2010년 인터넷 이용실태조사」에 의하면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인터넷 이용률은 77.8%(약 3,701만 명)로 이 중 65.7%(2,431만 5,000명)가 싸이월드 같은 미니홈피와 블로그, 인터넷 카페 등의 다양한 형태로 SNS를 사용하고 있으며 특히 트위터 이용자 수는 1년 만에 10배가 증가하였다(방송통신위원회·한국인터넷진흥원, 2010). 또한 2010년 미국 비영리 시장조사 기관인 퓨리서치센터가 22개국을 대상으로 조사한 ‘SNS 이용현황’에서 ‘SNS를 이용한다’고 응답한 한국인은 40%로 미국(46%), 폴란드(43%), 영국(43%)에 이어 네 번째로 높았다(한국일보, 2011년 1월 3일자).

가 교사대역을 맡고, 대부분의 과목은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통해 직접 실험을 하면서 학습하게 될 것이라고 예측함.

- 대학교육에서 가상공간에서의 교육은 일반적인 현상이 될 것임.
 - 이미 디지털대학, 사이버대학 등이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으며, 대학은 강의를 동영상으로 만들어 언제 어디서나 수강이 가능하도록 소비자에게 제공하고 있음.

2) 첨단과학 기술의 발전

- 첨단과학기술의 발전은 고등교육에서 전공분야 설치 및 교육과정 제공 분야에 있어서 큰 변화를 유도할 것으로 보임.
- 나노공학, 생명공학, 정보공학과 인지과학의 시너지 창출이 중요해지면서 뇌와 학습에 대한 이해도는 지난 25년보다 더욱 빠르게 향상될 것으로 예측됨.
 - 뇌 관련 학습과학기술은 미래의 선진 과학기술분야로 인정되고 있으며 2030년에 이르면 교육 및 학습 분야에서는 개인 및 집단지성의 향상을 위한 국가적 프로그램, IT 지식과 학습, 개인화된 교육, VR 시뮬레이션 사용, 지성의 향상, 두뇌를 향상시켜 주는 약물, Web 17.0, 평생 교육 시스템, 지능 향상을 위한 인공 세균 등이 중요하게 떠오를 것으로 전망됨(제롬 글렌, 2008).
- 첨단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관련기술을 보유한 고급인력 확보를 위한 경쟁이 첨예화될 것임.
 - 학습환경 디자인, 인간-컴퓨터상호작용(HCI), 인지심리학, 인지신경과학, 계산언어학, 아동발달학, 사회학, 복잡 교육 시스템학 등의 분야를 아우르는 다학문적, 융합과학적 연구가 요구됨(이정모, 2003에서 재인용).
 - 오늘날 미국, 호주, 캐나다 등 많은 선진국은 고급인력(특히 과학기술 분야) 확충 및 관리 차원에서 이민법 특례를 만들면서까지 고급인력을 유치하고 있으며, 이러한 추세는 앞으로도 계속될 전망이다(전상인 외,

2008).

3) 융합 기술 시대의 도래

- 미래 대학에서는 융복합 학부, 융복합 대학원, 융복합 교육과정 운영 등이 지금보다 훨씬 더 활성화될 전망이다.
- 과학기술혁신에서 주목할 만한 트렌드는 기술·산업·학문 간 창조적 결합이 일어나며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융합 시대로 전환하게 된다는 점임(이인식, 2008).
- 기술융합(Technology Convergence)은 궁극적으로 산업 간, 서비스 간 융합을 유발하여 경제, 산업 전 분야에 걸쳐 삶의 질을 혁신시킬 것으로 전망됨.
- 지금까지는 학문분야(discipline)별로 연구와 교육이 이루어졌지만, 급속한 지식변화 및 융합기술 발달에 따라 학제간 통합 교육이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됨(황주성 외, 2005에서 재인용).
 - 이에 EU는 지식사회 건설을 위한 융합기술발전전략(CTEKS: Converging Technologies for the European Knowledge Society)을 수립하여 사회 문화적 요인까지 포함한 전략을 추진 중이며, 2004년 미국의 NBIC에 자극을 받아 NBIC에 환경과학, 인문학뿐만 아니라 윤리적 규제 장치를 포함한 전략을 수립하였음(김태년 외, 2007 재인용).

4) 산업현장에 응용 가능한 지식 요구 및 산학협력의 일반화

- 지식기반 경제의 성숙에 따라 현장에 직접 응용 가능한 지식에 대한 요구가 증가할 전망이다.
- 교육과정과 내용이 특정분야에 대한 숙련을 중심으로 전환될 것임.
- 교육단계에서는 산학협력이 일반화될 전망이며, 교육과정과 내용에 있어 공

식교육과 산업계 수요를 어떠한 방식으로 연계할지가 중요한 정책과제로 부각될 것으로 예상됨.

- 단기적 실용숙련에 대한 수요증가와 아울러 교육과 노동시장의 연계는 기업의 특정 숙련기술이나 또는 특정산업의 숙련기술에 대한 요구를 증대시킬 것임.
- 특정 기업 및 특정산업을 위한 숙련기술 형성을 위해서는 임금보호, 고용보호, 실업보호 등의 사회적 안정망의 구축이 활성화될 것이며, 이는 교육과 노동시장을 보다 밀접하게 연계시키는 제도적 장치가 될 것으로 예상됨.

다. 환경 위기 및 자원의 고갈과 고등교육

1) 온난화와 자원의 부족

- 온난화 및 자원 고갈과 같은 지구적 문제는 앞으로 고등교육의 교육과 연구에 있어서 중요한 주제가 될 것임.
- 전 지구적으로 온난화와 자원의 고갈에 따른 생존의 노력은 더욱 치열해 질 전망이다. 이미 지구촌의 여러 나라가 안전하고 깨끗한 에너지원 확보를 위해서, 그리고 만성적인 식량, 수자원 부족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고심하고 있음.
 - 현재 7억의 인구가 물 기근(water scarcity: 1인당 1년에 1,000m³ 이하)을 겪고 있고 2025년에는 30억의 인구가 물 기근을 경험할 것으로 전망됨(조용수, 2009에서 재인용).
 - FAO(유엔식량농업기구)에 따르면 현재 37개국에서 식량위기를 겪고 있고 식량 수요는 2013년까지 50%, 30년 이내에 2배가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지만 곡물 가격은 2006년 이래 129%나 상승하여(조용수, 2009), 식량 확보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됨.
 - 전 세계적인 에너지 수요는 최근 20년 동안 2배가 증가하였는데, 기술 진보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2030년까지는 화석연료를 통해 1차 에너지 수요의 81%만을 충족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됨(조용수, 2009).

2) 지속가능사회 구현 요구

- 환경의 위기 및 자원의 고갈은 지속가능한 사회·경제 체제로의 이행을 촉진할 것으로 전망됨.
 - 지속가능발전이란 본질적으로 변화의 과정으로써 자원의 이용, 투자의 방향, 기술발전의 목표 및 제도적 변화가 함께 혼연일체가 되어 현재

대와 미래세대 모두에게 필요한 기본수요와 삶의 소망을 향상시키는 변화라고 할 수 있음(신동원, 2010).

- 지속가능한 발전을 실천하기 위한 지속가능발전 고등교육(Higher Education for Sustainable Development or Higher Education for Sustainability)이 미래에는 매우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전망됨.
 - 지속가능발전교육이란 ‘현세대와 미래세대 모두가 생태적으로 건전하고, 경제적으로 진취적이며, 그리고 평등한 사회에 살 수 있도록 현재의 시민에게 지식, 기술, 그리고 가치관을 계속적으로 계발하고 함양시켜 그들이 개인적이면서도 공동체적 행동을 통하여 지속가능한 미래를 책임감을 가지고 창조적으로 이루어 나갈 수 있는 시민이 되도록 하는 동적 과정’을 일컫음(신동원, 2010).

3) 그린 캠퍼스의 출현

- 글로벌 환경위기에 따라 세계적으로 환경 규제가 더욱 강화될 전망이며, 이에 그린 캠퍼스 조성에 대한 요구가 강해질 전망이다.
 - 일부 대학은 대학 운영 전략으로 그린캠퍼스 조성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러한 요구는 향후 계속적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이미 대학 간 그린 캠퍼스 운동 사례를 공유하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한국 그린캠퍼스 협의회가 설립('08.11.25)되어 교육과학기술부, 환경부와 MOU를 체결하였으며('09.5.13), 그린캠퍼스 기반 구축 지원, 녹색 통합교육 프로그램 개발, 그린캠퍼스 조성을 위해 산림청과 가톨릭계 대학교 간 MOU를 체결하였음('09.3.30).
- 이러한 변화들은 녹색성장전략 추진의 계기가 되고 있으며 녹색산업, 즉 환경 친화적 산업이 미래 산업으로 급부상하게 될 것으로 전망됨.
- 향후 우리나라가 녹색성장을 선도하기 위해서는 관련 기술개발에 대한 투자 지출을 확대하고, 이러한 기술을 활용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인력을 양성하

며, 기존인력이 녹색성장 업무에 조속히 투입될 수 있도록 교육·훈련을 다양하게 제공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김승택, 2009).

라. 정치·경제의 글로벌화와 고등교육

1) 다극화 시대의 전개

- 냉전체제 붕괴 이후 지난 20여 년 간 유지된 미국 중심의 팍스 아메리카나 체제는 점차적으로 약화되고 있으며 새로운 경제, 정치 주체들이 부상하면서 세계는 이제 다극화 시대로 나아갈 전망이다.
- 현재도 BRICs(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등은 경제적 블록으로서 중요한 위치를 점해나가고 있으며, 이들의 성장은 앞으로 세계경제의 지형을 변화시킬 것으로 전망됨(유의선 외, 2010).
- 이외에도 다양한 신흥시장의 부상과 글로벌화 확산에 따른 영향으로, 세계의 부와 경제적 영향력은 그간의 서구 국가 중심에서 아시아 등 다양한 국가로 이동되는 다극화시대가 전개될 것임.²⁰⁾

2) 국경을 초월한 인력의 이동 및 대학자원 확보경쟁의 심화

- 세계 정치경제지형의 변화 및 국경의 이동성 증가에 따라 교육은 점차 글로벌화 되어 가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대학교육의 글로벌화는 매우 급속하게 이루어지고 있음.
- GATS를 계기로 교육은 중요한 서비스 교역상품의 하나가 되고 있음. 초·

20) 골드만 삭스는 ASEAN+3 회원국인 13개 동아시아 국가의 GDP는 2007년 전 세계 GDP의 18.3%에서 2010년 22%, 2014년에는 23.2%로 늘어날 전망이며 동아시아의 부상과 함께 브라질과 러시아, 인도, 중국을 포괄하는 BRICs 경제권도 40년 안에 현재의 서방경제대국(미국, 일본,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영국)의 경제력을 넘어설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Goldman Sachs, 2003).

중등교육의 경우 많은 국가에서 의무교육 또는 국민공통기본교육 과정으로서 개방의 정도가 미약하나, 고등교육은 시장개방의 일선에 놓여있음.

- 국경을 초월하여 (cross-border) 학생과 학자의 이동이 빈번해지고 있으며, 이러한 상황에서 경쟁력이 있는 고등교육기관에는 국적을 불문하고 학생이 모여들고, 경쟁력이 낮은 고등교육기관은 구조조정의 위기에 놓이게 됨.
- 글로벌화에 따라 대학자원 확보경쟁은 더욱 심화될 전망이다.
 - 세계적으로 1980년대에는 불과 110만 명의 유학생 수는 2010년에는 약 4배가 증가한 410만 명으로 증가하였으며, 2020년이 되면 이 수치는 약 450만 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됨(UNESCO 전망).
 - 우리의 경우 2010년 현재 OECD 회원국을 포함한 세계 각국으로 251,887명이 유학을 떠났고 외국에서 한국으로 들어온 유학생 숫자는 60,000명으로 나타남(한국교육개발원, 2010).
- 고등교육 단계에서의 유학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전망이다.
 - 지금까지는 외국으로 나가는 인력(out-bound)보다 외국에서 유학을 오는 인력(in-bound)이 훨씬 적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지만, 앞으로는 국내 대학에 유입되는 외국학생의 수도 점차 증가할 전망이다.
- 이러한 상황에서 중요한 변수는 중국임. 중국은 경제력을 바탕으로 국제사회에서 급부상하면서 고등교육에 대한 영향력도 변화할 것으로 전망됨.
 - 중국은 그동안 내부인재의 국외취업이 심한 대표적인 국가에 해당했으나 고등교육 인재유치에 집중적인 투자를 통해 세계 석학을 중국으로 끌어들이게 되며, 대폭적인 학비지원 정책으로 국제사회의 고등교육 수요자의 관심을 집중시킬 것으로 예상됨(미국국가안보정보원, 2008).
- 동북아시아 내의 국제화가 급속도로 진전되어 고등교육 거버넌스 국제공조(예, 교육과정의 표준화)가 중요한 요소로 부각될 것으로 보임.

마. 정보, 지식, 학습 격차로 인한 불평등의 심화

- 고기술 및 고임금 부분과 저기술 및 저임금 부분의 공존으로 인해 고기술 고임금 경제로의 전환과 함께 사회적 배제가 동시에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질 전망이다.
 - 정신노동과 육체노동의 구분이라는 포드주의적 분업은 기술과 지식에 기반을 둔 불평등으로 전환될 전망이다.
-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지식의 양과 질에 따라, 그리고 이러한 지식의 양과 질을 좌우하는 교육의 우열에 따라 개인 간 격차가 확대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음.
- 소득, 정보 격차의 확대가 계층 간 경제력의 차이를 낳고 이는 교육비 부담 능력의 불균등을 초래하며, 이는 다시 사회적 불평등을 확대 재생산시킬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음.
- 이러한 상황 속에서 교육 특히 고등교육의 역할은 매우 중요해 질 전망이다.
 - 대학교육이 보편되어 있는 우리의 상황에서 공적 투자에 의한 대학교육의 혜택은 누가 보고 있는지, 양극화와 정보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고등교육 정책은 무엇인지, 어떠한 계층이 고등교육 혜택을 차별적으로 받고 있는지, 정부의 보호정책을 필요로 하는 고등교육 정책은 무엇이 있는지 등에 대한 질문이 더욱 심각하게 요구될 전망이다.

2. 미래 고등교육 변화 관련 연구 보고서의 아젠다 분석

가. 국내 연구에서의 아젠다

- 고등교육 미래전망과 관련한 국내 연구는 우리사회가 지식기반 사회로 접어들면서 수행되기 시작하였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지식기반사회의 변화 모습

을 전망하는 것으로 출발하고 있음.

- 글로벌 맥락에서 지식기반 사회를 예측하고, 그러한 변화에 따라 우리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측면에 있어서의 변화를 예측한 후, 이에 부응하기 위한 고등교육 아젠다를 추출하고 있음.

- 연구방법은 주로 유관 부문의 학자를 대상으로 델파이 조사 기법을 활용한 경우가 많은 것으로 분석되었음²¹⁾.

1) 유현숙 외(1999)의 연구

□ 개요

- 이 연구는 지식기반사회의 변화에 따라 대학의 이념, 학문구조, 학사관리 등 7대 영역에서의 변화가 전개될 것으로 전망함.

□ 미래 고등교육 전망

- 대학의 이념과 기능이 상아탑(ivy tower)에서 기술·정보탑(intelligence tower)로 변화하면서, 더욱 다양화된 사회의 요구와 고등교육 수요자들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이념 및 기능의 분화가 일어날 것으로 간주함.
 - 교육의 명목적 가치보다 실질적 가치가 중시되면서, 삶의 질 향상과 직업생활의 영위에 도움이 되는 교육 중심으로 변화될 것임을 전망하고 있음.
- 고등교육의 운영모형과 관련하여 가장 크게 일어날 변화는 시장논리의 강화임.
 - 이 논리에 따라 대학 간의 경쟁은 더욱 심화 될 것이며, 대학교육기회의 종적·횡적 개방 및 수요자 위주의 기회선택 등의 현상이 연쇄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예상함.

21) 고등교육의 각 영역별로도 미래 아젠다를 제안하고 있는 연구 (예, 대학평가, 고등교육 재정, 학생 수요 전망 등)들이 있기는 하지만, 여기서는 중·장기적 전망 하에 미래 사회를 전망하고 그에 따라 종합적 관점에서 고등교육의 미래를 전망한 연구들은 대상으로 분석하였음.

- 이슈 위주의 학문구조로의 변화
 - 여러 학과가 통합되거나 학과 간 연대가 강화되는 등, 수요자를 위한 교육이 더욱 다양한 방식으로 제공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 대학의 교수-학습 형태는 정보통신 기술(ICT)을 광범위하게 수용한 기술 정보집약형 교육과 연구가 나타날 것임.
 - 이러한 기술의 발전에 따라 가상세계에서의 의사소통이나 재택수업, 인터넷 수업 등이 일반화될 것으로 전망함.
- 지식기반 사회에서 대학을 둘러싼 환경의 변화가 대학의 사회적 책무성을 강조하도록 유도할 것이며, 사회적 책무성 요구 증진은 대학교육에 대한 외부 평가제도의 요구를 증대시킬 것으로 전망함.
- 이전에는 비교적 동질적인 유형을 지녔던 교수와 학생들의 연령, 교육적 배경, 전문적 배경이 매우 다양해지는 등 이질적인 교수와 학생들이 등장할 것임.
- 대학의 경영 체제는 기술집약적 행정을 통한 조직의 경량화, 기업마인드의 도입 등이 일반화될 것으로 보았음.

□ 정책 아젠다

- 대학교육 이념과 기능의 다원화
- 학문구조의 유연화
- 열린 대학교육 체제로의 전환
- 학사 관리 제도의 혁신
- 교육방법 및 교육내용의 개선
- 대학 경영관리 체제의 혁신
- 질 관리 시스템 확립

□ 시사점

- 이 연구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고등교육에 대한 정책 아젠다 마련이 활성화 되기 이전에 수행된 연구이기는 하지만, 경제, 사회, 문화 등 제 영역의 학자들의 의견을 망라하고, 향후 논의를 지속적으로 수행될 필요가 있는 7대 핵심 고등교육 아젠다 영역을 제안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음.

2) 채재은 외(2009)의 연구

□ 개요

- 이 연구에서는 미래사회의 발전에 부응하는 고등교육의 장기 비전을 크게 대학교육 시스템의 유연화, 국경과 지역을 넘는 고등교육의 개방화, 선택과 집중을 통한 고등교육의 효율화, 그리고 책무에 기반을 둔 고등교육기관의 자율화로 보았으며 각 정책 방향에 해당하는 10개의 주요 정책 아젠다들을 제시하고 있음.

□ 정책 아젠다

- 대학교육 시스템의 유연화와 관련하여, 「평생학습 친화형」유연한 학사운영 및 학위체제 개편, 소외계층을 위한 고등교육 기회 보장, 유비쿼터스 고등교육환경 구축 등의 정책 아젠다가 제안되었음.
 - 각각의 아젠다는 성인학습자들의 직업역량 수요 증가, 학위체제 혁신에 대한 필요성, 고령화 시대의 도래에 따른 고령인구의 고등교육 기회 확대 등의 사회의 변화를 반영한 결과라 할 수 있음.
- 국경과 지역 경계를 넘는 개방화와 관련하여, 국제화를 통한 고등교육 시스템 역량 극대화,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대학의 역할 강화, 「산업선도형 인재양성」을 위한 산학협력체제 혁신 등의 정책 아젠다가 제안되었음.
 - 이미 고등교육의 국제화는 선택이 아닌 국가별 핵심 전략으로 부상하

였으며, 국제적 경쟁력을 갖춘 고등교육기관들을 통해 지역사회 발전에도 기여하는데 보탬이 되어야 한다는 필요성에서 해당 정책 아젠다들이 제시되었음.

- 선택과 집중을 통한 고등교육의 효율화와 관련하여, 대학학령인구 감소에 대응한 대학구조개혁 지속 추진, 융복합 학문의 활성화와 신진고급두뇌 발굴·지원,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한 대학 교육력 강화 등의 정책 아젠다가 제안되었음.
- 책무성에 기반을 둔 자율화를 실현하기 위해 고등교육기관의 책무성과 투명성 강화를 위한 질 보장 체제 구축 과제가 논의되었음.

□ 시사점

- 이 연구의 의의는 고등교육의 제 영역을 망라하여 고려하였다는 점과, 국제화, 융복합 등 우리의 고등교육이 현 단계에서 당면하고 있는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을 중심으로 향후 20여 년 내에 추진되어야 아젠다를 다루고 있다는 데 의의가 있음.

3) 유현숙 외(2011)의 연구

□ 개요

- 2040년까지 보다 장기적 전망 하에 고등교육의 아젠다를 설정하는 연구로 수행되었음.
 - 시나리오 기법 등 다양한 미래 예측기법을 활용하였으며 미래를 예측함에 있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제 영역에 있어서의 전문가 들을 중심으로 위원회 구성을 통하여 의견을 수렴하였음.
 - 또한 향후 30여 년간의 미래 비전을 다루었기 때문에 이 연구는 우리 사회가 고등교육을 통해 장차 어떠한 사회를 지향할 것인가를 설정하고 그에 따른 시나리오를 작성하였으며 각각의 시나리오 구현을 위한

세부 아젠다를 제안하고 있음.

□ 정책 아젠다

- 연구에서는 미래사회의 고등교육 발전을 위한 정책방향으로 크게 창조적인 사회를 주도하는 고등교육, 행복한 사회를 꿈꾸는 고등교육, 지속가능한 사회를 이끄는 고등교육, 조화로운 사회를 실현하는 고등교육의 4가지로 설정하였음.
- 창조적인 사회를 주도하는 고등교육
 - 미래사회가 지향하는 융합 친화형 대학교는 융·복합 연구와 교육이 활성화되어 고부가가치의 지식자본을 생산하고, 생산된 기술이 산업현장과 연계되어 시너지를 창출하는 대학을 구현해야 함.
 - 변화하는 산업구조에 부응하는 창의적 융합지식 창출 활성화, 창의적 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선진화, 창조적 융합 사회에 기여하는 제도 확충 등의 추진 목표들이 제시됨.
 - 대표적인 핵심 과제로는 융복합 첨단 과학기술분야 창조적 인력양성, 수요 주도형(demand-driven) 학사운영 및 학위체제 개편, 세계수준의 국제 고등교육캠퍼스 구축 등을 들고 있음.
- 행복한 사회를 꿈꾸는 고등교육
 - 다양한 연령층의 다양한 교육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대학은 학습-노동-복지를 통합할 수 있어야 하며, 지역에 기반을 둔 고등 인재의 재교육 체제를 구축할 수 있어야 함.
 - 이러한 추진 목표의 달성을 위해 제시된 핵심 과제로는 성인 고등교육 진입 제고를 위한 정원 및 대입전형 제도의 개선, 순환교육체제 구축, 지역에 기반을 둔 성인 계속교육 기관으로서의 고등교육 확대 및 심화 등이 있음.
- 지속가능한 사회를 이끄는 고등교육
 - 우리나라는 미래사회 지속가능발전의 글로벌 리더십을 확보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를 위하여 체계적으로 글로벌 리더를 양성하는 고등교

육체제 확립이 필요함. 또한 녹색성장의 과정에서는 IT, ET, BT등 융합 형태의 녹색 기술 인력이 요구됨에 따라, 융합기술의 전략적 활용에 따른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고등교육 체제의 확립 역시 중요한 정책 목표임.

- 이와 같은 정책 목표 달성을 위한 정책 아젠다로서 대표적인 것으로 기후변화 대응교육의 다각화·전문화를 통한 기후변화 대응의 선도적 위상 확립, 경제·사회·환경 통합적 지속가능발전 교육의 활성화, 녹색융합기술 전문 인력양성 및 활용체제 활성화 등이 있음.

○ 조화로운 사회를 실현하는 고등교육

- 고등교육에서는 역내 국가들의 조화로운 경제 발전을 이끄는 아·태 지역 통합 글로벌 인재양성체제 구축 주도, 통일한국의 새로운 도약을 이끄는 고등교육 체제 수립, 고등교육 형평성 제고를 통한 사회구성원 삶의 질 양극화 해소 등의 정책목표가 제시됨.

4) 김병주 외(2011)의 연구

□ 개요

- 교육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고등교육 체제개편 방안을 논의하면서 추진해야 할 정책방향 및 목표로 교육 프로그램 및 기관 다양화, 특성화·전문화, 복합적 네트워크화, 국제화, 지역화, 고등교육 재정 및 거버넌스에 시장기제 확대 등을 제시함.

□ 정책 아젠다

- 고등교육의 구조 개편을 위한 30개 우수대학 집중 육성
 - 사교육비의 지속적 증가의 근본 원인은 결국 대입구조에 있다고 보고, 이를 완화시키기 위한 노력으로 상위 30개의 우수 대학을 집중 육성하는 정책 과제를 제시함.

- 상위 우수 대학으로 수도권과 지방의 형평을 고려하여 수도권 10여 개, 지방 20여 개의 우수 대학을 육성하고, 특성화와 장점을 확보토록 하여, 유럽 국가들처럼 어느 대학을 나와도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하도록 하는 데 그 주안점이 있음.

○ 학부/학과의 융합형 학과구조 설계

- IT, BT, NT 등의 산업 뿐 아니라 창조산업의 발전을 위한 인력 양성을 위하여 학제 간 연구 및 융합의 필요성을 주창함.
- 융복합 과학기술 인력의 효과적인 양성을 위해서는 국가차원의 인력양성계획에 따라 기업, 공공연구소, 대학간 협력체제를 구축하고, 학과 간 두꺼운 벽을 쌓고 지내던 교수들이 서로 손을 잡을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

○ 아태지역 통합 글로벌 인재양성 체제 구축을 위한 고등교육협력 프로그램 마련

- 지역 간 이동 뿐 아니라 지역 내 이동도 활발히 일어나고 있는 현 상황을 적절하게 반영하기 위한 정책 방향
- 대학생의 어학연수 및 학위 프로그램에 치중한 기존 국제교육협력 프로그램이 범위 확장 및 다각화, 지역별·국가별 수요 맞춤형으로 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교육 인프라 구축, 글로벌 교육수요에 부응하기 위한 소프트웨어 중심의 중장기적 국제화 인프라 구축 등

○ 이 외에도 변화하는 사회상과 한국의 상황 등을 반영한 고등교육단계 평생 직업교육기회 확대, 대학의 교육과정 개선, 고등교육연구개발센터의 설립, 대학재정의 안정적 확보방안 마련 및 지속적 지원 등의 정책 과제들이 제시되었음.

5) 박정수 외(2009)의 연구

☐ 정책 아젠다

- 다양한 대학 리그의 조성
- 강소학부 교육중심대학
- 세계수준의 연구중심대학 육성
- 대학교육 과정의 혁신
- 우수교수의 critical mass 확보
- 대학교육의 질과 출구관리 강화
- 대학경영 시스템의 선진화
- 대학자율 경쟁 강화를 위한 규제개혁

나. 국외 동향

1) 고등교육 개혁 국제동향²²⁾을 통해 본 아젠다

☐ 고등교육 거버넌스에서의 개혁

- 주요 국제동향은 외부 영향력의 개입, 대학운영의 경영적 특성 인정, 국립대학 법인 등 다양한 거버넌스 양태가 등장하고 있으며, 구조개혁 및 기관의 인수 합병 등도 일반적인 현상이 되고 있음.
 - 대학 유형과 기능의 전문적 분화, 수요자의 요구에 따른 다양한 교과과정의 설계 및 제공의 구조개혁을 통하여 생존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고자 고군분투하고 있으며, 정부도 선택과 집중의 원칙을 통하여 고등

22) 이 부분은 유현숙 외(2005)의 연구 "고등교육개혁 국제동향"을 주로 참고하여 작성하였음.

교육기관의 수월성을 제고하고자 노력하고 있음.

□ 고등교육 재정개혁

- 고등교육에 대한수요는 증가하는 반면 재정은 한계에 이르고 있는 상황에서 공적 재원을 통한 투자를 어떠한 방식으로 확대할 것인가, 효율적인 재정운영 방식은 무엇인가, 정부는 어떠한 방식으로 합리적인 자원 배분을 할 것인가 등에 대한 방안마련에 주력하고 있음.
- 주요 동향은 고등교육재정은 시장형 지원의 확대, 기관지원에 비하여 개인에 대한 지원 확대, 성과중심의 재정지원 강조하는 형태로 변화하고 있음.
 - 이러한 주요국의 동향은 재원이 부족한 우리에게 자원배분과 집행의 메커니즘을 면밀히 분석하여 국제수준에 뒤지지 않는 재정지원 구조를 확립해야 함을 시사해 주고 있음.

□ 고등교육 규제개혁

- 고등교육의 규제개혁이 성공적으로 달성되기 위해서는 먼저 대학과 정부 간의 관계가 자율화라는 공통분모를 통하여 정의되고 구축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음.
- 한편으로는 대학의 책무성이 강화되고 있으며, 대학의 자율역량을 강화하는 한편 대학의 역할과 책임의 명확한 규정, 능력에 따른 업적 평가 및 보상, 대학사회의 체계적 평가시스템 도입, 계약제 도입 등의 대안들이 모색되고 있음.

□ 고등교육 질 관리의 체계성 확립

- 고등교육 질 보장은 하나의 고등교육개혁운동으로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질 보장기구의 전문성 신장을 위한 노력, 다양하게 분화되고 있는 고등교육에 대한 평가시스템 구축 노력, 국경 없는 교육추세에 따른 질 보장 체제의 국제화, 지역중심의 질 보장을 위한 네트워크 체제 구축 노력 등이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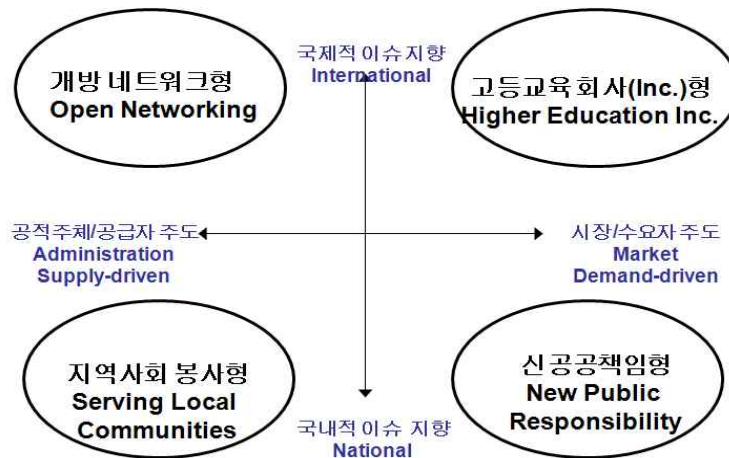
- 이러한 국제동향은 현재 한국고등교육사회에서 논쟁이 되고 있는 고등교육 질 관리 체제 구축 에도 시사하는 바가 큼.

□ 고등교육을 통한 지역혁신

- 21세기 지식기반경제를 추구하는 OECD 회원국들과 개발도상국들은 공통적으로 고등교육기관이 지식의 창출, 혁신의 밑거름, 상장의 원동력 등 다양한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자국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발전에 이바지할 것을 강력하게 주문하고 있음.
- 국가와 국제단위에서의 고등교육기관의 역할뿐만 아니라 지역단위에서도 고등교육의 새로운 역할 구상이 혁신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 대학, 연구기관, 컨설팅회사, 정부, 지역기관 등이 경제적 이익과 사회적 통합을 지향하기 위하여 네트워크를 구축함으로써 형성되는 지역혁신체제 안에서, 현재 우리나라를 포함한 선진국의 대학들은 진보된 연구 활동과 훈련 및 지역사회봉사를 통하여 지역의 요구에 부응하고자 혁신적 체제로의 전환을 모색하고 있음.
 - 국제기구들은 각 국의 이러한 고등교육기관의 개혁노력이 지역적 요구에 대한 부담과 신기술의 실제 적용 등에 의하여 상당 기간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함.

2) OECD의 시나리오

- OECD는 미래를 준비하는 교육 시스템 개혁안을 준비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지난 2008년 미래 고등교육 시나리오를 제시하였음.
- OECD는 국제적/국제적 지향성과 시장/공적주체 주도의 두 축을 활용하여 미래 고등교육기관의 발전 모델을 4개의 시나리오로 구분하여 제시하였음.



[그림 IV-2] OECD 미래 고등교육 시나리오

출처: OECD(2008). Four Future Scenarios for Higher Education, Documents for the OECD International Conference, Higher Education to 2030.

□ 개방네트워크형 고등교육

- 고등교육은 국제화되고 대학, 교수·연구자, 학생 그리고 산업체 등이 서로 강한 네트워크를 형성함.
 - 경쟁보다는 협력 지향적으로 운영되는 모델
 - 학생들은 글로벌 고등교육 네트워크의 시각에서 학업 코스를 선택하고 자신의 교육과정과 학위를 디자인함.
- 개방 네트워크형 체제하에서는 국제공동연구가 강화되는데 고등교육기관의 서열구조는 여전히 강하게 유지되고 비슷한 명성을 가진 기관끼리 파트너십과 네트워크를 형성함.
 - 기술주도 네트워킹으로 연구중심대학이 아닌 경우에도 지식발전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됨.
- 제한적 자원을 지닌 대학의 교수와 학생은 원격으로 연구물과 연구자료에 접근할 수 있으며 시뮬레이션, 컴퓨팅, 시각화 도구들의 활용이 극대화됨.

□ 지역사회 봉사형 고등교육

- 고등교육기관이 국가 및 지역사회 임무 수행에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함.
 - 지역사회와 연계하여 지역사회의 경제사회적인 요구를 적극 수용, 연구와 교육 활동에 반영함.
- 현재와 같이 국가가 고등교육 재정의 상당 부분을 제공함.
- 국제적 대학 순위나 연구 성과에 치중하기보다는 국내 현안에 치중함.
- 지방정부와 기업체가 지역 대학의 주요 재정지원자 역할을 수행하고 지역 산업과 관련한 코스가 수익을 창출함.
- 일반대학과 직업중심 기술대학이 비슷한 위치에 놓고 대학에서 연구 기능은 상대적으로 축소됨.
 - 양자 모두 지역 산업체와 긴밀히 협력하여 기초 및 평생교육을 설계함.

□ 신공공책임형 고등교육

- 고등교육 재정은 공적인 재원을 주로 하지만 시장과 재정적 유인을 포함한 신공공관리형 도구 활용이 보다 중요하게 다루어짐.
- 동 시나리오 하에서 고등교육기관은 법적으로 민영화됨.
 - 예산의 상당 부분을 공적 재정지원에 의존하지만 외국인 유학생 증대, 수업료 인상, 연구 특허화, 기업체와의 재정 연계 강화 등 재정 확충을 다양화하려는 노력이 가속화됨.
 - 학생 수업료, 기업체 자금, 민간재단 기부금 등 대학의 재원이 민간으로부터 나오면서 공립과 사립의 경계를 허물게 됨.
- 대학은 국가 및 다른 재정지원자들에게 보다 높은 수준의 책무성을 갖게 됨.
- 대학 간 또는 대학 내 분업은 두드러지고 대학마다 교육과 연구 관련 미션은 특화됨.

□ 회사형 고등교육

- 고등교육기관은 사업적 기반에서 교육과 연구 서비스를 국제적으로 제공하

기 위해 경쟁함.

- 연구와 교육은 한층 분리되고 고등교육기관은 각 기관의 주력 서비스-교육 또는 연구-에 집중함.
- 시장은 수요자 중심으로 작동하고 고객의 요구에 반응하며 효과적인 대학행정 및 관리에 주의를 기울이게 됨.
 - 학생 유치를 위한 극심한 경쟁을 피할 수 없게 되며, 많은 대학들이 해외 대학 신설이나 분교 캠퍼스 설치에 적극 나서게 되고 교육프로그램 프랜차이즈가 조명을 받게 됨.
- 고등교육에서도 국제적인 분업이 나타나 일부 국가가 양질의 학부교육으로 명성을 얻는 반면 다른 국가는 대학원과정학생 훈련과 연구 수행에 경쟁력을 발휘함.
 - 개도국은 특정 연구 분야에서 경쟁력을 갖게 되고(예. 인도의 IT 기술, 중국의 농학 등) 연구의 아웃소싱이 일반화됨.
- 영어는 연구와 대학원 교육에서 사용되는 언어가 되고, 자국어는 직업교육 및 학부교육에서 사용함.

다. 요약 및 시사점

- 선행연구들을 종합해 볼 때 고등교육에 대한 아젠다 설정에 있어 공통적인 방향 및 몇 가지 키워드가 있음을 알 수 있음.
- 주요 방향들은 대학이 핵심 지식센터로서 기능할 수 있는 체제의 구축, 국제화 및 글로벌화에 부응하기 위한 체제의 정비, 첨단 과학기술의 혁신에 부응하기 위한 교육과정 및 교육방법의 개선, 대학의 역할과 기능 분화를 통한 경쟁력 제고, 산업체·연구기관, 지역사회 등과 네트워크를 통한 지식생산 체제의 정비, 구조개혁 및 대학의 질 관리 제도 구축, 생애를 통한 고등교육 체제 정비 등으로 요약할 수 있음.

- 미래 아젠다를 위한 키워드로는 “창조적 융·복합”, “국제화 및 글로벌화”, “글로벌 인재”, “창조적 사회”, “평생학습 사회”, “대학구조 개혁” 등을 들 수 있음.

<표 IV-1> 미래고등교육 전망 선행연구별 정책 아젠다

선행연구	정책 아젠다
유현숙 외(1999)	1. 대학교육 이념과 기능의 다원화 2. 학문구조의 유연화 3. 열린 대학교육 체제로의 전환 4. 학사 관리 제도의 혁신 5. 교육방법 및 교육내용의 개선 6. 대학 경영관리 체제의 혁신 7. 질 관리 시스템 확립
채재은 외(2009)	① 「평생학습 친화형」 유연한 학사운영 및 학위체제 개편 ② 소외 계층을 위한 고등교육기회 확대 ③ 유비쿼터스 고등교육환경 구축 ④ 국제화를 통한 고등교육 시스템 역량 극대화 ⑤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대학의 역할 강화 ⑥ 「산업선도형 인재양성」을 위한 산학협력체제 혁신 ⑦ 대학학령인구 감소에 대응한 대학구조개혁 지속 추진 ⑧ 융복합 학문의 활성화와 신진고급두뇌 발굴·지원 ⑨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한 대학 교육력 강화 ⑩ 고등교육기관의 책무성과 투명성 강화를 위한 질 보장 체제 구축

유현숙 외(2011)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창조적인 사회를 주도하는 고등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변화하는 산업구조에 부응하는 창의적 융합지식 창출 활성화 - 창의적 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선진화 - 창조적 융합 사회를 기여하기 위한 제도 확충 2. 행복한 사회를 꿈꾸는 고등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3기 인생 대학 체제 구축 - 학습-노동-복지 통합 체제 구축 - 지역기반 고등 인재의 재교육 체제 구축 3. 지속가능한 사회를 이끄는 고등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속가능발전의 글로벌 리더십 구축을 지원하는 고등교육체제 확립 - 녹색융합기술의 고도화를 주도하는 고등교육 체제 확립 4. 조화로운 사회를 실현하는 고등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역내 국가들의 조화로운 경제 발전을 이끄는 아·태지역 통합 글로벌 인재 양성체제 구축 주도 - 통일한국의 새로운 도약을 이끄는 고등교육 체제 개혁 - 고등교육 형평성 제고를 통한 사회구성원 삶의 질 양극화 해소
김병주 외(2011)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고등교육의 구조 개편: 장기적으로 30개 우수대학 집중 육성 2. 학부/학과의 융합형 학과구조: (Convergence-Oriented Structure) 설계 3. “아태 지역 통합 글로벌 인재양성 체제 구축”을 위한 고등교육 협력 프로그램 마련 4. 고등교육단계 평생 직업교육기회 확대 5. 대학의 교육과정 개선 6. 고등교육연구개발센터의 설립 7. 대학재정의 안정적 확보방안 마련 및 지속적 지원
박정수 외(2009)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다양한 대학 리그 조성 2. 강소학부교육중심대학, 세계수준의 연구중심대학 육성 3. 대학교육과정의 혁신 4. 우수교수의 Critical mass 확보 5. 교육의 질과 출구관리의 강화 6. 대학 경영시스템의 선진화 7. 대학 자율경쟁 강화를 위한 규제 개혁

<p>주요국의 개혁동향 (유현숙 외 2005)</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거버넌스: 외부 영향력의 개입, 경영적 관점의 대학운영, 기관 인수·합병, 구조개혁, 다양한 거버넌스 모형 등장 2. 재정운영: 시장형 지원, 산출성과 관리를 통한 지원, 기관보다 개인대상의 지원 3. 규제개혁: 정부와 대학 간의 관계 자율화, 대학의 책무성 강화 4. 질 관리: 프로그램별 인증 평가, 질 보증 기구의 설치, 지역 중심의 질 보증 네트워크 구축 등 5. 지역혁신: 지역단위의 고등교육 역할 강조, 지역사회 봉사 기능 강조
<p>OECD 시나리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개방 네트워크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학, 교수·연구자, 학생 그리고 산업체 등이 서로 강한 네트워크를 형성하게 됨 - 글로벌 고등교육 네트워크의 시각에서 학업 코스를 선택하고 자신의 교육과정과 학위를 디자인 2. 지역사회 봉사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사회와의 연계를 통한 지역사회의 경제사회적 요구 적극 수요, 연구와 교육 활동에 반영 - 지방정부와 기업체가 지역 대학의 주요 재정지원자 역할을 수행 3. 신공공책임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등교육기관은 법적으로 민영화됨 - 대학 간 또는 대학 내 분업은 대학 내 분업은 두드러지고 대학마다 교육과 연구 관련 미션 특화 4. 회사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등교육기관은 사업적 기반에서 교육과 연구 서비스를 국제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경쟁 - 연구와 교육은 한층 분리되고 고등교육기관은 각 기관의 주력 서비스에 집중 - 시장은 수요자 중심으로 작동하고 고객의 요구에 반응하며 효과적인 대학행정 및 관리에 주의를 기울이게 됨

3. 장기 고등교육정책 10대 방안

위에서와 같은 미래 트렌드 분석 및 선행 연구에서 제시한 아젠다를 고찰하고 전문가의 자문을 통해 우리가 추진해야 할 향후 고등교육정책 장기 10대 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음.

가. 지속적인 구조조정의 추진

- 앞서 전망한 바와 같이 우리의 미래예측에 있어 가장 큰 화두가 되는 것은 인구의 감소이며, 인구의 감소가 교육 특히 대학교육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고찰 및 이에 대한 대응책 모색은 앞으로도 국가적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수행해야 할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음.
- 학령인구의 지속적인 감소는 고등교육 진학희망자의 감소를 초래할 전망이고, 이에 따라 대학교육의 양적 구조조정은 중장기적으로도 정부가 추진해야 할 지속적인 과제가 될 전망이다.
 - 장기적 관점의 학령인구의 추계에 따르면 대학교육 인구는 2011년 265만 명에서 2040년에는 143만 명으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이러한 상황이 계속될 경우 2023년에는 대학의 과잉 공급현상이 심각해져 규모 상으로 볼 때 입학정원 1,600여명 규모의 약 100여개의 대학이 필요 없는 상황이 전개될 것으로 전망하기도 함.
 - 일률적으로 100개의 대학이 문을 닫게 된다는 의미는 아니며, 그 정도 규모의 대학들이 무용하게 될 것이라는 의미임.
- 고등교육의 구조조정은 우선순위를 요하는 정책과제라고 할 수 있으나, 구조조정이 필수적인 과제이되, 어떠한 방식으로 이루어 나가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와 연구가 필요함.
- 대학의 자율성과 책무성이 확대되어가는 추세 속에서 상-하식의 구조조정, 일방적이고 단일의 평가에 의한 구조조정은 지양되어야 할 것임.
- 산술적으로는 2023년에 이르면 100여개의 대학이 구조조정 되어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할지라도 그 규모의 대학이 문을 닫아야 한다는 의미가 아닐 수도 있음.

- 미래에는 대학교육의 양상과 교육방식이 사이버 상에서 이루어지는 등 현재와 같은 모습과는 매우 상이할 것이며, 적정 연령과 무관하게 생애를 통하여 다양한 목적으로 대학교육을 이수하고자 하는 수요가 증가할 것 등을 고려할 때, 새로운 시각의 공급 규모와 구조를 고려할 필요가 있기 때문임.

○ 고등교육에 대한 구조조정은 중요한 중장기 과제로 간주하되, 구조조정의 규모와 방법에 대해서는 정밀한 연구와 검토가 요망됨.

나. 지식발전소로서의 대학기능 강화

○ 대학교육의 목적은 졸업장이나 학위 취득이라는 상아탑(Ivory Tower)적 명분에서 벗어나, 창조적인 지식을 생산하는 지식·정보탑 (Knowledge Tower)으로서의 기능을 담당해 나가도록 해야 할 것임.

- 대학 교육은 실용적이고 교환가치가 높은 지식 위주로 운영되고, 직업 세계에서 필요한 정보와 기술을 얻는 데 필수적인 기관의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새로운 지식생산 양식인 모드 II (Mode II)의 등장으로, 대학은 산업 및 연구기관 그리고 사회와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학문간 융합을 가속화하는 역할을 담당하므로 과학-기술-산업의 융합을 추동하는 산·학·연 협력은 대학교육의 일상적인 모습이 될 것임²³⁾.

○ 이러한 대학체제 구축을 위해서는 기업가적 대학(entrepreneurial universities)

23) 모드 I 생산 방식이 실용적인 용용에 그다지 관심이 없는 과학자 사회에서 수행되는 반면, 제 2의 생산양식인 모드 II는 유용한 지식을 추구하며, 특정한 이슈나 문제에 대한 적응, 단일 학문적 기반보다는 학제를 넘어 다양한 학문적(inter-disciplinary) 소통 및 통합적 발전을 유도. 지식생산에 참여하는 방식이 대학 단일에서 대학, 연구기관, 정부기관, 기업 등의 네트워크에 존재함. 따라서 성과의 평가도 사회적 적합성이 중요하고 수월성 외에 비용 효과성이나 경제적 사회적 영향이 중요함.

을 육성할 필요가 있음.

- 대형 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대학의 연구소 기능의 활성화하고 대학에서 생산되는 지식은 정보통신 기술, 바이오 기술, 뇌과학의 발전은 물론 새로운 산업구조에 일익을 담당함으로써 국가경제에 직접 기여하도록 함.
- 대학이 산업계, 정부와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때로 역할을 교환(대학이 응용연구에 참여하고, 기업이 기초연구에 참여, 대학이 회사를 설립하거나 지역혁신의 핵심 기구로서 정부와 같은 역할을 담당 하는 등)하며, 삼중나선 모형²⁴⁾(Triple Helix)을 통한 지식생산이 일반화되어야 할 것임.
- 기업가적 대학에서는 대학생의 창업이 활성화되고 지식 생산물 관리체제가 정비되어 있으며, 대학에서 창업지원 활동이 활발하게 전개될 수 있도록 제도가 정비되어 있어야 하고, 대학에서 발명된 생산품에 대해 특허 등 지적소유권 관리제도가 정착되어야 함.

□ 다. 대학의 기능과 역할의 적절한 분화 및 대학의 브랜드화

○ 대학의 기능과 역할이 유형별로 적절하게 분화되어야 함.

- 모든 대학이 종합대학을 지향하던 구도 속에서는 대학별 교육 및 연구역량이 증대되기가 어려움.
- 지금까지 국제기구의 대학 순위는 주로 연구중심대학에 치중되어 있는 평가였고, 국내의 대학평가는 대학의 역할과 기능이 분화되지 못한 상태에서 모든 대학을 소수의 지표에 의해 줄 세우기 하는 것이었으며, 대학 평가결과가 소비자들의 대학선택에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해 왔음.
- 대학평가는 지양되어야 하고, 대학이 담당하고 있는 역할과 기능에 따라 유형별로 분화되어 평가되고 소비자들의 대학선택도 기능과 역할이 차별화된 대학 평가에 근거하는 관행이 정착될 필요가 있음.

24) 삼중나선 모형에서는 대학, 정부, 기업의 세 주체가 서로 시간에 따라 마치 DNA의 나선 형태와 같이 진화해 가며 나선과 나선 사이에 (예컨대 산학공동연구) 접점이 발생하고 이러한 접점에서 새로운 역할 조직이 생겨나며 혁신적인 지식의 생산이 이루어짐.

- Liberal Arts 중심의 학부대학, 소규모 명품 대학 등으로 브랜드화하여 활성화할 필요가 있음.
 - 대규모대학 종합대학을 지양하는 관행에서 벗어나, 잘 가르치는 대학, 소규모이지만 경쟁력이 있는 대학, 학부중심 및 교육중심대학들이 정착될 필요가 있음.
 - 이미 작지만 경쟁력이 있는 대학이 출현하고 있는 상황인 바, 이러한 대학들이 중장기적 관점에서 다수가 육성될 수 있도록 정책적인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산업계의 기술 수요 및 국가직무능력표준(NCS)을 반영한 교육과정을 바탕으로 직업분야 실무 중심형 교원이 가르치는 산업기술명장 대학(원)이 활성화될 필요가 있음.
 - 국가직무능력 표준은 간판위주, 졸업장 위주의 사회를 지양하고, 능력과 현장 적합성 있는 기술을 갖춘 인력양성을 지향할 수 있는 체제로 정착되도록 해야 할 것임.
- 신공공형 대학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음.
 - 신공공형 대학은 국가 또는 지역사회의 이슈를 고등교육기관의 교함으로써 교육·연구 활동과 밀접하게 연계함으로써 적극적인 문제해결이 가능한 대학 지역사회 봉사형 대학(community college)을 의미함.
- 명실상부한 연구중심 대학을 육성할 필요가 있음.
 - 연구중심대학은 학문후속세대 양성은 물론, 앞서 제시한 바와 같이 지식생산 모드가 변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새로운 지식의 생산 및 확산 그리고 활용을 위한 핵심적인 기능을 담당하는 기관으로 육성될 필요가 있음.
 - 중장기적 관점에서 4년제 대학의 약 10%가 국제수준의 연구중심대학으로 육성되도록 정책적 지원을 강화함.
 - 미국의 경우와 유사하게 연구중심대학 지원 및 운영을 위한 제 규정이 정비되도록 함.

- 연구 대학은 연구비 수주 규모, 학위 배출자 수 등에 있어 탁월한 수준이며, 대학원 중심의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으므로, 학부정원을 확대하는 데 대학의 관심이 있기 보다는 대학원 수준의 질 높은 교육 및 연구역량이 주력하는 대학으로 운영되도록 함.

□ 라. 시장기제에 의한 대학평가 방식의 정착

- 대학의 구조조정은 지속적으로 유도하되, 중장기적 관점에서는 시장기제에 의한 대학의 구조조정 및 평가방식이 정착되도록 함.
 - 대학의 구조조정이 정부가 일방적으로 계획하여 대학들이 따라오게 하는 상-하 (Top-Down) 방식을 지양하고 대학의 자발적인 참여가 수반되는 구조로 변화함.
 - 대학에 대한 공신력 있는 정보가 교육의 투입, 과정, 성과 면에서 소비자들에게 정확하게 전달되고 있으며, 소비자들은 이들 정보에 의해 대학을 선택하는 관행을 정착할 필요가 있음.
- 대학정보공시를 통한 대학의 양호도 정보를 제공하도록 함.
 - 대학알리미를 통해 개별 대학의 교육과정과 학습성과 그리고 재무현황에 대한 정보가 보완되어 있고, 대학의 양호도를 표시하는 신호등 체계의 정비를 통해 학생과 학부모가 대학 경영의 실상 및 성과에 대해 쉽게 식별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함.
- 대학의 자체평가 및 자체 컨설팅 능력을 제고하도록 함.
 - 대학의 구조조정과 평가가 시장기제에 의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대학들이 자신들의 역량을 스스로 진단하고 평가하며, 컨설팅 해 나갈 수 있는 역량이 요구됨.
 - 현재도 정보 공시의 일환으로 대학자체 평가가 수행되고는 있지만, 비자발적인 평가이며 자체평가를 통해 스스로를 컨설팅 해 나가기 위함 보다는 규정에 의해 명목상의 평가를 실시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임.
 - 대학의 자체평가를 역량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교육의 과정과 성과 그리고 만족도 등을 측정할 수 있는 국가차원의 표준화된 도구의 개발

및 권고를 통해 고등교육의 질을 제고함을 물로 대학교육의 책무성을 제고하는 진단도구로서 활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 마. 융합 교육 및 스마트 교육체제의 구축

- 기술융합 방식의 교육 및 스마트 교육은 앞으로 대학 교육의 중요 모습이 될 것임에 따라 이에 대응하기 위해 체제의 정비가 필요함.
 - 정보통신기술(IT), 바이오 기술(BT), 나노기술(NT)을 중심으로 급속한 기술변화가 일어나는 상황 속에서 기술융합(Technology convergence)라는 패러다임 전환에 부응하기 위한 교육이 활성화되고 있으며, 이러한 추이는 앞으로도 가속화될 전망이다.
 - 이에 학문분야별로 연구와 교육이 이루어졌던 현상을 탈피하여, 학제 간 통합교육 및 이슈 중심의 대학교육을 지향할 필요가 있음.
- 융·복합 학과, 학부, 대학원을 활성화하여야 함.
 - IT, NT, BT 분야를 중심으로 인지과학, 환경과학, 시스템이론, 사회과학, 인문학까지가 융·복합되어 교육되고 연구될 수 있는 학과와 학부 그리고 대학원이 활성화되어야 함.
 - 정부에서 지원하는 각종 재정지원 사업에서도 사업 심사 시 융·복합성 연구주제를 발굴하고 지원을 강화해야 할 것임.
 - 연구 사업에서 계획하고 있는 교육프로그램의 질과 체계성, 향후 학생들의 발전을 진단할 수 있는 평가기법 및 종단 데이터의 활용 계획, 학생, 박사 후 과정 연구원, 교수 등이 참여하는 멘토링 활성화 등이 필요함.
- 스마트 교육체제의 마련을 위해 경계 없는 캠퍼스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고등교육 과정을 이수할 수 있는 E-Teaching & Learning, U-Teaching & Learning 체제를 정비하여야 함.
 - Virtual University, Digital University가 활성화되어야 함.
 - 대학의 강의가 영상 제작되어 다양한 수요자들이 용이하게 접근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야 함.

□ 바. 역량중심의 대학교육 정착

- '대학교육 역량'이라는 용어가 소비자들에게 쉽게 이해되고 있어야 하므로, 이를 위해 대학교육을 통해 길러져야 할 일반 역량과 학문 분야별 역량이 규정되어 있고, 기술변화 상황 속에서 새로이 돌아보아야 할 역량에 대한 연구가 지속적으로 수행될 필요가 있음.
- 대학의 역량은 학생들이 교육기간 동안 대학의 증진된 부가가치(value added) 역량을 측정하는 것이 일반화되어야 함.
 - 대학은 그간의 명성에만 의존하는 관행, 또 학생들을 충원하기만 하면 된다는 인식에서 벗어나 어떻게 교육시켜 역량 있는 졸업생을 배출할 것인가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함.
- 대학교육의 역량을 측정하기 위한 표준화 도구와 국가차원 전국규모 조사 실시가 정착되어, 대학교육에 대한 책무성 점검 및 국제적인 대학교육 평가 패러다임 전환에 부응하여야 함.
 - 대학생의 학습과정 조사, 대학교육에 대한 만족도조사, 대학교육을 통한 역량 증진 및 성과 조사 및 분석이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함.
 - 대학은 교육의 과정 및 성과 평가에 참여하여 그 결과를 활용하여 교육역량을 증진시키는 자체 컨설팅 기능을 활성화해야 함.

□ 사. 취업-학습-복지가 통합된 고등교육 체제 구축

- 학령인구만을 대상으로 하는 대학교육에서 탈피하여, 재직자들의 계속교육 및 이직에 대응하여 직업 이동 또는 재취업을 위한 새로운 기술과 지식을 용이하게 습득할 수 있는 재교육 체제를 정비하여야 함.
 - 기술 혁신속도가 빨라지고 직업이동이 심화되면서 학습과 노동 간의 관계는 더욱 긴밀해지고 순차적인 관계가 아니라 순환적 관계로 전환되어 있으므로 일과 학습을 병행하는 체제의 구축이 필요함.
- 고등교육을 통한 순환교육체제가 구축되어야 함.
 - 학습에 의한 고용증진, 고용을 전제로 한 학습, 학습에 의한 복지의 개

선, 복지 보장에 의한 학습 참여, 고용증진에 의한 복지 개선 등이 순환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체제가 정비되어야 함.

○ 인생 제3기 대학(U3A: The University of The Third Age)의 활성화가 필요함.

- 고령화 사회의 전개에 따라 은퇴 후 인력들이 지식, 기술, 관심과 경험을 공유하고 서로의 학습을 돕는 목적의 고등교육이 정착되어야 함.
- 노인들의 역량과 잠재력 및 사회에 대한 가치를 세상에 알리고 평생학습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즐거움을 깨닫고 다양한 학습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교육체제가 정비될 필요가 있음.

○ 지역대학의 지역인재 육성 기능 활성화

- 지역대학은 지역산업과 연계된 교육을 통해 지역인재를 공급하는 기능을 담당하는 것으로 그 기능이 정착되어야 할 것임.
- 지자체 및 산업체와 계약학과 또는 산업체 위탁교육 실시를 강화하고 성인학습자의 재교육 및 직업능력 향상교육을 활성화하여야 함.
- 지자체는 성인들의 교육을 관·산·학 협력에 의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행·재정적인 지원을 강화하여 지역 대학교육에 대한 책무성을 제고하여야 함.

□ 아. 글로벌 수준에 부응하는 대학운영 체제 구축

○ 국경을 초월(cross-border)한 고등교육 서비스의 이동 상황 속에서, 고등인구의 유출과 유입은 앞으로도 더욱 활발하게 전개될 전망이다.

- 고등교육 시장은 더욱 경쟁적으로 운영될 전망이며, 대학교육의 수준과 내용은 물론 대학 운영을 위한 제 관행 등에 있어서의 글로벌화가 촉진될 전망이다.

○ 고등교육 재정투자가 최소한 GDP의 1% 수준으로 지속적으로 확보되도록 함으로써 국제적 수준의 고등교육 환경을 갖추어 나가야 함.

- 세계 100대 대학에 10개의 연구중심 대학이 포함되도록 함으로써 이 대학들의 지명도를 보고 유입되는 외국인 학생들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게 할 필요가 있음.

- 한국판 세계 대학경쟁력 평가 지표가 개발되고, 세계 대학을 대상으로 주기적인 평가를 실시해야 할 것임.
- IT, 경영학 등의 특정 분야에서 국제 경쟁력을 갖춘 글로벌 수준의 국내 대학의 출현을 지원해야 할 것이며, 아·태 지역 통합 고등교육체제 속에서 글로벌 인재 양성의 허브 역할을 우리나라가 담당하도록 해야 할 것임.

○ 외국 대학의 국내 유입 시 질 관리를 위한 표준 설정이 필요함.

- 국내외 노동시장 인력수급 및 인재양성 정책과 연계한 중장기 유학정책의 수립이 필요하고, 관련제도를 정비해야 함.

□ 자. 사회적 취약계층의 대한 고등기회 보장

○ 미래 사회에서는 고등교육이 복지적인 관점에서 학습 계층을 보호하는 정책들이 마련될 필요가 있음.

○ 앞으로 고령자 수 증가와 이민자 수 증가 등 사회구성원 간 삶의 질 및 정보 획득의 불균형 등으로 인한 취약계층이 많아지고 취약계층의 유형도 다양해질 전망임에 따라 이들을 위한 고등 교육기회 확대와 다양한 교육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제도가 정비가 시급함.

- 현재에도 저소득층을 위한 고등교육기회 확대가 주요 정책과제로 간주되어 다양한 유형의 학자금 지원제도가 시행되고 있지만, 제도 운영의 취지가 잘 살려지고 있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며, 지속적인 제도 보완작업이 이루어져야 할 것임.

○ 장기적인 측면에서는 취약계층에 대한 고등교육 기회제공의 형평성에서 더 나아가 성과 측면에서의 형평성 제고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임.

○ 사회취약계층의 지원정책도 생애 주기적 관점에서 설계될 필요가 있음.

차. 친환경 체제의 구축을 통한 환경위기 극복을 위한 체제 정비

- 미래 사회에서는 대학의 친환경 경영이 활성화될 필요가 있음.
 - 우선, 대학의 그린 캠퍼스화가 적극적으로 추진됨으로써 지역사회 공헌 및 에너지, 환경 분야에 선도적인 모델 캠퍼스를 구축하여야 함.
 - 대학들이 그린 경영시스템인 ISO-14001 인증 목표 : 환경경영체제를 평가하기 위한 국제적 표준으로서 조직을 평가하는 영역과 제품 및 공적을 분석하는 영역으로 대별됨.
 - 현재는 서울대 등 소수의 대학이 이 인증을 획득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모든 대학들이 그린 경영시스템에 동참하여 인증을 받도록 해야 할 것임.
- 녹색융합기술 전문 인력 양성 및 활용 체제를 활성화하여야 함.
 - 녹색성장의 과정에서는 IT, ET, BT 등 융합 형태의 녹색기술 인력이 요구됨에 따라 융합기술의 전략적 활용에 따른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인력 양성이 필요함.
 - 현재의 맞춤형 인력양성에서 수요 지향적 요소에 창의력이 결합된 형태의 인력양성이 요구됨.
 - 대학에서는 녹색인재를 유입하여 양성할 수 있도록 학제적 융합 녹색기술 교육과정을 개발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음.
- 글로벌 수준의 녹색 융합기술 관련 교육 및 연구역량 강화가 필요함.
 - 우리나라가 강점을 보유한 IT, BT, NT를 활용한 녹색 융합기술 개발을 위해 글로벌 수준의 창의적 녹색 융합기술 연구 및 교육의 통합 운영 모델인 교육 연구 거점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 녹색 융합기술 관련 교육과 연구의 통합 모델 운영방안에 대한 연구를 다각적으로 수행하고 우수한 박사급 인력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며, 연구지원 조직의 전문성을 강화하여야 함.
- 대학과 대학원에서는 자원의 고갈에 따른 대응책, 지구 온난화와 따른 환경에의 영향 등 범지구적 현상에 관한 주제들을 교육과정과 연구 주제로 설정함으로써 환경위기에 적절하게 대응하기 위한 전략을 모색하여야 할 것임.

V. 요약 및 제언

1. 요약

- 지식기반경제사회에서 고등교육은 국가 경제발전의 핵심 동력이 되는 만큼, 새 정부 수립을 위한 기초 작업 과정에 필수적으로 논의되어야 할 사안임.
-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학령인구의 감소, ICT와 정보과학기술의 발달, 국제화에 따른 학생 구성의 변화 등 고등교육의 외부 환경 변화가 사회 현실로 가깝게 다가온 만큼,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성이 높아졌음.
 - 2018년 이후 대학 입학 정원보다 학령인구 감소
 - 외국인 유학생의 빠른 유입과 국내 학생의 국제경험에 대한 요구 증가
 - 인구고령화에 따른 평생교육 기능 강화의 필요성 증대
 - ICT기술의 발달로 대학의 시공간적 제약 감소 등
- 향후 10년은 우리나라가 세계 지식 선도국으로 발돋움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시기로 변화에 대응할 고등교육 체제를 확립하고 미래를 준비하여 체계적으로 나아가야 할 중요한 시점임.
 - 이처럼 중요한 시기에 고등교육의 미래 발전방안에 관한 선행연구는 비교적 장기적인 예측을 바탕으로 메가트렌드를 제시하고 고등교육의 비전과 전략 그리고 추진과제를 열거하고 있음.
 - 그러나 선행연구가 현실적으로 활용되기 위해서는 정책적 관점에 집중하여 현재의 당면 과제를 해결하고, 중기적 정책방안과 연계, 설계할 필요가 높음.
 - 특히, 새 대통령과 새 정부는 정부출범 초기에 10년을 내다볼 수 있는 고등교육 정책의 비전과 목표, 그리고 방향을 설정하면서 동시에 미래

선도국으로서의 입지를 다지는 데 필요한 기반작업을 충실히 수행해야 할 것임.

○ 이에 본 연구는 상기한 바와 같이 중기 고등교육정책의 초석을 수립하기 위한 정책비전, 정책 목표, 추진전략 그리고 정책방안별로 우선적으로 추진해야할 10대 주요 과제를 도출, 제시하였음.

– **정책비전:** 세계적으로 경쟁력 있는 고등교육체제의 구축을 통한 글로벌 지식국가로의 발전

– **정책목표:** 고등교육의 기반 확립과 체질 개선을 통한 경쟁력 있는 고등교육체제의 구축

– **추진전략:**

1. 고등교육의 중요 목표가치인 수월성과 형평성의 조화로운 추구
2. 고등교육의 주요 기능인 교육과 연구의 균형 발전
3. 고등교육의 국제화와 지방화를 동시에 추구하는 세방화(glocalization) 실천
4. 고등교육 시스템의 유연화를 바탕으로 정책 추진의 효율성과 자율성 제고

– **정책방안:**

- 대학교육 연구의 내실화를 위한 기반 조성
- 지속가능한 발전을 가능하게 하는 고등교육의 핵심 역량 강화
- 제도의 유연화를 통한 맞춤형 대학교육체제 확립
- 지역 및 국가발전에 기여하는 추진동력의 확보

– **10대 과제와 각 과제별 세부 과제**

1. 고등교육의 교육력 강화

- 1-1. 학부교육 내실화를 통한 대학 교육력 강화
- 1-2. 직업교육 강화로 대학생 직무역량 제고
- 1-3. 대학원교육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연구교육 활성화
- 1-4. 교육프로그램 운영 유연화

- 1-5. 학습환경 및 생활환경 개선
2. 연구경쟁력 제고 및 연구중심대학 육성
 - 2-1. 대학원의 학문연구 경쟁력 강화
 - 2-2. 글로벌 수준의 연구중심대학 육성을 위한 재정지원 사업 재구조화
 - 2-3. 미래 유망분야 창의인재 양성 및 선제적 투자 강화
 - 2-4. 안전한 연구환경 조성 및 연구비 지원 확대
3. 대학입학제도 개선
 - 3-1. 학생 맞춤형 대입제도
 - 3-2. 입학사정관제 개선
 - 3-3. 대입전형 간소화를 통해 학생·학부모 부담 경감
4. 대학등록금의 합리적 책정 및 지원제도 개선
 - 4-1. 대학 등록금 적정화 유도
 - 4-2. 효율적인 재정지원 체제 구축
 - 4-3. ICL(든든학자금) 운용 개선 및 이자 부담 축소
 - 4-4. 대학 기부금 활성화 방안 마련
5. 대학 특성화를 통한 경쟁력 강화
 - 5-1. 대학특성화 촉진 및 지원
 - 5-2. 국공립대학 구조개혁 추진
 - 5-3. 산학협력을 통해 고등교육의 사회적 적합성 제고
 - 5-4. 전문대 교육특성화
6. 고등교육 질 보증 체제 구축
 - 6-1. 수요자 관점에서의 대학교육 질 관리
 - 6-2. 대학교육의 질 보장을 위한 관리 수행 주체의 설립
 - 6-3. 대학의 질 관리 노력 정도와 정부 지원 사업과의 연계 강화
7. 지역발전을 위한 지역대학 육성
 - 7-1. 지역 수요 기반 맞춤형 산학협력의 활성화
 - 7-2. 지역 기업-대학 순환형 교육체제 구축과 인력 수급 안정화

- 7-3. 지역 교육·문화 창달을 위한 지역 네트워크 허브 구축
- 8. 고등교육 재정책보 및 투자개선
 - 8-1. 고등교육 재정의 확충과 안정적인 확보를 위한 법적 제도 마련
 - 8-2. 대학재정 자원의 다각화 지원
 - 8-3. 대학 재정부운의 효율화 및 전문성 강화
- 9. 고등교육 국제화를 통한 국제경쟁력 제고
 - 9-1. 외국인 유학생 및 학자 유치를 위한 지원 서비스 강화
 - 9-2. 대학의 국제화 추진을 위한 질 제고 및 관리 체제 구축
 - 9-3. 글로벌 네트워크의 활성화와 교육협력사업의 효과 증진
- 10. 평생학습 시스템 구축
 - 10-1. 일과 학습이 병행 가능한 학위과정 및 학사 시스템
 - 10-2. 성인학습자의 학비 지원 및 세제 감면 혜택
 - 10-3. 평생학습 중심대학 확대 및 성인학습 지원 강화

○ 장기적인 관점에서 고등교육 미래 변화의 트렌드를 분석하여 대학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간추리면 다음과 같음.

- 핵심 지식센터로서 기능할 수 있는 체제의 구축
- 국제화 및 글로벌화에 부응하기 위한 체제의 정비
- 첨단 과학기술의 혁신에 부응하기 위한 교육과정 및 교육방법의 개선
- 대학의 역할과 기능 분화를 통한 경쟁력 제고
- 산업체·연구기관, 지역사회 등과 네트워크를 통한 지식생산 체제의 정비
- 구조개혁 및 대학의 질 관리 제도 구축, 생애를 통한 고등교육 체제 정비 등으로 요약됨

○ 장기적인 미래 변화에 대응하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추진해야 할 방안을 선행연구 및 전문가 자문을 통해 선정하여 다음과 같이 제시함.

1. 지속적인 구조조정의 추진
 - 학령인구 감소 대응 및 부실대학 퇴출을 통한 대학교육의 질 강화
2. 지식발전소로서의 대학기능 강화
 - 지식 생산 및 교육의 핵심 요체로서의 역할 강화
3. 대학 기능과 역할의 적절한 분화 및 대학의 브랜드화
 - 대학 간 차별을 통한 대학의 특성 강조
4. 시장기제에 의한 대학평가 방식의 정착
 - 수요자 중심의 대학 평가를 통한 대학의 경쟁력 제고
5. 융합교육 및 스마트 교육체제의 구축
 - 창조경제를 위한 융복합 학과 운영 및 스마트 교육 환경 지원
6. 역량중심의 대학교육 정착
 - 대학의 부가가치(value-added) 역량 강화 및 대학생의 역량 증대
7. 취업-학습-복지가 통합된 고등교육 체제 구축
 - 평생교육 기능을 강화하여 성인 학습자의 전문성 신장
8. 글로벌 수준에 부응하는 대학 운영 체제 구축
 - 세계적 수준의 대학 육성 및 국제화 지원 체제의 마련
9.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고등기회 보장
 - 고등교육의 접근성 확대 및 교육 형평성 제고를 위한 재정 지원
10. 친환경 체제의 구축으로 환경위기 극복을 위한 체제 정비
 - 친환경 교육시스템 및 환경 구축

2. 제언

가. 정부에 대한 제언

- 미래지향적 관점을 가지고 단기, 중기, 장기별로 체계적인 고등교육 계획을 수립하여야 할 것임.
 - 향후 10년간의 장기적인 대내외적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필요한

사안을 점검하고, 현안을 차례로 해결해 나가면서 동시에 미래를 준비해 두어야 할 것임.

- 단기-중기-장기적인 사안으로 정책을 구분하고 경쟁력 있는 고등교육 체제를 마련하여 지속적으로 유지 발전할 수 있는 견고한 체제를 마련해 두어야 할 것임.
- 단기 현안에 치중하여 문제점을 줄이는 미봉책을 마련하기 보다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해야 할 것임.

○ 대학 및 고등교육참여자(stakeholders)가 공감하고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정책지원과 제도의 마련이 중요함.

- 중장기적으로 새로운 고등교육 체계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정부 주도가 아닌 대학 자율에 의한 변화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자발적으로 변화를 창조할 수 있는 bottom-up 방식의 점진적인 정책 접근이 필요함.
- 고등교육의 변화는 대학뿐만 아니라 학생 및 학부모, 기업, 지자체, 공공·민간 기업 등 다양한 참여자의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므로 이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반영할 수 있는 정책 방안을 구상하고 추진해야 할 것임.
- 대학 내부자뿐만 아니라 학생 및 학부모, 지역사회, 산업계가 함께 대학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발판을 마련해 주어야 할 것임.

○ 아울러, 다양한 고등교육 참여자의 수요와 선택에 의한 대학 경쟁체제를 확립해야 할 것임.

- 정부주도가 아닌 대학 수요자의 선택에 의한 경쟁 시스템이 작동할 수 있도록 고등교육 체제를 마련하여 정부와 대학 간 마찰을 줄이면서도 대학 구조조정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 교육수요자 의견을 반영한 대학 평가제도의 확립 및 평가 시행, 그리고 그 과정과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여야 할 것임.

- 대학 간 경쟁 유도를 위해서는 학생, 학부모 및 기업 등에 대학의 상세한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여 교육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권을 보장하여야 할 것임.
- 정책 추진을 위해 소요되는 재정자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해야 할 것임.
- 중장기적으로 세운 정책 수행을 위해서는 고등교육 재정의 안정적인 확보가 가장 중요함.
 - 일관적인 정책 추진을 통해 대학이 스스로 변화해 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으로 재원을 마련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두어야 할 것임.
 - 고등교육에 대한 공공의 투자를 OECD 수준으로 높이고, 고등교육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해야 할 것임.
 - 동시에, 사회적 취약계층의 고등교육 기회 보장을 위한 재원도 마련하여 고등교육이 지닌 공공성을 확보하고 교육기회의 형평성을 보장해야 할 것임.

나. 대학에 대한 제언

- 고등교육 체제 변화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미래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려는 노력이 필요함.
- 대학은 외부 환경변화에 느리게 대응하고 있다는 비판적인 시각도 존재하나, 국가 경쟁력 확보를 위한 미래 지향적인 개별 대학의 교육 및 연구 체제 구축이 필요함.
 - 대학이 처한 대내외적 상황을 분석하고, 대학 발전 방향 및 전략 마련이 필요함.
 - 정부의 재정지원 사업에 따라 단기적으로 대학을 운영하기보다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대학의 특성에 맞는 발전방안을 수립하고 그에 따라 운

영할 필요가 있음.

- 대학이 각자의 특성화 분야를 설정하고 선택과 집중을 통하여 대학의 고유 브랜드화를 추진하려는 노력이 필요함.
 - 글로벌(global) 패러다임과 전통적 지역(local) 패러다임이 공존하는 오늘날과 같은 글로벌 시대에는 지역이 세계와 직접 접촉하기에 규모의 경제화와 지역 특성화가 동시에 추진되어야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음.
 - 타 대학과 차별화된 교육 및 연구의 고유 브랜드를 가질 수 있도록 특성화를 추진하여야 함.
 - 특성화를 통하여 대학 내·외부 자원의 선택과 집중화를 유도하여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함.

- 빠른 외부 환경의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대학 내부의 시스템을 정비하여야 함.
 - 산업현장의 고도화 및 변화를 반영하고 평생학습사회 실현을 위한 다양한 교육과정 운영을 검토해야 할 것임.
 - 글로벌화의 가속화로 국내외 교육 수요를 동시에 반영할 필요가 있음.
 - 고령자, 직장인, 외국인 등 대학 내부의 인적 구성 변화에 대응한 교육 서비스 행정체제 마련이 필요함.

- 대학의 질 제고를 위한 대학 스스로의 변화 노력이 필요함.
 - 대학은 자율성이 매우 높은 조직으로 대학구성원 모두의 자발적인 작업 노력이 교육의 질 제고의 시작임을 상기해야 할 것임.
 - 대학 내부에 질 관리 시스템을 적극적으로 가동하여 질 보장을 위해 노력하여야 할 것임.
 - 교원평가, 학생평가 등의 각종 대학 내부 평가가 교육의 질 제고로 이어질 수 있도록 체제를 강화하여야 할 것임.

- 대학 운영의 효율성을 강화하고 재정 활용도를 제고하여야 함.
 - 대학 스스로 자체 평가를 강화하여 대학교육 운영의 질 제고, 운용 조직 역량 강화 및 인력의 전문성 제고를 꾀하여야 함.
 - 대학 내 예산 조직의 효율성 및 재정 운용 전문 인력의 활용이 필요함.
 - 대학 내 구조조정을 통한 예산 절감 및 부정사용 방지 시스템 구축이 필요함.
 - 외부 감사제도를 활성화하여 대학재정 운영 투명성을 제고하고 내실화하여야 함.

- 대학의 사회 공헌(service) 및 기여를 강화하여야 함.
 - 대학을 중심으로 파트너 기업, 지자체, 연구 기관의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지역 인재를 육성하여야 함.
 - 대학이 지역 교육·문화의 허브로써의 기능을 담당하도록 하여야 함.

참 고 문 헌

- 고용노동부(2012). 2011~2020 중장기 인력 수급전망과 정책과제.
- 국회입법조사처(2010). 지표로 보는 오늘의 한국. 국회입법 조사처.
- 김병주 외(2011). 교육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고등교육 체제 개편 방안. 국가 교육 과학기술 자문회의 자문조사 연구 2011-4.
- 김승택(2009). 녹색성장을 통한 일자리창출 촉진 방안. 한국노동연구원.
- 김철희 외(2009).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고등교육기관 인력수급체계 개선 연구. 교육과학기술부 정책연구 보고서.
- 김한솔 · 윤호영 · 노광현(2010). 그린 캠퍼스 조성을 위한 전사적 관점에서의 대학 운영 전략에 관한 연구. 대한산업공학회 추계학술대회.
- 미국국가안보정보원(2008). CIA.FBI.NIC 미 정보기관의 글로벌 트렌드 2025. 예 문.
- 박영숙 · 제롬글렌 · 테드 고든(2012). 미리가본 2018년 유엔미래보고서. 서울: 교 보문고.
- 박정수 외(2009).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고등교육 질 제고. 한국교육개발원 연구보고 RR 2009-38.
- 백성준 외(2011). 전문기술인력 양성 및 활용의 선진화 방안.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신동원(2010). ESD의 잠재력과 활용성. 지속가능발전교육(ESD) 콜로кви엄 시리즈. 유네스코 위원회 · 한국교육개발원.
- 유의선 외(2010). 미래 메가트렌드와 저탄소 사회 패러다임의 상호작용. 과학기술 정책연구원.
- 유현숙 외(1999) 21세기 고등교육변화와 전망. 한국교육개발원 연구보고서.
- 유현숙 (2000). 지식기반사회에 부응하는 고등교육 체제, 교육행정학연구, Vol. 18. No. 4, pp. 249-273.
- 유현숙 외(2005). 고등교육 개혁 국제동향 분석연구. 한국교육개발원 연구보고서.
- (2009). 고등교육 경쟁력 제고를 위한 대학 구조조정 방안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현안 보고 OR 2009-01.
- (2011). 고등교육 미래비전 2040 수립을 위한 정책연구, 한국교육개발원 수탁연구 보고 CR 2011-24.

- 이인식(2008). 지식의 대융합 - 인문학과 과학기술은 어떻게 만나는가. 고즈원.
- 이정모(2003). 뇌기반 학습과학 패러다임 :과학교육과 과학기술 인력 육성의 혁신
틀. 뇌기반 학습과학 심포지움.
- 이정미 외(2011). 고등교육 재정 확충 및 효율적 운영방안 연구. 서울: 한국교육
개발원.
- 이호영 외(2006). 네트워크 사회에서의 문화산업 경쟁력 제고 방안. 21세기 한국
메가트렌드 시리즈 IV 06-04. 정보통신정책연구원.
- 전상인 외(2008). 한국미래학회 “미래를 묻는다” - 한국 2030. 에코리브르.
- 정보화추진위원회(2008). 국가정보화 기본계획.
- 제롬글렌(2008). 창조적 인재와 글로벌 협력. Global HR Forum 자료집. 교육과학
기술부 외.
- 조용수(2009). 해외 미래예측기관들이 보는 10년 후 세상. LG Business Insight. LG
경제연구소.
- 채재은 외(2009). 고등교육 장기발전방안 수립을 위한 정책연구. 교육과학기술부
정책연구 보고서.
- 통계청(2011). 2010 한국의 사회지표. 보도자료.
- 통계청(2011). 장래인구추계:2010년~2060년. <http://kostat.go.kr>
- 통계청(2012). 유학생 현황. e-나라지표. [http://www.index.go.kr/egams/stts/jsp/potal/
stts/PO_STTS_IdxMain.jsp?idx_cd=1534&bbs=INDEX_001](http://www.index.go.kr/egams/stts/jsp/potal/stts/PO_STTS_IdxMain.jsp?idx_cd=1534&bbs=INDEX_001)
- 한국교육개발원(2010). 2010년 간추린 교육통계.
- 한국교육개발원 (2012). 2012년 교육기본통계.
- 황주성 외(2005). 22세기 한국 메가트렌드 III - IT 기반 미래국가 발전전략 연구
총괄보고서. 정보통신정책연구원.
- OECD(2008). Four Future Scenarios for Higher Education, Documents for the OECD
International Conference, Higher Education to 2030.
- OECD(2011). Education at a Glance 2011. Paris: OECD.
- OECD(2012). Education at a Glance 2012. Paris: OECD.
- KEDI (2012). 교육통계DB. 외국인 유학생 수 및 구성 비율(유형별, 연도별)
- (사) 유엔미래포럼(<http://unfuture.org>).

<부록 1>

중장기 고등교육정책 방안에 관한 연구 자문회의

2012. 12. 07(금), 10:30~ 12:00

참석자 : 신현석, 반상진, 주휘정, 고장완, 최정윤, 이석열

□ 의견조사서 관련 의견(문항별)

◆ 1번 문항

- 졸업생 수 감소와 국제화로 인한 개방에 대한 대비 필요(이석열)
- 노동시장의 흐름이 오래된 자본주의 등에 의한 고등교육 확장 등으로 대학 졸업자(신규 노동자) 취업이 어려운 점은 세계적인 현상이자 문제. 이 때문에 고등교육에 대한 비판과 요구가 높아질 것. 이 해결이 중요(최정윤)
- 취업을 제고가 대학 책무라 해도 정책적 도구로 사용되는 것은 반대. 고객 수요의 수용이 어렵다는 점이 문제임. 이 해결이 차기 정부의 과제(이석열)
- 국제화 경우 정책들이 선언적이나 구체적 내용이 부재. 질 관리는 없이 그저 유학생 끌어들이기에만 급급하여 실질적 정책 추진이 필요(고장완)
- (의견 수렴·정리) 지방대 육성, 충원, 존립 위기, 정원관리, 구조조정 등이 충돌되는 지향점일 수 있음. 지금의 정책으로는 지방대학의 몰살 위기임.
구조조정의 틀을 어떻게 설정하느냐가 필요 차기 정부는 정부역할을 강화하여 노동시장 체질을 변화방안의 논의 틀 구성(반상진)
- 노동시장은 교육에 요구를 하는데, 교육은 노동시장에 왜 요구하지 않는가? 기업이 연구에 얼마나 투자하였는가. 그러한 분석과 논리가 부족함. 분담구조만 이야기 할뿐 구체적 수치가 부재(고장완)
- 신규사원 연수에 드는 기업예산 1조원 대학에 투자 요구(보고서 쓸 것)(반

상진)

- 수요를 구체화 할 수 있는 기구 필요(대학 자체인프라로는 불가). 기업교육 방식도 체계적이지 않아 인재개발원에서 하는 교육이 업무에 적합한 구체적 내용인가 연구 필요. 대학이 기업의 교육변화 요구를 무조건 따라가는 것은 어려움. 연계의 연결고리를 만들어 주는 역할을 정부가 해야(신현석)
- 전공과 일자리의 미스매칭은 선진국도 그러한 상황. 직무교육은 조직이 해야 하며, 미스매치 문제로 교육의 개편을 요구하는 것은 문제(보고서에 언급)(반상진)

◆ 2번 문항

- 2번 문항부터는 설문 타당성에 대한 논의 진행
- 우선순위는 맞고, 중요도 거꾸로 봄(이석열, 최정윤)-보고서 수정필요
- 효율성, 책무성 강화가 분리된 것이 이해는 가지만 정보공시, 인증평가 등이 질보장과 함께 다니는 용어라 틀이 어색함(최정윤)
- 노동시장 변화 등을 위한 산학협력, 전문대학 발전 등의 정책이 새롭지는 않으나 차기정부가 내용 발전시킬 가치와 필요가 충분함(최정윤)
- 대학 구조조정은 필요하나, 절대적으로 15% 줄여야 한다거나 상대평가(지표만 가지고 하는 물리적 평가)등은 개선이 필요(최정윤)
- 설문이 다소 혼란. 내용이 좀 상이함. 한 가치 내에 여러 정책이 들어있다 보니(평생정책≠국제화). 질 개혁은 구조조정, 인증평가 다 포함되어있는데 항목이 나뉘어 있어 우선순위 선정에 어려움(고장완)
- 정책영역과 하부영역이 매칭의 이해가 어려워 선정에 어려움. 정책의 연결, 정리가 중요하고 어려운 일일 듯함.(반상진)
- 평생교육과 국제화는 유연성 강화라는 가치 안에 들어간 정책임은 이해가지만, 중요도는 분명히 상충됨. 가치와 정책영역은 따로 조사하는 것이 좋음(최정윤)
- 2, 3번 문항을 분리하자(반상진)

◆ 3번 문항

- 추진시기를 2년 단위로 나눈 것이 이해 안 되며 지속 추진이 필요(고장완)
- 영역의 범주화가 어려우므로 관련정책을 나열하여 중요도, 적절성 여부 정책별로 직접 물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음(반상진)
- 중요한 것은 묶지 말고 개별 정책에 대한 판단을 하게하고, 새롭게 요구되는 것은 따로 묻게 하는 방식(신현석)
- 관련 정책 나열하여 우선순위, 추진되는 정책에 대한 적절성 질문(반상진)
- 정책 키워드, 방향성을 찾아야 하므로 정책 나열 보다는 키워드 제시하고, 추진사업명을 담음(최정윤)

예) 국제화(x) - 대학 간 국제협력 활성화 또는 국제협력 활성화를 위한 질 관리, 외국인 학생에 대한 질 관리 등 영역 하에 3~4가지 영역별로 구분.

- 정책 범위가 다르므로, 델파이에서 하는 것은 맞지 않지만 시행사업에 대한 적절성 여부를 물어보고, 중요성 여부는 카테고리를 크게(반상진)

(예) 1) mb정책 고등교육 정책 리스트 - 적절성

2) 범주화 하여 중요성 여부 조사 - 우선순위조사 필요

- 방향에 대한 의견, MB정부의 구체적(교육역량강화, 산학협력, 입학사정관제, 질 보장 인증제 등)의 적절성 여부 조사, 중요도(우선순위) 조사, 정책영역 개념설정, 생각한 과제조사 - 4가지 물어보는 것 제안(반상진)
- 조사 후 취합, 정리가 어려울 듯 하니 기계적 취합이 필요하다면 폐쇄적 조사로 하는 것이 적절(최정윤)
- 수행 과제 중 관련 정리된 것 자료 보내줄 것임. 설문지와 결과를 참고할 것. 적절성, 중요도 구분된 교수대상 설문자료임. 정책 찬반, 목표 조사. 확대 정책 5개, 축소되어야 할 정책 5개 등 조사(이석열)
- 중요성, 적절성은 위의 자료 인용, 유연성 등 가치 우선순위 조사추진(반상진)

◆ 10대 과제 제안 요청(주최정)

- 3~9번 과제제시를 모두 담아 제시(최정운)
- 5번 이외에는 장기과제. 간단한 것, 급한 것 위주로 우선순위 작성함(고장완)
 - ※ 인증제도 강화 및 정부에 휘둘리지 않을 재정 지원사업 등임
- 10대 과제 요청 말고, 중복되는 10대 과제를 뽑아라(반상진)
- 중요도를 보고 중요도가 높은 것 순으로 10대 과제 도출(고장완)
- 각 조사를 별도로 할지, 영역별로 하여 뽑아낼지 신 교수님과 의논할 것(반상진)

<부록 2>

『중장기 고등교육정책 방안』 마련을 위한 전문가 의견 조사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가운데에도 본 전문가 의견조사에 참여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려대 고등교육정책연구소의 ‘중장기 고등교육정책 방안’에 관한 연구의 일환으로 실시되는 본 조사는 차기정부의 고등교육정책에서 추진되어야 할 정책과제를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귀하의 의견은 연구자료로만 활용할 것을 약속드리오니, 모든 질문에 대해 본인의 의견을 솔직하고 성의 있게 답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적극적인 협조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귀하의 앞날에 무궁한 발전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2년 12월

고려대학교 고등교육정책연구소

※ 작성하신 조사지는 **12월 14일(금)**까지 이메일(helloming@hanmail.net)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연구책임자: 신현석 교수(고려대)

※ 조사 문의처: 고등교육정책연구소, 02-3290-2985

1. MB 정부에서 추진해 온 고등교육 정책 과제를 다음 표와 같이 제시하였습니다.

(1) 각 과제별 성과를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2) 향후 폐지, 축소, 유지, 확대의 정도를 표시하여 주시고, 이유를 서술해 주십시오.

번호	내 용	(1) 성과					(2) 향후 계속 추진의 필요성				
		1 매우 못함	2 못함	3 보통	4 잘함	5 매우 잘함	1 매우 약함	2 약함	3 보통	4 강함	5 매우 강함
1	국립대 법인화										
2	국립대 총장 직선제 폐지										
3	대학구조개혁										
4	대학기관 평가제										
5	대학교육역량강화사업										
6	세계 수준의 연구중심대학 육성 사업(WCU)										
7	학부교육 선진화 선도대학 지원 사업(ACE)										
8	두뇌한국21(BK21)										
9	박사 펠로우										
10	입학사정관제										
11	기회균등 선발제										
12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제도 (ICL)										
13	대학 등록금 인하 정책										
14	산학협력 선도대학 육성 사업 (LINC)										
15	캠퍼스 아시아(CAMPUS ASIA)										
16	외국인 유학생 유치·관리역량 인증대학										
17	해외진출 지원										
18	고등교육 재정교부금										
19	대학 자체 평가										
20	대학정보공시제										

2. 차기 정부에서 상기한 정책 과제 이외에 추진해야 할 정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번 호	내 용
1	
2	
3	
4	
5	

3. 위 2번 문항의 응답내용을 포함하여, 차기 정부에서 추진해야 할 과제를 우선순위별로 10가지를 선정하시고, 그 이유는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서술해 주십시오.

우선 순위	내 용	이 유
1		
2		
3		
4		
5		
6		
7		
8		
9		
10		

RR 2013-03

중장기 고등교육정책 방안 연구

발 행 2013년 8월
발행인 신 현 석
발행처 고등교육정책연구소
주 소 (136-701) 서울시 성북구 안암동 5가 1 고려대학교
사범대학 본관 213호
전화 : (02) 3290-2985
팩스 : (02) 3290-5325
<http://hepri.korea.ac.kr>
인쇄처 제일문화사 (02) 921-7221

※ 보고서 내용의 무단 복제를 금함